

제426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30일(월)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5.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6.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7.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8.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9.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10.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11.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12.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1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1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15.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6.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17.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8.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19.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20.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21.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22.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23.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24.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25.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26.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3

○ 간사(이소영·박형수) 인사	3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7
5.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7
6.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7
7.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7
8.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7
9.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7
10.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7
11.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7
12.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7
1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7
1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7
15.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7
16.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7
17.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7
18.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7
19.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7
20.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7
21.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7
22.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7
23.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7
24.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7
25.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7
26.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7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	18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8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19
5.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19
6.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19
7.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19
8.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19
9.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19
10.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19
11.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19
12.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19
1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19
1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19
15.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9

16.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19
17.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9
18.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19
19.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19
20.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19
21.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19
22.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19
23.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19
24.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19
25.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19
26.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19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위원회 운영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하여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한병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소영 위원님을,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 위원님을 각각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두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이소영·박형수) 인사

(10시03분)

○위원장 한병도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인사하시고 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인사말씀도 전해요?

○박형수 위원 예.

○위원장 한병도 먼저 인사말씀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는 거니까요 인사말씀 끝나고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민생이 너무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를 맡게 돼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 집니다. 700조 원의 국가예산이 적재적소로 흘러들어서 목마른 민생을 축축하게 적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박형수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인사말씀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그러면 인사말씀 겸 의사진행발언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과 일방적인 일정 공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을 일방 선출했습니다.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로요.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갖는 것은 오랜 국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더욱더 잘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행정권과 입법권 다 가지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한병도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바로 한 일이 뭐니까?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일정 공지했습니다. 일정 공지하면서 오늘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 내일은 소위를 하겠다, 7월 3일은 전체 의결을 하겠다, 마음대로 일정을 다 정합니다.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

이 일정 공지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원장님한테 이미 유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일단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결위 질의에서 종합질의를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는 방역수칙상 여러 사람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은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실시한 것입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종합질의를 이틀 동안 실시했습니다.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조 원이 넘는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종합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질의시간도 일방적으로 예결위원장이 10분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종합질의 10분으로 한 경우 없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15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질의를 못 하게 하면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7월 4일까지 처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예결위원장이 거기에 들러리 서는 겁니까?

지난번 시정연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게도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얘기를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위원장입니다.

(「발언시간 더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병도 마이크 더 주세요. 마이크 켜 드리세요.

○박형수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야당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거짓말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입니다.

예산을 심의할 시간이 없는데, 예산을 살펴볼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말만 의견 개진하라고 그리고 실제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똑딱 해치우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작전입니까?

저는 오늘 일정은 전면 중단하고 지금 이 시간부터 정회를 하고 여야 간사 간에 일정을 협의하고, 시간까지 협의를 해서 그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관철되지 않는다면,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다시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야당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종합정책질의……

○박형수 위원 정회를 안 하면 여기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일단 의사진행발언은 듣고 가지지요. 본인 주장만 하시고 상대 주장은 듣지 않는 게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위원장 한병도 의사진행발언, 이소영 위원님 계속 해 주세요.

○이소영 위원 그게 지금 예결위를 제대로 진행하자고 하는 태도입니까? 본인들 주장만 하고 상대 주장은 듣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정책질의 하루 하면 안 되고 이틀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박형수 위원 우리는 정회하지 않으면……

○이소영 위원 시간 끌기 외의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박형수 위원 시간을 왜 끌어요, 우리가?

○이소영 위원 지난 1차 추경 때 정책질의 이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틀이 주어지면 누구한테 무슨 질의 하시겠습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보이십니까? 기관장이 불출석한 기관이 지금 적지 않고 이제 새 장관 임명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어제 줄줄이 불출석사유서에 도장 찍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출석한 분들도 그중 절반은 이제 곧 임기 끝나고 떠나실 분들이고요.

이번 추경안 어떻게 집행할 건지 확인하고 묻는 거 얼마든지 필요하지만 책임 있게 답

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님들도 책임 있는 결정이나 답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틀 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민생이 벼랑 끝이라서 정권 바뀌고 장관도 임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 하는 특수상황 아닙니까? 민생 이렇게 망친 게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적반하장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정책질의 이틀이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질의가 아니라 그냥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서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갑니다. 어제 또 저희 지역의 식당 사장님 한 분이 다가오셔서 소비쿠폰 언제 지급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몇 달째 손님이 없어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비수도권은 더 심각할 겁니다. 그분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반드시 국회 통과시켜서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지금 퇴장은 하셨지만 부디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정부의 조치를 몇 년이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지금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계시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야당 위원님들 주장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소영 간사님께서 이제 간사에 선임되신 만큼, 양당 간사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간사님, 야당과 협의를 좀, 의사일정 관련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심사 하루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아니, 18년까지 다 하루 진행을 했고요. 2020년 제1회·2회·3회·4회 모든 추경 심사를 하루 만에 끝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만 진행했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구요.

그리고 지금 예산 독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임위 법사위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러니다. 법사위는 이미 전·후반기 여야가 합의된 사항입니다. 상임위 협상을 하려면 내년에 하셔야지요. 왜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십니까? 지금 아무튼 양당 간 협상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는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내외 경제 여건, 특히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생업의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절규하고 계십니다. 30년을 버틴 마트도, 40년을 운영한 목욕탕도, 50년 넘는 동네 약국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기를 떠받치던 건설경기도 IMF 이후에 최악의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폐업한 건설사만 200곳이 넘으며 일용직 노동자는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정산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더 혹독한 시간을 감내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치가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

서는 안 됩니다.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의 마중물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경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추경안 심사 일정을 긴급하게 편성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민생 현장을 지키는 국민은 하루하루 숨이 막히고 당장 오늘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국회가 절차 타령하는 것이 너무 한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있는 한 예결위의 시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민생의 절박함에 응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조속히 회의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빠듯한 심사 일정이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우리 위원회 심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5.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6.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7.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8.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9.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10.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11.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12.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1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1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15.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6.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17.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8.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19.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20.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21.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22.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23.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24.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25.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26.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10시14분)

○위원장 한병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 후 내일 오후에 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면질의 접수는 오늘 회의 산회 시 마감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해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전에 각 의원실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22개 기금 외에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체회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께서 방송으로 보시기 때문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들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와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와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의 추경안 등의 심사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을 듣고 각 부처 소관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주호 국무총리직무대행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각 부처 소관별 제안설명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형일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존경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제1차관 이형일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예결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며 민생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2분기 연속 감소하고 올해 1분기 실질소비지출은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건설 투자도 네 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1분기에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 -21%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4분기 연속 0% 내외의 성장이 이어지며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물경제의 위축 속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은 경제지표로는 이루 다 나타낼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제는 연체와 폐업 급증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경기부진 심화의 그늘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짙게 드리워져 금년 1분기에 1

분위 가구 소득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제1회 추경을 마련하여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지원, 민생안정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왔으나 급격히 악화되는 경제와 민생 여건을 감안할 때 필수사업 위주로 반영한 제1회 추경만으로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지금의 대내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출범 당일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신속하게 가동하여 새 정부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의 세출을 확대하고 세수 부족 전망을 바탕으로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안의 재원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 집행 부진 사업 발굴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등을 통해 5조 5000억 원을 확보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부족분 19조 8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각 부문별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먼저 소득별로 일인당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합니다. 단기간 내 소비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15만~40만 원을 지원한 후에 2차로 소득 선별 작업을 거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에 더하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단계적·맞춤형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과 지방의 소비 여력을 보다 두텁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역대 최대 수준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비 지원율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확대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상향하겠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도 780만 장 발행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자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철도·항만 등 SOC와 국립대학, 병영시설 등 국공립 시설 공사에 약 2조 원을 투자하여 건설 투자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 선투자 리츠, 특별보증,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 매입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PF 시장에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도 공급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AI·문화 콘텐츠 관련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는 등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합니다. 또한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 확산을 위해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 전방위에 AI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에 버팀목이 되어 드리기 위해 5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채주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장

기 연체 채권 16조 원을 매입·소각하여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등 금융 취약차주 113만 명이 새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도 사업 영위기간 요건을 기존 2024년 11월에서 2025년 6월까지 연장하고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하여 10만 명의 소상공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7~15년간의 분할상환과 1%p의 이자 감면 혜택도 지원합니다.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도 병행합니다. 실업자가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19만 명 확대한 약 180만 명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특히 고용 불황이 심각한 건설업 실업자 1만 명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훈련수당 2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에어컨·선풍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50인 미만 사업장 약 5000개소에 추가로 도입하여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중위소득 75% 미만의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 비용 긴급지원도 2만 7000건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세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금년 세입예산 편성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입경정을 통해 금년 계획된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안 편성으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22조 7394억 원을 발행하여 일반회계 예탁금 22조 5907억 원, 타 기금 예탁금 509억 원 등의 지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복권기금은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추가 구축 사업비를 26억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의 실물경제와 민생은 균열이 생긴 배와 같습니다.

미국 관세 충격, 이스라엘-이란 분쟁과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 소비심리 위축 등 차가운 바닷물이 그 균열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배가 나아가야 될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는 점검하여 제시할 예정이지만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릴 마중물을 통해 그 균열을 우선적으로 메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재정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국회에 금번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이하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신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 부분은 생략하고 11페이지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의 편성 요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된 내수부진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제고,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 이번 추경안에 다수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매칭 지방비 적기 확보를 위한 조속한 사전 협의를 추진하고, 지방재정 여력 등을 고려하여 다층화된 국비지원을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중단입니다.

신속한 민생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총량 변동 및 재정건전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 10.4조 원이 감소하였고, 총지출은 14.9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지출은 증가하고 총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는 제1회 추경에 비해 적자 폭이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제1회 추경 대비 19.8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총수입의 기반 확대를 위해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 등 비과세·감면 조치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세입 여건의 악화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등으로 인해 향후 빠른 증가가 전망되므로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입니다.

세입경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은 국세수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국세수입 예산을 -10.3조 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5개 세목이 감액되었고 상속·

증여세 1개 세목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입경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감액하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에 따라 교부하도록 편성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률의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는 않으나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어서 30페이지입니다.

추경안의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총 30.5조 원의 필요재원을 국채 발행, 지출 구조조정,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축소,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채 발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채 발행 22.7조 원과 외평채 3조 원 축소를 상계하여 추가 국채 발행 규모를 19.8조 원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3조 원의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가채무의 질적 저하가 발생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대상 사업 및 유사·연관 사업 중 일부는 그동안의 추진경과 및 집행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예산 규모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37페이지입니다.

유형별 검토입니다.

먼저 경기진작 관련입니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제1회 추경 대비 15.2조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소비진작 및 경영안정 등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건전성 및 인플레이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전 준비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함에도 증액 편성된 사업은 추가적인 예산 수요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행행렬이 저조함에도 증액 편성된 경우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민생안정 관련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제1회 추경 대비 5조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장기연체 채무 탕감 및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활 능력 및 재기 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4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일부 사업은 지방비 부담, 미흡한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광주 동구남구읍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광주 동구남구읍 안도걸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경제 침체의 지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라,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라 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 경제·재정 운영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경제 상황입니까?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명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밖으로 지금 산업·기술 패권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의 산업적 입지를 우리가 지키고 키워 나가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저출산, 지방소멸, 우리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타개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이, 경제운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지요.

정부의 책임, 무한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자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관찰자나 조력자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위기 해결사, 혁신기업가적 역할로 가야 됩니다.

재정정책 기조 변해야 됩니다. 국가 혁신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전략적 재정으로 바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매년 재정적자를 일정 기준에 맞추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중기적 시각에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재정적자를 좀 늘리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재정적자를 크게 줄이는 경기변동 주기별로 사이클을 전체로 보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기근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단기 경기변동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그리고 경제의 선순환 이 모두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지난 정부는 매년 재정적자를 GDP의 3% 미만으로 하겠다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두고 재정을 운용했습니다. 실제 달성이 됐습니까? 4년 동안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정확한 현실 진단 그리고 실용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기조로 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새 정부의 이번 추경입니다. 이런 추경에 대해서 지금 일부 비판이 있지요. 특히 야당에서 비판을 합니다. 재정 포퓰리즘이다, 당선 사례금이다, 재정적자가 너무 크게 는다, 물가·국채 다 걱정이 된 다라고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재정 포퓰리즘입니까? 지금 우리가 부잣집 아들 돌잔치, 호화판 잔치를 하자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 조치입니다.

지난 4분기 동안 우리 경제성장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경제성장률 0%대입니다, 지금 전망치들이. 잘해야 OECD에서 1%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체감 지표들은 더욱더 지금 심각하지요. 지난 4년간 소비 증가율, 4년 전에 비해서 4분의 1 토막, 고용 증가율 반 토막, 투자는 지금 -3.8%, 역대급으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1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9%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빈혈 상태에 빠진 내수경제에 수혈을 하자는 이 조치를 가지고 당선 사례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번 추경은 철저하게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굳이 당선 사례금의 사례가 있다면 22년도에 윤 정부 출범하면서 62조의 역대급 슈퍼 추경을 했지요.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전에 4.7% 급반등했지요. 그리고 22년에 2.6% 성장을 했어요. 그때 역대급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당선 사례금이 지 금처럼 죽어 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추경을 당선 사례나 재정 포퓰리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이번 추경 규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경제위기 시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유사한 경우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당시 경제성장률 0.8%, 지금 한국은행이 금년 도 경제성장률을 0.8%로 보고 있지요. 그 당시의 추경 규모가 정부 재정 대비 10%에 달 했습니다. 이번 추경, 지난 윤 정부에서 했던 1회·2회 다 합쳐서 그리고 이번에 세입 추 경까지 합쳐서 44조로 봅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 추경 비율은 6.6%입니

다. 세입 추정 빼 버리면 4.9%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이 규모가 적정 하나에 대해서는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최소 규모로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비자물가를 걱정합니다. 지금 물가 1%대로 안정되고 있지요, 이형일 차관님?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지난달에 1.9% 나왔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이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을 예측했는데 금년에는 시차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거다, 내년에 한 0.1%p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면 소비자물가 영향은 사실상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기본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내수부진 상황에서는 물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 측면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유가지요. 유가는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한 7~8% 됩시다만 실제적 영향력을 보면 한 40% 정도 차지해요. 이러한 유가가 지금 안정이 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현재는 이란·이스라엘 이슈가 좀 잠잠해져서, 돌아올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모니터링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안정돼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국채를 이번에 19.8조 추가 발행하게 되겠지요. 우리 국채시장의 수급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거든요. 6월 현재까지 국고채,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한 24조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국채시장에서 보면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또 달러 약세 아닙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원화 국채에 대한 국제적 수요도 저는 견조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시데요. 국채 금리 역시 추경 효과가 이미 금리에 반영이 돼 있지요. 그리고 추경이 발표된 당일 날 국채는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추세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걱정도 크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추경이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라든가 부정적 영향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장이지요. 그렇지만 이번 추경으로 해서 성장효과가 0.1%p 제고하는 것에 지금 다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1년 반이……

○안도걸 위원 그래서 결국에 이번 추경은 겨우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 턱걸이시키는

그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타의 경기부양 조치가 병행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추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이 가뭄으로 짹짹 갈라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농부의 심정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빨리 추경의 단비를 내려서 민생에 새싹이 돋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자리를 비우신 국힘, 야당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추경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세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1차관님, 조세부담률 금년 얼마로 예정이 됩니까? 17.6%, 7년 전 수준으로 퇴행했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 금년까지 세수결손 지금 얼마로 추계가 되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지난 정부 때는 좀 많았고요. 올해는 10조 정도의 세수결손을……

○안도결 위원 그렇지요. 3개년을 합치면 97.5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0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금년 세수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세수가 한 10.8조 정도 덜 들어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10.3조……

○안도결 위원 예, 10.3조. 그런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 이 규모가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세목 실적이나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조치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번에 세입경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방 요인도 있고 또 상방 요인도 있고 계속해서 좀 더 모니터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본다면 지금보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максимум 7조 정도 더 세수결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세입경정을 추가적으로 할 의사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현재로서는 향후의 경기 변동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세 협상도 지켜봐야 돼서 좀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결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든 성장시켜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그 의지는 좋습니다만 정부의 그런 의도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세수결손이 더 생긴다라고 하면 이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은 전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지요?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세수를 과다 추계했든지 아니면 경제를 당초 계획보다 방치해서 성장률이 더 떨어져서 생기는 성장 세수 감소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 영역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 취임하신……

○위원장 **한병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두 차관계서, 이번에 신임 장관님 오시겠습니까만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단상에 보면 본회의와 똑같이 원편에 보면 상하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좌우 버튼이 있습니다. 단상을 국무위원님들 향해서 질의하시면 좀 더 편하게 질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지금 의결정족수 한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을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 경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나마 중부권 도시 중에서 인구가 성장하는 지역이고 활발하게 경제인구가 몰리는 지역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녁 8시 이후가 되면 도심지역에 이동하는 시민들이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대선기간 가운데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무엇보다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옷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심지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되면서 추경을 통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경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시의 적절하고 그 효과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1차관님께서 설명하시면서도 이번 추경이 속도가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송기현 위원 특히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경이 신속하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추경에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을 위해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2000억 원이 편성되었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거 보면 실제로는 1차로……

○위원장 한병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완성이 돼서 의결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너무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송기현 위원 시간은 좀 맞춰서 주시는……

○위원장 한병도 예, 시간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을 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공청회 생략의 건과 소위 구성의 건 등 의결 안건을 상정하여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10시49분)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촉박한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한병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 구성은 예결위 의석비율 등을 고려한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 수는 총 7인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4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3인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맡고자 합니다. 다만 아직 교섭단체에서 소위원회 위원 명단이 추천되지 않았기에 명단이 제출되는 대로 소위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소위 위원 선임 및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정책질의를 마치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6항까지 총 23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5.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6.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7.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8.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9.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10.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11.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12.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1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1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15.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6.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17.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8.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19.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20.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21.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22.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23.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24.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25.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26.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10시50분)

○위원장 한병도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면 시간은 처음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위원장 한병도 예.

○송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반복하지 않고요.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지급되는 것을 보면 1차가 선지급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또 차상위 계층한테 30만 원 지급드리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 지급을 드리게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2차 추가 지급으로 해서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90% 해당 국민들께 일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거기에다가 84개 시군에 인구소멸지역 해 가지고 41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일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설계를 하신 것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1차 지급한 이후에 2차 지급하는 그 10%를 골라내는 데 기간이 좀 필요하겠지요, 작업과?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장,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송기현 위원 그리고 1차 선지급할 때도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선별하고 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최대한 1차, 2차를 빨리 진행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거기다가 또 하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확정돼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지역 확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민생…… 전에 재난지원금 할 때 보니까 예산 확정된 다음부터 실제 지급이 나갈 때까지 대략 한 45일 정도까지 걸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전에 보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급 기준을 선정하고 그 기준을 이렇게 골라내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에 추경을 투입함으로써 신속한 민생회복과 경기진작 효과를 보려고 하면 적기에 지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한꺼번에 많이 투입되는 것이, 전액이 투입되는 것이 효과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에 재난지원금 했던 것처럼 45일 정도 걸린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는 선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최대한 지금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에 TF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하면서도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되는 두 마리 토끼가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급하고요. 1차 지급금 같은 경우는 최소한 65% 이상을 46일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거기에 소득 기준을 나눌 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불균형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최대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다양하게 서로 부처 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시간이 소요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실제로 2020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고 21년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효과를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송기현 위원 그때 보니까 소비가 실제 투입된 재원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난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투입된 재정에 비해서는 상당한 소비진작 효과가 생겼고 실제로 체감경기 지표도 계산이 됐었고 현장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도 개선된 것으로 당시에 분석이 됐었고요. 또 인허가 영업을 보면 휴폐업률도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야당 측이나 일부 반대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얘기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경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모두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45일까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최소한 1차 지급만큼은 46일이 아니고 2주일 정도 수준에서 집행을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송기현 위원 2주일 정도 수준에서, 그러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편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자부담률 기준이 바뀌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달라지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똑같이 10%, 20%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데 실제로 추가 지급하는 대상자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대상이 많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단편적으로 10%, 20% 나눠져서 부담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 더 배려해 주니까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안 좋은, 더 많은 부담을 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각 지자체를 다 본다는 것이. 하지만 이런 점이 있

다는 것을 정부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것이 수정될 수 있다면 잘 골라서 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데 비슷한 내용인데, 인구소멸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84개 시군을 지정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인구소멸지역을 이렇게 시군 단위로만 딱 잘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원주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는, 원주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주도 상당 부분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로 따져 보면 그 안에서도 인구소멸 대상이 되는 면이나 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불편한, 아니면 부당한 약간 차별 비슷한 것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정부 쪽 입장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혜 대상자가 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나는 왜 못 받지? 똑같이 농촌 지역에 있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작년 한 해에 1명도 태어나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이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 쪽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집행의 가능성 그리고 너무 세부적으로, 기준을 세분화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래서 정부 쪽 입장은 제가 잘 이해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번에 건설 SOC 관련되어 가지고 추경을 하면서 건설 경기를 통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제로 28개 사업인가요, SOC가 추가가 됐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송기현 위원 차관님, 그중에, 28개 중에서 강원도 지역 사업이 몇 개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숫자가 기억하기 어렵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숫자 기억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17개 시도가 있는데 이번에 28개 SOC를 추가하면서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 그렇게 추경을 편성하면서 강원도 지역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강원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지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강원도의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30년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예타가 올해 1월에 끝났어요. 예타가 끝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마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월에 예타가 끝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도 전혀 타당성 검토 관련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타당성조사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용역을 하는 데는 후년이 돼야 들어간다 이런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 사업 자체가 1년이나 2년 정도 지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 경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해서 좀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지역별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번 추경안에 반영된 SOC 사업은 실제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해서 발굴을 했는데요. 지금 특별히 말씀 주신 영월-삼척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지역별로도 균형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송기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송기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저랑 순서를 바꿨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소영 아, 순서를 바꾸셨나요?

○박민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소영 그러면 서울 관악갑의 박민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민규 위원 서울시 관악구갑 초선 국회의원 박민규입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 앞에 선 자리에 국정의 한 축인 국민의힘 위원이 없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현합니다.

저는 대학 때 경제학을 전공하고 행정학 박사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 행정과 재정을 국민의 명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잘 준비해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이 생긴다는 굳은 신념으로 어렵게 국회의원이 됐는데 저의 첫 예결위, 그것도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 순서에 국민의힘 위원이 없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재부1차관께서 매우 빠른 시일 안에 많이 준비해 주

서서 역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준비를 잘해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셨고, 인사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가 내수가 부진하고 또 소매판매가 12분기 연속 감소해서 1분기 실질소비지출은 4년 만에 최대 폭, 최대 폭입니다. 4년만이라는 것은 아시겠지요, 1차관님? 코로나 이후, 급격한 위기 이후에 최대 폭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건설 투자는 무려 4분기 연속 감소한 가운데 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 21% 감소했습니다, 1/4분기. 27년 만입니다.

그 결과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보다 더 힘든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없다면 금융 투자, 설비 투자, 투자·경제심리, 모든 지표가 최악이고 한국경제마저도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발표하는 보고서가 갑자기 대통령선거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졌던 공무원들과 정치인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양 2개 정당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나름 열심히 해 왔고 공직자분들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가 경제, 행정,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며 열심히 일해 왔던 공직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공직자들은 그저 위 상관, 대통령실,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우수한 공직자들이 자꾸만 줄어들면서, 정치권 또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국란을 극복하고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통합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정부를 출범했고 이제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정말 어려워진 내수경제를 회복하고자, 힘들어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3년 전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는 30조 추경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여당으로서 책임을 저서 통합의 길에 당연히 응당 답해야 되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자리에 있지 않고 몇몇 국무위원들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장관님, 차관님들께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표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 3년간의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여당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일각에서는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MF 위기는 그 당시 유동성 외환위기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는 대한민국 금융이 워낙 경직돼 있고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파생상품을 많이 구매하지 않았고 다행히 우리 정부가 잘 관리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구조적인 불황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단 말들로 한국을 떠나고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금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금융에서 의미 있는 투자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큰 축을 차지했던 대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의 무역정책 그다음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주요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의 대다수가 미국에 집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와 힘을 합쳐서 정말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결위원으로 정책질의를 하는 입장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두 가지만 여쭙본 다음에 여기에 계신 모든 장관님, 차관님 또한 이 방송을 보시는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국회가 지난 국회 22대 1년, 21대·20대 국회보다 저 같은 초선의원들이 많이 들어왔으니 더 노력할 테니 조금 더 소통하고 조금 더 협력해서 IMF 위기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대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 국민을 위해 삶을 책임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조금의 차이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희망이 없어진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과 차관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앞으로의 의정생활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장관님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부장관입니다.

○박민규 위원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었던 건설 경기를 위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택기금 관련해서는 약 1400억 증액했고 감액이 3000억…… 잠깐만요.

주택기금 관련해서 봤는데요. 제가 지금 예산안 관련된 보고를 받아 보니 PF 사업장 말고 집행 가능한 SOC 조기투자 관련해서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증액 부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 국토부 소관 SOC 중에서 금년도에 실제로 돈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내려가면 조금 더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선정했고요. 그리고 계획 단계나 이런 단계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실제 공사는 아니더라도 돈을 미리 투자해서 계획·조사 같은 것을 먼저 하면 투자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예, 맞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신속한 집행으로 봅니다. 적기에 집행해야지만 경제의 마중물을 할 텐데요.

지난 6월 12일 관계부처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정부는 1차 추경 5월 말 기준 3.2조 원이 집행되었고 7월 말까지 8.4조 원, 70% 집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집행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방정부에 들어가고 민간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 계신 국토부장관님, 특히 관련된 사업의 조기 집행 그다음에 민간까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아시는 것처럼 우리 1차 추경, 산불재해 중심이었는데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 여기 계신 모든 관련 부처 장관님, 차관님들 조기 집행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민규 위원 이번 2차 추경의 집행 목표와 집행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1차 추경 때는 저희가 국회에서 의결된 뒤로 3개월 내에 70%가 목표였는데요 지금 집행 준비 작업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고요. 1차 추경보다 조

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지금 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민규 위원 차관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기재부가 빨리 결정해 주고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 줘야지 예산집행 부서에 어쩔 수 없이, 특히 5월까지 정부 예산을 내고 그 이외에도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각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도 속도를 낼 수 있으니 책임감을 갖고 2차관실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현장에서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리고 오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약에 보면 16페이지, AI 관련된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영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AI라는 것이 마치 모든 예산에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데 부처별로 너무나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AI가 가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 영역에 지금 과기부하고 산자부와 중기부가 업무를 잘 나눠 가진 것처럼 기초 관련된 기술개발과 물 만드는 거는 과기부가 그리고 산업에 관련된 AI는 산자부가, 그것 관련해서 좀 더 특화된 거는 중소기업부가 하되 중소기업부는 특히 중소기업에 들어간 예산의 효과에 대해서 좀 냉정히 보시면서 일정 부분 중소기업에게, 마치 좀비기업을 양산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의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종로의 광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상언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회의원 광상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출범 15일 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신속한 결단입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히 예산을 보충하는 차원을 넘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가의 비상대응체계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란 극복 추경입니다.

지난 12·3 내란 사태가 초래한 극심한 경제적 충격과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국란 극복 추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지속된 총체적 경제 실패 그리고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예산입니다.

셋째는 국가 책임 추정입니다.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적극적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이제 침체된 경제에 결정타를 가한 윤석열의 지난 12월 3일 내란 사태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국민들의 현실을 구해 내고자 하는 질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형일 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난 코로나19 그리고 지난 시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를 소상공인들이 힘겹게 버텨 왔습니다. 지금은 생존의 한계에 내몰려 있습니다. 지금 지표를 보게 되면 매우 어려운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채 수준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살펴보니깐요 2024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1064조 2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연체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취약차주에 대한 통계를 보니깐요 42만 7000명에 달하고 2024년 말을 기준으로 연체율이 11.16%에 이르는 위험 수위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폐업이 속출하는 최악의 경제 위기에 있습니다. 올해는 폐업 사업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를 보니까 소상공인의 88.4%는 비상계업으로 인해서 매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36%는 매출이 반 토막 났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난 4월 28일 1차 추정 심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언하십니다. ‘12·3 불법 비상계업 사태로 인해 4개월 넘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코로나 때 일부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손실보상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십니다. 그때 경제부총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다만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십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속된 소상공인들의 피해, 4개월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제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 일대는 실제로 생존에 위협을 받을 지경에 있습니다. 특별한 국가적 상황으로 인해서 특별한 손해를 입은 것이지요.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저희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기재부에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주신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국가의 직접적인 행위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직접적인 원인행위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해 나가되 지금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 주신 부분, 계업 이후도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두 가지 대책을 반영을 해서 추경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출발기금이 원래 작년 11월까지만 사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었는데요. 계업은 12월 이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신 분들까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 주신 것, 장기 연체 이분들이 현장에서 추심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장기 연체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파악해서 파산 상태 정도로 도저히 빚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박상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부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물론 집회·시위는 국민들의 행위지만 그를 통제하는 것은 경찰력의 통제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경찰력의 동원으로 인해서, 그때 동원되었던 인력 그다음에 행사장 진행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는 국가권력으로 인한 통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국가권력의 행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비약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상언 위원** 알겠습니다.

안덕근 장관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3261억 원 규모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박상언 위원** 이 사업은 내수 진작 그리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박상언 위원** 이 사업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 그다음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논의가 미흡했다’ 이런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사업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중소기업 우대, 사전공지 강화 등의 구체적 개선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이 사업은 보면 과거 사업과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살펴보니 식기세척기가 추가된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세 차례 사업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사업 구조와 거의 동일하게 설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평가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 평가가 아마……

○**박상언 위원** 평가가 미흡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없었다는 말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미흡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산중위 할 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평가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한 평가를 준비하고 있고 20년, 가장 최근에 했던 사업 이후에 보면 저희가 한 10배 정도의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언 위원** 10배 정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박상언 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 이 사업의 지표를 보게 되면 2020년 사업에서 상위 2개의 대기업 제품, 혹시 어디인지 아시지요? 그 환급 금액의 비중이 전체 80%가 넘습니다. 판매액만 해도 2조 4658억 원에 달하고요. 실제로는 대기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한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간접적 효과일 뿐이고 그마저도 6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대기업을 보조하고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 해결할 구체적인 구조적 개선방안이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고효율 가전기기를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곳이 대기업이라서 그런 건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품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곳들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간접적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저희가 20년 그때 사업 결과를 보니까 한 60% 이상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쿠쿠라든가 위니아라든가 이런 중소·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꼭 반영을 하고 염두에 두어서 그런 것들이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국민들 중에서는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요. 50%가 넘습니다. 강원도, 제주도, 충북에는 3%의 혜택도 가지 않습니다. 전체 국민에 대한 혜택은 전기를 소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얻는 것이고 직접적인 혜택은 대기업에만 가고 있고 특히나 지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시는 국민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적극 공감하는데 이게 인구수로 하면 아무래도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인구 비중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지역으로 그 효과가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특히 소득별로 보게 되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부자 계층들에게 사실상 간접, 또 다른 간접으로 보조하는 셈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게 이제 저소득층이나 좀 소외된 계층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한도가 차는 경우에 이걸로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소득층만 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갑의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수원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오늘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무위원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분께 우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2023년도 예결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였는데요. 그때 다들 기억하겠지만 2024년 예산안 편성할 때 R&D 예산은 5조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ODA 예산이 갑자기 2조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예산 배정인지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캄보디아 ODA 예산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것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고 계십니까?

캄보디아 ODA 예산에 대해서 검찰이 올해 4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영장에, 통일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청탁과 관련해서 부정부패가 있다라는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영장이 아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캄보디아 ODA 청탁에 관련해서 통일교 관계자의 YTN 인수라든가 인수 노력 또 대통령 취임식 초청 내용 또 통일교 이인자로 불렸던 윤 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아내 이 모 씨에 대한 출국금지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연결고리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ODA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2178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4353억으로 27개 중점 협력국 중 가장 증가율이 크게 반영이 됐는데요. 이게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 점을 여쭙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2025년도 추경 관련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셨는데, 약 5조 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셨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200억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박윤주 1차관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지금 ODA 사업이 2024년도 예산안에 한 2조가 증액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차관님 기억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산 증액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게 한 2조 원 정도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구체 사항은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사후 검토라든가 또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이 된 것입니까?’라는 질의가 있었고 거의 안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2024년도 ODA 예산 증액에 대해서 아직, 결산은 8월이니까 그에 대한 결과 보고는, 결산 보고는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승원 위원 중간 점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중간 점검 제가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김승원 위원 그것도 아직……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승원 위원 8월에 보고를 하시니까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대략……

○김승원 위원 캄보디아 ODA 예산은 얼마 증액이 됐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료 화면 잠깐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도에는 4353억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2024년도가 2178억이고요. 집행률에 대해서는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어쨌건 지금 30조가 넘는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재원 마련을 하고 있는데 지출 구조조정이 5조 원에 달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ODA 예산에 대해서는, 특히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200억 정도의 삭감만 있고 다른 곳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타당성이 없는 ODA 예산 증액이 2024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 지출 구조조정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외교부에서 차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이게 뭐지요? 민간 전대차관인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승원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전대차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전대차관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수혜국에서 언제든 돈을 지출해서, 뽑아서 집행할 수 있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지요. 이 사후 증빙이 잘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이 있는 것은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구체 내용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보고서를 좀 받아 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게 지금 자료 화면에도 보이지만 ‘기재부는 동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해당 금액이 실제 사업에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전혀 관

리하고 있지 않다' 이게 아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자료인 것 같은데 지금 외교부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 기재부도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중요한 혈세 4000억이 캄보디아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전대차관의 형태로 아마 그쪽에서 수백억의 자금을 인출해서 여기저기 쓴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ODA에 대해서 지출 구조조정이 더 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캄보디아도 차관을 원래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승원 위원 이것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정밀하게 확인을 못 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오늘 나오신 기재부 담당이 2차관님이신가요, 1차관님이신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대차관의 경우에는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승원 위원 2025년 예산에 648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출이 하나도, 그러니까 집행률이 제로라는 뜻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아직 현지 금융기관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추가로 더 할 수는 없나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지원 필요성이나 절차 등을 다시 한번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거는 좀 점검을 해서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ODA 사업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2조 원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는데 그에 대한 빠른 재검토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불용액도 있을 것이고 또 국회예산처에서 지목한 대로 수혜국의 정부 구조가 바뀌어서 집행이 안 된다 혹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중이라서 이것 안 될 것이다 등등의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시고 재원 마련의 근거로 사용해서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등에 정부 ODA 예산이 연계가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저희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원 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자료제출 요구라든가 압수수색 같은 게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게 검찰에서 4월 30일 날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지금 벌써 2~3개월째 돼 가고 있는데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

것은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기재부1차관님께 여쭙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캄보디아와의 협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제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500억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업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저희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 빨리 점검을 해서 지출 구조조정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보시면 2022년 6월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캄보디아에 첫 해외순방을 갔다 왔고요. 또 김건희 씨가 착용한 목걸이, 이게 반클리프앤아펠인가요? 6000만 원대 초고가 목걸이를 받았고 또 샤넬 백 2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것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또 특검의 대상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점이 있고 부정부패 논란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에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저희가 점검 해 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결산을 8월 달에 하실 텐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기재부 예산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24년 예산집행에 대해서 결산을 8월에 보고할 예정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6월 30일 인데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제 질의 끝나고 나중에라도 서면보고라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현재 정부에서 결산이 끝나면 국회로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정부 내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는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원 위원 아니요, 캄보디아 건에 대해서 중간 진행 상황이 어떤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용만 위원님 또 김운 위원님까지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 위원입니다.

민생이 최악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IMF보다,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 드리는 그런 추경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정쟁을 중단하고 추경 회의장으로 돌아와서 무엇보다도 민생을 우선하는 추경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 밥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생의 시작인 농업 민생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농업 민생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그리고 1차 추경에서 삭감되고 2차 추경에서는 농업 SOC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을 포함해서 약 5441억 정도가 추가로 상임위 심사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는 삭감하지 마시고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1차 추경 때도 저희가 7000억 정도 했고요. 2차 추경에도 저희가 30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농해수위에서 지금 추가 증액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종덕 위원 예, 짧게……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부분 충분히 농촌 어려움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한 가지,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 중에 청년농 육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년농을 3만 명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청년들에게 정책자금 지원하고 상시대출로 5억 원까지 대출해 줬는데요. 지원자가 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갑자기 제도를 바꾸어서 대출 지원을 상시 지원에서 선별 방식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정부만 믿고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 보겠다고 내려온 우리 청년들에게 농업판 전세사기 대출이다 이렇게 청년들이 분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지원 방식을 상시 방식이 아니라 선별 지원 방식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농민들을 육성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고 그리고 우리 농업을 위해 귀촌·귀농한 청년들을 다시 도시로 떠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의 정책은 예산 부족에 따른, 정부의 예측 실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대로, 취지대로 상시 지원으로 바뀌어서 또 예산도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이 다시 농촌으로 귀촌·귀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급격한 지원 방식의 변동이 혹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지, 과연 그런 지원 방식의 변경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잘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새 정부 들어서 2차 민생 추경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새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유일합니다. 참 기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농업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쌀을 주식으로 한 모든 국민의 민생 문제이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7일 날 민주당 농해수위원들하고 당정협의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전종덕 위원 언론보도 보니까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농망 4법 이것을 다시 추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농업 4법과 27일 날 합의한 농업 4법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 정부에서 했던 농업 4법 같은 경우에 특히 양곡법을 중심으로 하면……

○전종덕 위원 조금만 짧게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적으로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남는 쌀이 없도록 하면 양곡법이 필요가 없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전종덕 위원 사전적 수급 관리 말씀하셨는데 벼 재배면적 감축 말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종덕 위원 전략작물 인센티브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전략작물 인센티브가 전략작물 직불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직불금…… 예,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직불금을 2400억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4000억을 늘리겠다 하는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액수는 정확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전종덕 위원 언론보도를 두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벼 재배면적 감축 그다음에 전략작물 재배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그때나 지금하고 뭐가 바뀐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때는……

○전종덕 위원 바뀐 게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전종덕 위원 그런데 그때의 조건하고 지금의 조건이 바뀐 게 없는데 이제는 조건이 바뀌었으니 이 법을 추진할 만하다, 추진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전 정부에서는 남는 쌀을 줄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수급 관리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만……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지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타 작물을……

○전종덕 위원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르는 전략작물을 육성하는데 그에 따르는 직불금을 확대하겠다고 이것은 윤 정부 때 했던 정책이에요. 갑자기 바뀐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그동안 쌀 과잉이 과잉생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쌀의 과잉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40만 8000t, 매년 5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40만 8000t의 수입 쌀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윤 정부에서 8만ha를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8만ha의 감축량은 41만t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입 쌀 40만 8000t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수입 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쌀 생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고 결국 농민들에게는 경작권을 침해하고 식량안보와 식량위기를 조장하는 그리고 쌀 감산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동안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농정이다, 대표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벼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 확대 그리고 수입 쌀 40만 8000t 그대로 수입,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내란 농정의 연장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전략작물직불금으로 할 수 있었던 그 규모와 작물의 한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쌀을 재배하는 것보다 다른 작물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여건이었거든요.

○전종덕 위원 장관님, 지금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때 식량자급률을 정부에서 목표를—똑같습니다—식량자급률 목표를 98%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평균은 94%에 불과합니다. 벼 재배면적도 그동안 해마다 줄여 와 가지고 지금 69만ha 정도 됩니다. 감사원에서 69만ha는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만ha를 줄이겠다는 것은 전체 면적의 11%를 줄이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61만ha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식량자급률이 평균 94% 정도인데 이 식량자급률이 84%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세웠던 식량자급률의 목표가 98%였는데 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식량주권을 국가의 안보로 인식하고 식량자급률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전종덕 위원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종덕 위원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종덕 위원 다르다는 것이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다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전종덕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정책에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우리 식량이 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다른 식량 작물을 우리가 재배하고 쌀은 남는 쌀을 줄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전종덕 위원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벼 감산정책을 통해서 식량자급률을 위협하고 식량 위기 시기에 식량을 오히려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대로 송미령 장관을 유임했다는 것은 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농정을 그대로 유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확연하게 다릅니다, 위원님.

○전종덕 위원 뭐가 달라요, 확연하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쌀 의무수입 물량을 감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쌀 의무수입은 30년 전 당시의 물량 기준이었던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최근 3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 47%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 19만t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려면, 대통령이 약속했고 정부에서 이것을 줄이려면 쌀 재협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시급하게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관련해서 혹시 대응 TF 등을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약사항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종덕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민주 정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민들에게 했던 약속이나 쌀 수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식량주권을 지키겠다 그리고 농업을 국가안보로, 안보산업으로 인식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펴는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연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을 연장하기 위해서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것이 아닌지, 양곡법을 비틀기 위해서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러려고 남태령 고개를 넘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전종덕 위원 아니, 이미 끝났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나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한병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밥이 민생이고 쌀이 식량주권이고 식량안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책임 농정을 하겠다 그리고 식량주권이 국가안보산업이다, 농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농정과 이재명 내란 국가

책임 농정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농정과 이재명 정부의 국가책임 농정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란 청산과 내란 농정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내란 청산의 시작은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농민과 광장과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송미령 장관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농민들과 국민들의 뜻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병도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질타에 대해서 겸허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고요.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의 양곡관리법의 우려했던 점은 정부가 사전에 수급조절을 하는 데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쥔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도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데 쌀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쌀이 남고 쌀 가격은 떨어 집니다.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장관이 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의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요약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되면 식량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잘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한병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후 질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추가질의 때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예,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하남을의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 현안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부장관님이 오늘 안 나오셨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차관 출석해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교육부차관님이 어디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여기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최근에 리박스쿨 등 극우 뉴라이트 단체들이 늘봄학교 강사 사업 등에, 그러니까 공교육이지요. 공교육 침투하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났고 우리 아이들이 극우적 역사교육을 받는 건 아닌지 사회적인 우려가 큼니다. 교육의 중립성 위반과도 결부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중차대한 문제인데 지난 6월 11일에 교육위에서 현안질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부의 중간조사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아마 제가 처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일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박스쿨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이주호 장관님은 국회 현안질의에도 안 나오셨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안 나오고 지금 예결위 전체회의에도 불출석을 하셨어요. 이건 참 역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문제가 일어났고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최소한만 일을 하겠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걸로 오늘 또 불출석 사유에 적혀 있던데 맞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 정책을, 이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리박스쿨 교육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부정하거나 아니면 일제식민지 지배로 하여금 우리가 발전했다 하는 그런 역사 왜곡 교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차관님께서도 이 영상 보셨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난번 현안질의 이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김용만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용만 위원**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극우 뉴라이트 역사가관이 주입되면서 결국은 극우단체 아니면 극단주의 세력을 지지하게 된다고 보여요. 이게 한쪽, 역사를 바라볼 때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최근에 벌어졌던 서부지법 사태 같이 극단적인 행위를 옹호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안까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교육부가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결부되어 있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들보다도 더 먼저 나서 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다행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16일에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 기관 6개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늘봄학교 강사로 파견된 강사들

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박스쿨 당연히 있고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같은 곳들이 있지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총 43명이 57개 학교 프로그램에 출강을 했고요. 7월까지 57개교 조사를 통해서 교육 중립성 위반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7월까지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전수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그리고 적극적인 조치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자격증 발급기관에 생명과학교육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들여다봤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이 생명과학교육연구회 대표가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확인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분이 또 대표로 있는 글로리 협동조합의 감사로 활동을 했고 또 우남네트워크라는 활동을 손효숙 대표랑 같이 하고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주장하는 청소년 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방문까지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박스쿨, 대한교원조합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정치적으로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곳인데 왜 조사 대상에서 빠졌느냐 얘기를 해 보니까 ‘연구회가 자격증 발급을 하는 기관인지 몰랐다. 그래서 조사 대상기관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교육부가 저희한테 회신을 해 왔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우선 교육부의 기본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짧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 중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룬 중요한 교육적 가치입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즉각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강사교육과 관련돼 있는 기관 그리고 손효숙 대표와 연계돼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차관님, 말인즉슨 적극적으로 하겠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수습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래서 국회하고 언론에서 비판이 일어나니까 부랴부랴—3일 전인 6월 27일입니다—생명과학교육연구원을 포함해서 5개 단체 추가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교육부가 지금

그런 자세인 거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오늘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리박스쿨 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토론회를 오늘 오후 2시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교육부 담당자한테 좀 나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 거부를 해요. 별다른 사유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부가 나서서 발본색원하고 이 터진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차관님은 얘기하시는데 왜 교육부 담당자는 얼굴 보이지도 않고 회피만 합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어느 모임이든 가 가지고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경청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추후라도 의원실 들어와서 업무보고할 수 있도록 차관님이 조치해 주시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거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그거겠지요. 공교육에 침투해서 아이들을 세뇌하려고 한 교육을 가장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가 언제 마무리될지와 향후 대책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포함해서 담당자분이 업무보고하실 때 같이 보고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추가로 확인을 한 건데요. 리박스쿨 손 대표가—글로리 협동조합 대표이기도 하지요—강사자격증을 14개나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학 분야에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만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자격기본법 있지요? 거기에 따르면 민간자격증 등록은 교육기관이라면 누구나 주무부처에 등록 후에 신설이 가능하고요, 시행령상에도 등록 허용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민간자격증 등록 이후의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아마도 리박스쿨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겠지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자격증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곳에서 신규 등록된 자격증에 대해서만 앞으로 2년 정도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전수조사나 정기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민간자격증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거겠지요.

그리고 법에 따르면 주무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하게끔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 지도·감독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허점들을 통해 가지고 리박스쿨 같은 곳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을 세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결국은 어떤 프로젝트가 돼서—극우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아주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진 늘봄학교인데 하나의 극우 어린이 만

들기 프로젝트 도구로 전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의 공교육 진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간자격증 취득 현황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 그다음에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저희가……

○**김용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지 않을지,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게끔 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윤입니다.

조규홍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여기 있습니다.

○**김윤 위원** 김건희 씨가 검찰로 3차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에 서울아산병원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유로 입원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11일 만에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라면 서울아산병원 같은 대학병원에 언제든지 원하면 저렇게 입원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 규정에 따르면 의원·병원 등으로부터 의뢰받는 것이 원칙이지요.

○**김윤 위원** 의뢰를 받았는지도 확인이 안 됐고 설사 의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외래 진료를 받을래도 몇 주씩 기다려야 되고 입원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윤 위원** 그러면 저런 모습을 본 국민들은 내가 아파서 대학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수술받아야 되는데 제때 입원 못 하고 기다려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면 대학병원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한 달에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 위원** 평균 10명쯤 됩니다. 그것도 지금 의료대란 이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은 초기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정신병원 같은 곳으로 가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증 같은 중증 정신질환 중에서 대학병원·종합병원에 입원해야 될 환자 중의 몇 % 정도가 실제로 대학병원·종합병원에 입원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죄송합니다. 그 자료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요.

○김윤 위원 한 30%,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정도밖에 실제 대학병원·종합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정신병원 같은 곳에 가서 실제로는 굉장히 만성화되고 그것 때문에 개인의 삶은 불행해지고 국가는 만성화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장기적으로 들여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첫 번째, 불공정한 저런 특혜 의료 이용을 남용……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말씀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종합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치료체계를 개편해 달라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이어서 지역의료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임기근 차관님, 응급·외상 같은 필수의료 서비스는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서비스이고 그것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국가가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윤 위원 그러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윤 위원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의 권역별로 중증외상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한, 소위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지역별로 보여 드리는 건데요. 광주·전남·제주는 20%가 넘는 반면에 경기·인천은 10%여서 지역 간 차이가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어느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살 확률이 2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이게 용납할 수 있는……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시급히 해결할 최우선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윤 위원 저렇게 사망률이 낮은 지역에는 좋은 외상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외상센터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윤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1년에 기획재정부는 외상센터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타를 부결시킨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타 부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 위원 잘 모르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윤 위원 그 덕분에 지금 대규모 외상센터 6개를 지어야 하는 게 정답인데 실제로는 17개의 구멍가게 같은 외상센터가 만들어져서 저런 지역 간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경기·인천에는 아주대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이 다행히 대규모 외상센터를 하고 있어서 사망률이 낮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이게 단지 생존율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사는, 비수도권에 사는 국민들은 좋은 병원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들이는 교통비 등이 1년에 4000억 원이 넘고 들이는 시간을 포함한 기회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4조 6000억이 넘는 돈을, 지방에 사는 환자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지역의료로 살리겠다고 하면서 국립대 의과대학의 교수를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이들 병원에서는 교수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습니다. 교수들이 대학병원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갔기 때문이지요. 지방 대학병원 교수가 수도권으로 옮겨 가고 지방 대학병원의 교수가 2차 병원을 하거나 개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관님, 왜 대학교수들이 대학병원을 버리고 바깥으로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인 대우 그리고 근무여건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 위원** 물론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대학교수들은 내가 대학에서 정말 환자를 위해서 필수적인 진료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어서 월급이 적어도 대학병원에 남아서 계속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대학교수가 교육도 잘하고 연구도 잘하고 환자 진료도 잘하고 하기 위한 시스템,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부의 단편적인 지원 정책, 예를 들면 국립대병원의 교수 채용 같은 정책……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대학교수로 들어가면, 대학병원에 들어가면 혼자 교육, 연구, 환자 진료에 독박을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 배가 되고 있는 대학병원으로 교수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필수의료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의료체계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안정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역필수의료기금입니다.

기재부는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이번 정부에 만들어서 지역医료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디 살든지 국가가 똑같이 필수적인 의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고요.

기금 설치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건지 그리고 기존 사업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회계와 기금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복지위의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금융위원회에서 나와 계시지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기한** 예.

○**김윤 위원** 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손보험입니다.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기한** 위원장이 지금 정무위 전체회의로 오늘 오후에 출석할 예정이라……

○**김윤 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실손보험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최대 11조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진료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낭비되는 건강보험 진료비고요.

실손보험 비급여로 돈을 많이 버는 병원으로 대학교수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월급의 두 배, 세 배를 바깥에 나가면 벌 수 있는 체계를 실손보험이 현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손보험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가입한 국민이 전체 3000만 명이 넘는데 그중의 20%가 전체 실손의료비의 80%를 씁니다. 그 80%의 상당수가 도수치료, 미용주사 같은 비필수 영역에 쓰이는 돈입니다.

실손보험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위해서도 이번에 실손보험을 반드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짧게 의대생·전공의들에게 한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반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때문에 전공의·의대생 여러분들이 많은 상처, 분노,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귀하는 것이 새로운 의료개혁, 진짜 의료개혁의 시작입니다.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의에 힘써 주신 간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양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변경된 추경안 심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하루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7월 1일 화요일인 내일 하루 더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7월 2일 수요일 오후에 소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주질의 15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고 이미 질의

하셨던 위원님들은 희망하시는 경우 보충질의를 5분 더하여 총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정책질의에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은 총 스물다섯 분이며 이를 반영한 새로운 질의 순서를 곧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중구남구 김기웅 위원님 질의……

○**한기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한병도 위원장님의 결단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또 한병도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제가 뵈 분으로서 합리적이고 또 협치를 존중하는 위원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역시 실망을 주지는 않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중에 진행된 과정은 파행의 연속이었고 실제로 과도하게,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점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과와 말씀이 있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10분씩을 한다 해도 금일 12시가 넘어가면 차수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 계획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셨다는 데 대해서 반드시 위원장님은 사과와 말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1년간 예결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또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모범 위원회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는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위원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전에 서로…… 좀 파행이 있었는데요. 제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더욱더 소통을 더 분발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사과의 말씀은 안 하시고……

○**위원장 한병도**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중구남구의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각료 여러분!

대구 중구남구 국민의힘 김기웅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사일정 협의가 잘 되어서 예결위가 정상화된 거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는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정책질의에 앞서서 저희 간사께서 양당 간사 간 합의, 협의 없는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시고 좀 ‘시정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절차 타령을 하고 있다’, ‘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놓고 시간 끌기를 한다’ 또

‘정쟁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절차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가 이렇게 잘 합의해서 원만하게 금방 될 수 있는 일을 왜 일방적으로 해서 분란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절차 타령’이라고 하신 건 제가 볼 때 잘못된 표현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내일 종합정책질의 하고 2, 3일 소위 하고 4일 날 본회의 의결해도 실제 추경 집행은 차질이 없는데 종합정책질의 이틀 하자고 해서 이걸 시간 끌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앞뒤가 안 맞고 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다는데 그걸 정쟁화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언이 과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1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우려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총리후보자 여러 문제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문회 이틀, 그것도 증인도 없이 자료제출 없이 맹탕으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3일 했습니다. 현장까지 가고 증인도 많았고 자료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국무총리 청문회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 스스로 굉장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등등 운영이 너무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협치라는 것과도 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된 건데 이미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가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국내 일정이 아주 바쁘고 또 중동 사태 때문에 못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내 일정을 제가 좀 봤더니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급하고 바쁜 일정이 별로 보이지는 않고 지방 행사 좀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미국 대통령이나 나토의 여러 정상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게 맞는 것이지 국내에 계시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관세 문제도 7월 8일로 기한이 있고 방위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 출범 후에 미국 정상과 양국이 서로 조속히 소통하는 것은 참 시급하고 필요한 일 같은데 이렇게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안 가신 것에 대해서 외교부차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국내의 산적인 현안하고 또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 국내적인 여러 가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하신 거고, 사실 나토 정상회의에 가지 않은 국가들이 더 있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호주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나름대로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판단

을 내려서 각국의 사정에 맞춰서 한 결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국내적 비판도 있고 또 약간의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나름대로 우리 국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예, 일단 그 문제 말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서해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해경 선박이 갔다가 쫓겨나는 일이 생겼지요. 관련해서 비례 대응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외교부나 해수부나 전반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비례적 조치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중 간에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고요.

지난 정부나 심지어 지 지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양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국제법적 문제가 관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또 저희가 어떤 비례적 대응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또 다른 비례적 대응이 그것을 중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응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 말씀은 그러니까 해양주권을 확고히 지키고 필요한 조치는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위원님, 유념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또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 황해북도 평산우라늄 공장에서 폐수 누출 관련된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수부, 환경부, 통일부 다 관련된 부분이지는 한데 그래도 일단 조사 관련된 것은 해양수산부가 가장 주무부처로 알고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보도로만 보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각 부처가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기사 자료로는 그렇게 지금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보시기에 그러면 언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한강 하류든 어디든, 후쿠시마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마지막으로 서해에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서해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는 있습니다마는 접경지역 내에서 저희가 조사한 상황은 지금 보고를 받지 못했구요.

정점 자체는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사 상황은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웅 위원** 2019년에도 한번 북한에서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조사한 적이 있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2019년에도 별일 없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근이 잘 안 되는 지역에 있고 실제로 저희가 안보, 국방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여러 부처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적당한 곳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 측정항목 중에 방사능 관련된 항목도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라늄이 지금 없고요.

○김기웅 위원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나머지 우리가 원안위에서 다루고 있는 해양방사능 조사에 대한 위험요소들은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만간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할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 기사에서 나왔던 원격탐사 전문가를 부처에서 한번 뵙고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한 정보들을 우선 습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안들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이게 행안부도 있고 해수부 있고 환경부 있고 통일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하면 국무총리실에서,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다 같이 회의도 해야 되고 TF처럼 뭘 구성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우선 그것부터 빨리해야 각 부처 역할 분담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추경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이걸 산업부일 것 같은데 이미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논란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이것이 전력단가, 공급단가 떨어지면서 사실 20년이 넘어야 사실상 경제성이 생긴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이 그때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하나 있고.

이것은 또 구조적으로 에너지 변경이라고 하는 사실 장기적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급히 급하다고 아까, 아주 시급하다고 하는 이야기…… 추경에 과연 이 태양광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것도 우선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저희가 태양광 사업을 해서 이번에 용자, 주로 돈이 다 추경이던데 그게 보니까 사고 났던 것, 과거의 사고 97%가 용자 사업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 사고 많이 난 것도 대부분 이 부분이고 이 사안이 지금 분초를 다투 만큼 시급한 것도 아닌 것을 이번에 추경에, 그것도 태양광 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반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번에 저희가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파트만 최소한으로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안대로 갈 수 있도록 정부안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웅 위원 그 말씀이 조금……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 더 따지지 않겠고요.

끝으로 하나 더 외교부차관님께, 이걸 상임위 증액 요청했던 사안인데 올해가 한일수교 70주년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60주년입니다.

○김기웅 위원 60주년입니까? 50주년 때 자전거 투어라고 해서 사업 하나 했었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이번에 그게 없잖아요, 예산안에. 그래서 추경으로 10억을 증액시켜 왔는데 지금 한일수교 60주년 기념사업, 10억 증액된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 50주년에 했던 사업에 이어서 60주년에 한일—사업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확정은 하겠습니까마는—젊은이들이 조선통신사가 가던 길을 자전거로 서울에서부터 일본까지 가는 그런 것을 다시 답사하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 인파도 많고 지역주민들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효과도 컸다, 말하자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신청을 아예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했는데 안 된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당초 신청이 되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일단은 금년 예산으로 초기부터 하지 않은 것은 아마 시일이 하반기에 짧은 관계로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못 들어가면 날짜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산이.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10억이 반영이 되어야 60주년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게 되도록 재정 당국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위 말해서 상품권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장단점이 있겠습니까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상위계층에게 똑같이 15만 원씩 주는 부분은—저도 받겠습니까마는 다 받으니까—5월에 출생한 아이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저부터도 그걸 과연 받아야 되는가부터 고민하고 있듯이 그것을 좀 더 어려운 계층에게 좀 더 주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과거에 상품권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금과 상품권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장단점이 다 있기는 하던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래도 현금 드리는 게 그나마 소비진작이라든가 효과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적고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이신가요? 실제 지급 방식이 정해졌나요? 검토 중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실 때 과거 사례들과 또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지고 액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관계부처에서 TF

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소위까지 이어지는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주 제주시을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김한규입니다.

저는 기재부장관직무대행인 이형일 1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기간 동안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났는데요. 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게 국세수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소득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75조 원으로 시작했는데 2022년에는 128조 원으로 늘려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첫째 115조, 작년에는 117조 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차관님께서서는 이러한 소득세 수입 감소의 원인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기본적으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임금 관련된 게 있을 것 같고요. 고용의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고용 관련된 부분인데 근로소득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2022년에 57조 원이었다가 23년에는 59조, 24년에는 61조 원으로 오히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양도소득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32조에서 작년에는 16조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소득세도 문제지만 저는 법인세 감소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103조 원이었는데요. 2023년에 80조, 2024년에 62조 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2년 사이에 법인세가 40% 정도 감소된 건데요. 물론 대외적인 요인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법인세율 인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이었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당시 한덕수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투자가 확대된다는 전망은 미실현 어음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세수 감소는 현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분은 아니다, 분명히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 확대가 되고 고용 창출이 될 거니까 세수 확대도 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2년 사이에 법인세는 1년 기준으로 4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효과도 얻지 못했는데요.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이 30조인데 법인세가 감소된 것만 1년에 40조였다는 점을 보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차관님, 혹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고용 확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이런 분석한 자료가 기재부 내에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제가 아직 이번에 관련해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지금이라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는 게 향후 법인세율을 어떻게 정할지, 추가적으로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늘릴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자

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더할 나위 없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기준으로 KDI나 한국은행 모두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하고 투자가 이중적으로 불황이기 때문에 뚜렷한 경기 반등 신호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인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이런 경기 침체로 인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그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는 작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작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완화해서 좋은 건데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년 가금복 결과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2017년 이후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었는데 최근에는 정체 상황입니다. 이런 불평등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또 하나의 불평등지수가 있지요, 소득 5분위 배율.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그러니까 상위 20%의 분들이 하위 20%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몇 배나 많이 소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인데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역시 문제인 정부에서 개선되다가 현재는 정체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6배, 그러니까 상위 20%의 분들이 하위 20%에 비해서 6배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평등하지 않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분명히 현재의 상황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자산 기준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불평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인데요.

순자산 지니계수, 역시 자산으로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건데 2017년 이후에 매년 상승을 거듭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최근 수치는 현실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게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후에 자산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는 불평등이 커지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서울, 특히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은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니계수, 차관님이 보시기에 지니계수가 숫자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보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렇게 딱 선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전에 한 3.8까지 있다가 3% 초…… 0.3 초반까지는 와 있는데요. 말씀한 대로 만약에 이게 0.5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그 중간은 좀 판단이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0.4가 넘어가면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보고 다행히 우리가 소득기준으로는 0.4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정부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효과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소득기준으로는 그렇지만 자산기준으로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0.5가 2017년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득 대비 자산은 지금 불평등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이렇게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나라별로 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계산하는 게 조금 쉽게 와닿지는 않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우리가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가 13.7%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차관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우리 정부의 재분배 효과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관련된 국제 비교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으로 보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많이 격차가 생긴 상태에서 좀 과감하게 줄여 주고 있고 저희는 사전적으로는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격차가 좀 약해지고, 재정정책으로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2022년 기준으로 OECD 38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34위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재분배하는 데 얼마나 역할을, 기여하고 있는나라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는 코스타리카·콜롬비아·칠레·멕시코 4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지난 정부는 물론, 사실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 정부들도 그렇게 크게 재분배 효과 그러니까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아주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잘 드러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부 재정을 정함에 있어서 이런 불평등 완화의 목적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차관님이 보시기에 이번 추경에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기본적으로 계속 오늘 논의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전 국민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지만 소득 맞춤형으로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게 소득 지원이자 소비 지원까지 같이 겸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 면에서는 소득 지원 예산으로 의미는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예산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또 전 국민에 기본적으로 15만 원 주다 보니까, 그건 또 필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 지급의 여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민간에서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부족하고 정부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역 간에도, 아까 잠깐 소득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추경에 지역 간의 재분배 효과를 위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역 간 재분배 관련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도 지금 지역 간 재분배 효과가 약간 반영되어 있고요,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하는 비율에도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 SOC 사업들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역별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2차관님이 답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2차관님께도 여쭙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민생회복 지원금 중에 지역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을 좀 더 설명을 해 봐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일단 지역 간 불평등 완화하고 관련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추가로 2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과 그 외 지역은 보조율에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지역 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구소멸지역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게 2만 원입니다. 충분할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지금 25만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형평도 봐야 되고, 그래서 농어촌 인구 지역만 특별하게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2만 원을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2만 원보다 넘는 게 과다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법인세를 인하로 인해서 1년에 줄어드는 예산이 40조인데 이번의 추경 그것도 세입조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20조밖에 안 됩니다. 딱 절반을 지급하는 건데,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데 일인당 2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한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은 최소한 인구소멸지역은 5만 원 정도는 추가로 지급해야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구소멸지역 말고도 사실 비수도권을 위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예산 배분에 있어서 국비하고 지방비는 서울과 비수도권이 차이가 나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국민들한테 지급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차이가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한규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실, 아까 보여 드린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을 고려해서 비수도권에 3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차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도한 수준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것하고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소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기본으로 25만 원 돼 있는데 이 정도를 기본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배려를 더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이번 정부가 5년이 지나고 나서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기존과 다른 진일보한 정책을 냈던 정부로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득, 자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경제정책 그리고 예산 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1차관님께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가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경제적인 방향을 계속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예결위에 합류한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조정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펼쳐질 일들의 어떻게 보면 중대한 징후라고 생각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걱정이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리 국가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제가 이해하기로는 7월 4일까지 무조건 이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에서 하시는데 결국 취임한 지 한 달 안에 취임 선물 주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굳은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국 25만 원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당선 축하금을 주겠다라는 주장인데요.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기재부에서 나오신 분들,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0조 규모의 추경이고요. 그다음에 이 재원의 대부분은 빚을 낸 거지요? 맞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정훈 위원 국채 발행이 얼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19.8조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꼭 집은 외평채 3조 감축도 솔직히 국채로 때 온 거니까 22.8조 맞지요? 외평채 감축도 국채 발행해서 메꾸는 것 아닙니까? 예산정책처, 질문이 틀렸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예산정책처가 이렇게 지적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외평채 축소를 안 하게 되면 추가로 국채 발행분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스위치되는 문제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30조 추경 하느라고 22.8조 국채 발행한 겁니다.

제가 22.8조의 국채 발행을 5100만으로 나눠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인당 내야 될 추가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만 원입니다. 결국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 이게 추경의 핵심입니다.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

이 국채 발행, 이재명 대통령 호주머니에서 돈 내는 것 아니지요? 결국 국채로 메꾸는 건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고 사사오입, 제 계산 틀리지 않았으면 전 국민에게 45만 원씩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게 추경의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차관님, 이번 추경의 목적이 뭐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진작이고 두 번째는 민생 안정입니다.

○조정훈 위원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제가 왜 이게 안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가장 걱정되는 것,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꼭 질

문하라고 하는 것, 부동산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 분들이라.

통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난리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6월 네 번째 주 일주일 동안 서울 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한 0.9%, 제가 사는 마포구는 0.98% 뛰었습니다. 월간이 아니고 주간이에요. 이걸 1년으로 바꾸면 67% 뛸 겁니다. 6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된 겁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지요. 우리 서민들, 청년들 4억을 벌 수 있는 그 기간이 평생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정부 30평 아파트 따져 보니까 80% 올랐어요.

국토부, 누구 나와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부장관입니다.

○조정훈 위원 왜 그런 거예요?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유가 뭘니까, 도대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특정 정당하고 부동산 시장을 직접 관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조정훈 위원 하여튼 사실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역사적으로 보면 IMF……

○조정훈 위원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다른 상황이 있었을 때……

○조정훈 위원 차관님,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조정훈 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건 사실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진보 정부마다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정부 또 여전히 국민들이 폭등하는 부동산을 따라잡으려고 지금 다들 힘겨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내놓은 게, 지난주 아주 폭탄 대책을 내놓으셨지요? 6억 이상 대출 못 받게 하는 거.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토부에서 대통령실하고 상의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발표된……

○조정훈 위원 대통령실하고 상의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상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왜 대통령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소관 부처가 금융……

○조정훈 위원 아니, 임명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실입니까? 상의하셨다 그랬지요? 그러면 그 대변인은 핫바지입니까, 아니면 거짓말한 겁니까? 분명히 상의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했고요.

○조정훈 위원 대통령실도 동의한 겁니까? 반대하지 않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정책을 실패했다고 사과를 할 일이지 이걸 금융위의 정책이고 대통령실은 모르는 일이다?

금융위 관계자 나왔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관계부처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율을 했고요. 대변인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그 이후에 정정하는 내용으로 기자단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왜 이렇게 벌써부터 잘하는 거는 다 우리 거, 못하는 거는 나가는 공무원들한테 덤터기, 미안합니다. 말을…… 제가 사과합니다. 이렇게 다 변명식으로 하는 정부, 저는 이렇게 이런 식의 정책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우리 국민들의 가장 많은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뚝뚝하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정치하기 전에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수십 개 나라 정책 자문해 봤는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1%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67%의 부동산 가격 인상,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0평짜리 부동산이 80%나 뛰는 이 상황, 결국 답은 저를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6억 이상 주담대 금지하고 나면, 그렇다고 15억 이상 20억 이상 부동산 거래 금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차관님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현직 국토부장관입니다.

○조정훈 위원 장관님, 그러면 대출받아서 못 사는 사람들의 기회를 결국은 현금을 쌓아 놓는 알짜 현금 부자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일부 외국인들은 살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번 대책은 시장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정훈 위원 살 수 있지요?

장관님, 제가 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그거는 저한테 질문을 안 하셔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왜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정훈 위원 아니, 확인을 하기…… 장관님이 위원의 질문 방식에 대해서 지금 훈계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요 과연 이 정책이 무엇을 억제하고 어떤 시장을 새로 만들 것 같습니까? 젊은 이들과 어떻게든지 인서울, 인강남 하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이 꺾이는 아니지요. 돈 열심히 벌어서 살고 싶은 지역 그리고 값이 조금 오를 것 같은 지역에 아파트를 사는 국민들이 꺾이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비현실 정책을 대통령실하고 조율했는데 대통령실은 부인하면서 막 혼란을 내면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니까 민주당 정부가 집권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어떻게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혹시 15억 이상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 편 적 있지요? 이런 것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현재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부동산 6억 이상 주담대 금지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하면 추가로 무슨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기본적으로 가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양쪽 두 바퀴 정책을 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번 정책이 효과를 보는 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얼마나 안정시키려고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시장에는 많은 가수요로 인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리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장기적으로는 수급 상황에 근거해서 결정될……

○조정훈 위원 장기적인 얘기 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급하게 막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이 시작하자마자 올라가니까 이것은 지금 초단기, 공급을 확대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수요를 막겠다 이런 정책 아닙니까, 솔직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단기 정책과 중장기 정책이……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단기니까 두세 달 내에 부동산 가격 떨어집니까? 자신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시장 상황을 예의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금융위원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이거 금융위의 생각이예요,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요구한 정책입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너무 빠르게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고 가계부채도 5월, 6월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효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의 금등세에서는 약간 진정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은 거시적으로, 저도 백번 양보해서 조금 진정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관님, 미시로 내려가 보면 강남 아파트,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현실적으로 청년들과 조금 대출해서 사고 싶은 분들을 완전히 막은 거예요. 시장자본, 시장경제를 운용하고 주택도 상품이란 것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어떤 상품이 누구는 돈 있어도 살 수 없고 누구는 돈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런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 규제라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예요. 이것이 가져올 효과, 거시적으로 한두 달 새 잠깐 집값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청년들 열심히 일해서, 맞벌이해서 서울 주요 지역에 아파트 하나 사고—크게 바라지도 않아요—어느 정도 자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안겨 준 거예요. 부모한테 증여받아서, 상속받아서 현금 쟁여 있는 사람 지금 신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우리 사회를 가르는 정책을 함부로 하고 대통령실이라는 곳은 다 조율하고 다 아는 건데도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금융위 정책이지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 발 빼고 앉았고 정말 시작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

작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부동산 정책 함부로 건들지 마십시오. 실력 없으면 그냥 못 하겠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다섯 번 했어요. 그 결과 다 아시지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부동산 갖고 모든 국민이 씨름하고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불로소득, 투기에 모든 국민이 매달리는 나라 제발 좀 만들지 마시고 민주당, 이번만큼은 제발 실력을 발휘해서 부동산 폭등을 막아 주십시오.

추경으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기재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용에 따라 19조 8000 또는 22조 8000 그래서 결국 45만 원 세금 더 걷어서 25만 원 나눠 주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나머지 10조는 도대체 어디서 빼 왔나 봤더니 참 안타깝고 화가 나는 데서 빼 오셨어요. 제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교육위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이번 추경 10조 마련하시느라고 다른 여러 예산, 부처에서 진짜로 많은 예산을 자르셨어요.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당한 부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차관님? 교육부예요.

교육부차관님, 틀립니까, 제가?

○**교육부차관 오석환** 외형적 규모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규모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얼마 삭감됐습니까, 지방재정교부금 포함해서?

○**교육부차관 오석환** 약 2조 원입니다.

○**조정훈 위원** 넘지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요.

얼마예요? 2조 얼마입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 삭감 규모가 2조 6569억 원입니다.

○**조정훈 위원** 2조 6000억이면 반올림해서 3조지 그걸 어떻게 2조라고 그러세요? 2조 6000억 원, 10조 뺏아내는 데 교육에서 뺏아내셨어요. 참 못 할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그중에 한 1000억 가까이를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근로장학금용으로 만들어 냈는데 거기에서 빼셨어요. 그러면 2학기에 우리 대학생들 근로장학생 할 근로장학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14만 명에게 줄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런데 뭘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너 일해서 줄 돈, 일자리는 없애는데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우리가 돈 줘. 15만 원, 20만 원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일해서 돈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너 입에 넣어 줄게, 뭐 이런 정신을 대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 기성세대,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겁니까?

근로장학금까지 탈탈 털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15만 원, 20만 원 주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빛내서, 45만 원씩 국민들한테 다 뺏아서 15만 원, 25만 원 나눠 주면서 생색내겠다고요? 게다가 대학생 근로장학금 1000억까지 뺏어 가지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나가는 데 쓰겠다고요? 그러면서 이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말 일하는 사람,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나라를 위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존경하는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말씀 듣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몇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우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노종면 위원 언제 취임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23년 12월 23일 날 취임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이 넘으셨네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당 의원이, 얼마나 일을 안 하셨으면 그 당시 여당이었던,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 소속 의원께서 장관님 얼굴도 모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상임위원회가 달랐고요. 제가 모자랐던 탓이 아니겠습니까.

○노종면 위원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이 안 됐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6월 4일 날 취임식 했으니까요, 예.

○노종면 위원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의 문제는 어느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시장의 흐름이 물 흐르는 것과 같아서 딱 잘라서 어디까지 누구 책임이고 어디까지 누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유가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대책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시던데 그런 부분이야 추후로 또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지 파악하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당연히 대책이 나오면 시장을 예의 주시합니다.

(한병도 위원장,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노종면 위원 어떻게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부에게 지난 3년의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했던 당시 여당의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전에 다른 말씀 하시면서 언급했던 도덕적·윤리적으로도 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푸는 결정 어디 쉽게 하겠습니까? 어려운 결단으로 또 대통령선거라는 계기를 통해서 공약으로 국민의 지지를 득한 다음에 그야말로 어렵게 어렵게 하는 것인데 그게 대통령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재정을 풀 때 안 풀어서 민생 경제가 파탄이 나고 경제가 침체된 책임은 그 당

시 정권을 담당했던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내란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아직도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결단의 차원으로 재정을 풀겠다는데 현금 살포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점이 가슴이 아픕니다.

행안부에서 직무대행님은 나오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자리에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 지난 추경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에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었고요 작년에 3000억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3000억을 했나요, 3년 동안?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정부 지원 예산은 그거보다 조금…… 그 정도 됐을 걸로……

○노종면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여쭙보는 겁니다. 65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 추경에서 4000억이 편성이 됐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노종면 위원 그리고 이번에 6000억을 더해서 올해 1조 원 규모로 확대가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할인율을, 지역화폐를 사용했을 때 부가되는 그 혜택, 할인율 언제 인상된, 올라간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이번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종면 위원 이번이라 하면……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추경 집행하게 되면.

○노종면 위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차가 걸릴 것 같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추경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집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발표하고 빠르면 7월 내에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7월 초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7월 내이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할인율이 적용되게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고요. 하여튼간……

○노종면 위원 지역화폐 할인율 적용.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할인율 적용은 2차 추경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월 정도에, 지금 1차 추경 것도 다 소비가 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아마 9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으로 인해서 좀 올라간 할인율이 있고요 이번에 2차 추경이 반영되면 할인율이 더 올라가도록 설계가 돼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그 예산이 다 소진된 다음에야 인상된 할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노종면 위원 그거를 통합할 수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제 2차 추경이 통과되면 새로운 지역화폐 할인율이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노종면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사용하면 1차 추경 때 거라서 할인율이 지금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검토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이런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고 우리 국회에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 들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노종면 위원 지금 사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기재부 중심으로도 지방재정협의를 6월에 했었고요,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기 전에. 또 행안부도 시도 부단체장들 통해서 기초실장들하고 이렇게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역화폐 할인율이면 국비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협의가 끝났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저희가 지방재정도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용할 자원을 좀 잘 만들어서 신속하게 추경을 해서 중앙과 정부가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극복해 가자고 했고 일반적으로는 정부 지원이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요. 잘 협조해 주기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역화폐 사용할 때 할인율이 어느 정도 되면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연구하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직접……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상공인·자영업자에는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할인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이 떨어졌어요. 예산을 덜 주니까 지자체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두 자릿수까지 올려놨던 할인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노종면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전부터 할인율을 최소한 1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번에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것 보니까 지금 불교부단체, 그러니까 재정이 넉넉한 일부 지자체를 빼놓고는 대부분 다 10% 이상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했더군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최대 15%까지 할인율 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이게 지금 전국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

울 등 불교부단체 여기를 빼면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또 인구감소지역으로 나뉘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런 각 지방정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국비 지원 수준을 다 달리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서울 등에는 2%, 수도권에는 5%, 비수도권은 8%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은 특별히 10%를 지원하고 여기에 지방정부가 5%씩 더해 달라 이게 2차 추정안의 골자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국비로 지원하는 퍼센티지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전부 다 촘촘하게 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4개의 부류로 나뉘었는데, 분류를 했는데 지자체에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은 왜 획일적이지요? 이것도 차등을 둘 수 없습니까? 이게 자칫 좋은 정책을 펴려다가 모든 지방정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다, 혹시라도 일부 재정 자립이 좀 떨어지는 지방정부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할인율 1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타당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는 선이라면 각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매칭해야 되는 지방비 비율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입장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할인율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부정 유통으로 하려는 그 기대감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을 함께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직무대행님, 제 질문하고 계속 뭐가 좀 안 맞아요. 지금 그것은 할인율을 높여 달라고 할 때 하시는 답일 것 같은데 할인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높이는 기준이 잡혀 있다면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지는 지방정부는…… 지금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5% 이상 다 붙이라고, 지방비 매칭을 하라고 하는데 이 수준을 좀 낮춰서 10% 이상의 최종 할인율은 취하더라도 지방이 해야 되는 부담은 좀 줄여 달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그 부분 그러면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지자체 간에 좀 달라요. 그렇지요? 서울은 7 대 3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8 대 2고.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8대 2입니다.

○**노종면 위원** 이걸 좀 상향 조정할 필요성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비의 지원 폭을 좀 늘리는. 이게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부분이라는 거지요. 예산 부담이 좀 되더라도 국비의 반영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지방정부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에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위원님, 저희는 지방의 입장을 보다 많이 대변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조정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도 조금 더 국비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그 전제하에서 각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부담 비율을 세분화하는 것, 이것까지도 좀 고려해 달라. 일률적으로 서울은 7 대 3, 나머지 지방정부는 8 대 2 이렇게 하면 그 20%가 어떤 지방정부한테는 너무 힘든 퍼센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비 부담 폭을 좀 높인다고 전제를 하면 그 높이는 정도를 지역에 따라서 차등해 주실 수 없을까, 지방정부의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우 장관님, 건설 경기 부양에도 지금 추경예산이 일부 투입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번 추경으로 당연히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사실은 좀 더 많이 담고 싶었는데요.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제한적입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대책 꼭 예산으로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노후 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된 곳의 재건축 움직임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대로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저는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전국에 노후한 도시, 원도심, 생활 불편이 가중돼 있어서 공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곳들이 신도시에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국 여러 곳에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 신도시보다 훨씬 더 노후된 전국의 여러 원도심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지금 노후 계획도시 사업의 선도지구로 진행된 곳 같은 그런 사업 정상화, 재건축이 좀 더 힘있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말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노종면 위원 그러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포함되는,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대상지를 좀 더 확장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현행법에 연접한 경우는 확장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고……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제한적이라서…… 처음에는 신도시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 열어 줬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열어 준 게 있고 또 독립적으로 원도심을 겨냥하는 특별법안이 이미 국토위에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더 전국이 난리입니다. 저도 40년 넘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게 제 아파트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곳이 너무 많아요. 신도시만 지원해 주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상식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부에도 그런 질문이 가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지하화 부분도 잠깐 여쭙어보겠습니다.

철도 지하화는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스를 수 없는 국책사업의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난 정부에서 선도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노종면 위원 그걸 보면 거기만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파트야 선도지역 지정해 놓으면 여기하고 다른 데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철도는 일직선이잖아요.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는 철도에 한 역사를 지하로 넣었어요. 그다음에 사업을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법은 존재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지방의 선도지구 발표한 곳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골라서 했고요,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는 다 하나의 단일 노선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은 경인선, 경의선, 경원선 등이 전부 다 연계가 돼 가지고, 서울지하철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을 목표로 서울시, 인천 또 경기도, 저희 부 해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전 구간이 동시에 사업 대상이 돼야 하고 계획도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 입장도 같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소영 노종면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김위상 위원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백번 동감하고 추경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목적이 분명하고 또한 재원 조달 방식이 납득될 수 있다면 내수 진작과 소비심리 개선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70%가량이 국채 발행으로 조성됩니다.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서 편성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매우 우

려되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차관 나오셨습니까?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에 소비 활성화하고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증진시키고자 한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은 15만 원씩, 일반 국민은 25만 원씩, 차상위계층은 한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맞습니다.

○김위상 위원 문제는 전 국민 소비쿠폰의 소비진작 및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살포했던 전 국민 지원금의 경우 지급액의 26~36%만 소비로 이어져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 대비하면 10조 원 중 시장에서 실제로 돌게 될 돈은 2조~3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 역시 정부가 직접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거나 상품을 조달하면 68%의 재정 승수효과가 있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과 같은 현금을 나눠 줄 경우에는 22%의 효과만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차관님,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위상 위원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위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추경을 편성할 때 지출 항목별로 직접적인 효과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또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효과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전반적으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내수가 부진한 것까지 같이 감안하면 지난번 지급보다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그리고 20년, 21년 했을 때는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비대면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대면 상태가 해제되어 있는 상황이니 그 당시보다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김위상 위원 그러면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연구한 구체적 데이터,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또 지역화폐의 경우에 화폐 발행 직접 인접 지역의 소비만 줄이고 소비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 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가 실물경제에 오히려 재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차고 넘치는 데 반해 그 효과를 입증하는 유의미한 데이터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차관님, 이렇게 보면 차라리 저소득층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쉬었음 청년, 체불 노동

자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방향에 100%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추경안에 그런 정신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렇게 충실하게 반영되었는데 저소득층 청년들이나 쉬었음 청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지 차관님 잘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위상 위원 그리고 작년에 체불 노동자들이 몇십만 명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확실히 수치를 짚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작년에 우리 체불 노동자가 28만 3000명입니다. 체불임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4년도 기준에 체불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재정부차관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체불임금하고 관련된 문제도 결국에는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가 선순환 되면 나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상 위원 노동부차관님, 작년에 체불임금이 얼마였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한 2조 조금 넘었습니다. 2조 400억 정도……

○김위상 위원 예, 2조 400억이나 되지요.

체불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가 28만 명이 넘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예, 맞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고 또한 어려운 경제계에서도 임금을 못 줘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소비쿠폰 이런 부분들에 낭비하지 말고 저소득층 근로자 또는 쉬었음 청년 또 체불 노동자, 특히 체불 노동자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소속된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으로 예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월급을 떼이면 수개월 뒤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망선고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차관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

○김위상 위원 노동부차관님?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42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게 수치가 좀 엇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기준 (청취불능)에 따라 달라서……

○김위상 위원 전국 평균이 한 350만 원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350만 원 다 달이 월급을 받아서 이제 생활경제를 이어 나가고 또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체불이 이만큼이나 되는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소비쿠폰 예산을 가지고 체불 노동자들 임금을 줬더라면 한 다섯 번은 줬을 거예요, 다섯 번. 한 10억 3000억을 가지고, 지금 체불이 작년에 2조가 조금 넘는데 그런 돈을 소비쿠폰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자영업자나 또는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좋기는 좋습시다라는 이런 예산을 진짜 긴요하게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 소비쿠폰 10조 3000억을 예를 들어 푼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느냐, 결국에 한 20% 정도밖에 그 돈이 돌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비쿠폰을 만들어 가지고 없는 돈을 빚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결국에는 소비·매출로 소득 선순환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현장의 아픈 분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소득 근로자, 쉬었음 청년 그리고 체불임금 관련된 지금 현장의 아픔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항목 관련해서 추경 항목에 꼼꼼하게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위상 위원 그런데 추경 항목에 꼼꼼하게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소득층 근로자들 또는 체불임금 노동자들 또 쉬었음 청년들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이 많이 됐겠습니까, 거기에.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소비쿠폰을 가지고, 현금 살포나 소비쿠폰을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왜 정부가 자꾸 돈만 빚내 가지고 국민들한테 풀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데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전 국민 중에 15만 원에서 25만 원이 급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급하지 않은 분들. 하지만 절실한 분들에게는 200만 원, 300만 원은 생계와 진짜 직결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심의할 책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의 골든타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비쿠폰 묶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원점 재검토하여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안을 새로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께서 걱정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 근로자, 쉬었음 청년 그리고 체불임금 근로자하고 관련된 포인트 지원도 나름 또 별도의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전 국민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서 그 효과를 추정·검증·분석한 보고서가 있다면 예결위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 상품권 발행사업자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한 업체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등 특정 업체에 매출과 수수료 수익이 집중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역사랑상품권 계약 주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고요. 그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나름 판단해서 별도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특정 업체의 안정적 수익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이 4개월로 설정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비되지 않는 상품

권은 4개월 경과 후에 자동 소멸하게 되었음에도 발행수수료는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돼 예산 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차관님,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이 두 가지 독점·유효기간 문제 우려를 종식할 대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발행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제 계약을 맺는 주체인 지자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알겠습니다.

노동부차관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1651억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맞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런데 정작 꼭 필요한 부분에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선발형 기준이 대폭 상향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기준이 기존 몇 점에서 몇 점으로 상향되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구체적 점수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위상 위원** 제가 차관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 72점이던 선발 점수가 90점으로 대폭 올랐고 특정 항목 배점을 낮추면서 선발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2년 이내 취업한 기간이 30일 미만 청년은 해당 사유만으로 16점이 감점되어 신청 자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정된 예산으로 제도를 이어 나가야 하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면 청년구직자 상당수가 기준 미달로 인해서 제도권 내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수를 보면 차관님 보시기에도 이 허들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년처럼 맞추어야 됩니다. 맞추어야 되고, 예산 부족이 문제라면 이번 추경에 분명히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청년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그냥 보고 있습니까, 노동부가? 절대 안 되지요, 이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 대상이 아까 위원님도 가장 많이 우려하셨던 저소득층이어서 저희가 저소득층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상당수가 청년입니다, 위원님.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환노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논의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그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과도하게 상향된 선발 점수 기준 이 부분도 정상화시켜 가지고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그것 한번 현장 실태를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또 예산이 부족한 문제라면 이번 추경에라도 부족분을 증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김위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경남 창원시의장의 김종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양 위원** 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이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성장과 통합 기조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 있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겸 1차관께 질의를 합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2차관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차관님, 이번 추경안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기조와 가치에 따라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어떤 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기본적으로는 경기진작과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양 위원**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편성되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이번 추경은 민생을 위하는 척하며 표심을 사로잡으려는 재정 포퓰리즘의 시작이자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국가 채무를 670조에서 1126조로 늘린 문재인 정부 시즌2의 서막이라고 하면서 당선 축하금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무디스에서 이번 제2차 추경과 관련해서 성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채무 부담은 있겠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것도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평가를 내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평가를 상당수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소비지원금과 같은 이전지출은 대폭 증액한 반면 SOC 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는 축소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SOC 사업과 관련해서 호남지역 SOC 사업은 크게 증액된 반면 영남지역 SOC 사업은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 이전 문제가 아니냐라는 말씀하고 관련해서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정 총량 그리고 부문별로 봤을 때 민간 소비가 지금 실제 마이너스인 상황 그리고 소매판매가 15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 이런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기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SOC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국민 부담과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액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로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은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양 위원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분석대로 지역적인 불균형 문제라든지 SOC 사업 투자 부분을 갖다가 감액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가 하여튼 입으로는 성장과 통합, 경기진작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이와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그런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데 일회성 소비지원금과 SOC 사업 중 어느 것이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재의 경기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분석해 봤을 때 두 가지 다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종양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안의 세출 20조 중 대부분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전지출 성격인 반면에 SOC 사업은 당초 본예산보다도 오히려 353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국토부장관께서도 연내 지출이 어려운 SOC 사업을 선별·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기재부차관께서도 동일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종양 위원 그리고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를 것 같으면 SOC 감액된 3530억 원의 경제 효과는 9979억 원이고 취업 유발 효과는 3859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SOC 감액을 하면 이러한 경제 및 고용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텐데 이런 면에서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이라는 현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차관님,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 재정을 늘릴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같은 돈을 지출하더라도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SOC 예산을 줄여 가면서까지 전 국민에게 민생 쿠폰 15조 2000억 원을 나누는 것이 현명한 경제정책 판단이라고 보시는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SOC 사업을 줄였다는 지적하고 관련해서는 금년 내에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줄인 게 아니고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차 추경 때는 저희가 SOC 분야가 2.7조 원,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요. 1차 추경에도 저희가 2.5조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5조 원이 넘는 규모를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원래 집행이 안 될 사업을 이번 추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출 구조조정, 특히 SOC하고 관련된 구조조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오히려 집행 안 될 사업을 집행될 사업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SOC 전체적으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분명하게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우리 차관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올해 SOC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 불가능한 그런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긴급하게 집행을 해야 할 그런 SOC 사업도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SOC 사업을 줄였으면 다른 필요한 SOC 사업 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경기진작을 위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줄여 가지고 민생 쿠폰 등으로 활용했다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민생 쿠폰도 일부 경제효과는 있을 겁니다. 재정승수가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0.33이고 그렇지요. 공공인프라 등에 투자를 하면 그 배 이상인 0.865의 승수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불필요한, 집행 불가능한 그런 SOC 예산을 갖다가 민생 쿠폰 등에 지출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SOC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로는 이재명 정부가 민생안정, 경기진작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오히려 당선축하금과 같은 그런 지출이 아냐는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SOC 감액이 아니라 최소한도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회복시켜서 SOC 투자 확대를 해야 경기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이번 추경에서 SOC 사업에 대한 선별과 조정을 정부가 충실히 균형 있게 했다고 보시는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무슨 지역적인 고려나 지역적인 차별보다는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서 금년에 집행 안 될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금년에 집행해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은 증액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종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 SOC 사업과 관련한 지역별 조정 내역을 보면 교통시설특별회계 SOC 감액이 영남지역은 7545억 원이고 전체의 77.9%입니다. 그런데도 호남지역은 감액된 것이 367억 원으로 3.8%이고 증액된 부분을 보면 영남지역은 300억 원으로 4.9%이고 호남지역은 2204억 원으로 35.8%인데 이것을 누가 제대로 균형감 있게 조정·선별한 결과라고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역별로 어떤 사업이 늘고 어떤 사업이 감액됐는지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별로는 철저하게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은 감액하고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증액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제가 지역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SOC 사업이 매우 중요한 것은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더욱이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가지고 호남고속철도의 준공시기가 3개월, 6개월 단축된다 하면 호남지역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원래 있던 SOC 투입 7500억 원이 사라진 지역도 있습니다. 차관님, 7500억 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었다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해당 지역은 경제·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혹시라도 지금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감액된 SOC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서 빨리 해결돼서 26년 예산은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대폭 삭감된 영남지역의 그런 집행 불가 사업은 제외하더라도 삭감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의 SOC 추가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정확히 주시면 예산소위 하는 과정에서 잘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거는 세대별·지역별·성별·연령별 그리고 정치이념별 통합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통합이 가장 우선된다고 보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해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정부 초기부터 영남 차별, 특정 지역 패싱이라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특히 우리 예산 당국에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또 지역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긴밀히 의논, 협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지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래요. 지금 추경은 2차, 3차 계속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곧 또 본예산 시작되니까, 특히 SOC 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한 협의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예비타당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 진행되고 있는 추경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차관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말씀 주시는 과정에서 살짝 언급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냐 그런 취지의 질의라고 이해가 됩니

다.

○**김종양 위원** 지금 내년부터, 2026년부터 시작되는 3대 SOC 사업계획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예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여러 가지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한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인,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부채 탕감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데 저는 예비타당성과 이번 추경의 부채 탕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부채 탕감도 정의·공평 이런 부분에, 신뢰성 이런 부분에서 평가한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비타당성도 오로지 경제성만 따진다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 있어서는 경제성보다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면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충분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도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감사합니다, 김종양 위원님.

존경하는 울산 남구갑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조정훈 위원님께서 근로장학금을 빼서 이번에 소비쿠폰을 발행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가 싶어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급히 제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천만다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 좀 바로잡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이 부분 기재부에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본예산 다 한 후에 집행 정도를 봐서 또 감액할 건 감액하고 증액할 건 증액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맞습니다.

○**김상욱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초 본예산을 짤 때 예를 들어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집행해 보니 그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돈이 남을 것 같고 그러니 그 돈을 다른 데 쓰자, 그런 추경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근로장학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지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고요. 대신……

○김상옥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본예산 짤 때 2024년 본예산에서는 14만 명 기준으로 4691억 원 정도를 예산 책정했다가 이번 25년 예산에서는 20만 명으로 대폭 늘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도 6274억 원으로 많이 늘려 잡았는데 이때는 근로장학생들 더 독려하려고 이렇게 잡으셨던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1학기 신청률이 얼마 안 나왔다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래서 지금 추정해 보니까 올해 말까지 해도 14만 7000명 그래서 4996억 원 정도밖에는 집행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1000억 원 이상 집행 못 하는 예산으로 남을 것 같다고 기재부에서 예상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 통상 이렇게 예상하면 거의 그렇게 가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저희는 이 부분 추계하고 관련해서 기재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요 관련되는 부처하고 같이 객관적으로 추계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상옥 위원 여기 교육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차관님 어떻습니까? 추계가 맞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근로장학의 필요성 그리고 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학기 때 저희가 집행가능 실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안타깝게도 지금 교내외 근로지 운영하는 그게 예상보다 적어서 대략 약 1000억 정도의 불용이 예상돼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상옥 위원 결국 그러면 집행할 예산을 집행 안 해서 이쪽으로 당겼다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 어쨌든 집행할 수 없어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재원을 조달한 건데 이렇게, 사실 지금 질의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이런 자료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잘못된 질의와 잘못된 사실 주장으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걸 여쭙보려고 했는데 먼저 바로잡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김종양 위원님께서도 SOC 사업을 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 마찬가지로 불용예산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 가덕도신공항 문제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과 사업비 예산은 예상대로 집행이 되는데 시공사와 문제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할 수 없게 된 예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김상욱 위원 그것 집행 못 하는 상황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한 5200억 정도의 공사비가 올해는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 예산은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제가 바로잡은 게 맞지요? 제가 드린 말씀에 틀린 건 없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지금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들이 현명하게, 균형감 있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김상욱 위원 왜곡이 일어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 일어나거나 또는 국민들께서 오해할 만한 그런 주장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번 더 바로잡고요. 저희도 질의할 때 정말 사실에 기반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질의하도록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훈 위원님과 김종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좀 사실과는 일부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바로잡았습니다.

(이소영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비쿠폰 관련해서 제가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토론을 7시간 반 동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반대할 때 반대 논거가 첫 번째는 헌법에 위반된다. 취지는 행정부에서 예산을 짜서 국회는 그것을 감액 심사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부에서 가져왔으니까 헌법에 합헌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충분히 승수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이것이 일시적으로 거대한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특수 사정에 있어야만 한다, 그게 사회적 재난 정도에 해당하는 사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작년 6월, 7월이 과연 사회적 재난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그때 좀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소비쿠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대선 기간 때 동대문 야시장에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상인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월 3일 이후에 관광객과 매출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지역 시장이나 여러 군데 방문하면 자영업자들 다 하시는 말씀이 ‘12월 3일 이후에 너무나 살기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오는 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12월 3일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동이나 아니면 음모론에 진영 갈등을 겪지 않고 좀 빨리 제도가 정상적으로 기능했다면 그렇게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이 반년이라는 긴 시간일 필요가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12월 3일 이후에 그 후 6개월 동안 있었던 이 사회적 재난은 우리 정치가 만들어 낸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민들을 받들고 모시고 더 행복하게 해 달라고 정치를 맡기셨는

데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사회적 재난을 일으켰고 6개월 동안 처참한 서민경제 파탄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 피해를 그분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수해가 났을 때 국가 전체가 나서서 수해 이재민을 돕듯이 12월 3일 이후에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이 사회적 재난은 국가가 특히 우리 정치권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집행하는 소비쿠폰, 4개월로 시간 제한을 두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저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비부양, 우리 내수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특히 서민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한계선에 몰린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수혈의 의미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충분히 효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와 기획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내고 또 어떻게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획이 있었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게 선언적으로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경제 여건과 같이 봐서 특정의 경제 여건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의 경제 여건하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총량의 문제, 분배의 문제 그리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경제지표 이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기의 실상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했는데요. 소득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왜? 계층별로 소비에 실제로 투입되는 효과가 다르니까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서 현장의 고통을 속도감 있게 완화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조기 집행하고 맞춤형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또 차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1·2차 나눠서 집행하는 것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설계를 할 때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 수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비 증진 수단으로 기획을 하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두 가지 효과를 저희는 동시에 기대하고 있고요. 일단은 소비 촉진될 거고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연계가 될 거고요. 이게 다시 또 소득으로 연계가 돼서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귀한 국민들의 세금이 쓰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곳 없이 정말 승수효과가 가장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기획과 또 방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상욱 위원** 좀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PF 앵커브릿지 마중론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던데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상욱 위원**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PF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토지매매대를 지급하기 위한 브릿지론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본대출 일으켜서 브릿지론 상환하고 그다음에 본 PF 일어나고 마무리되고 이렇게 흘러갈 텐데 지금 앵커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브릿지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재정을 쓰겠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브릿지론을 대체해 주기 위해서 리츠 방식으로 해서…… 브릿지론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율의 이자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 예산은 건설경기를 좀 살리기 위한 경기진작용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상욱 위원** 제가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쭙보는 건데 사실 부동산 PF 과정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인한 금융사 부실 문제 또는 준공 전에 시행사·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들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브릿지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사실상 사업 시행자 외에는 별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걸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건설경기…… 건설회사들에 새로 일감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재정 역할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굉장히 고율의 이자로 조달하는 것을 저율로 해 줘서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꼭 주택 사업이 아니더라도 데이터센터라든지 무슨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PF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상욱 위원** 이번에 예산 배정된 것은 제가 충분히 참작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된 주택 사업으로 가거나 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리스크를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다면 일반 사금융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브릿지론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사업의 성패에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건데 이것이 자칫……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브릿지론이 일어나기 힘든 또는 그것으로 해서 사업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경우에 앵커브릿지론이 들어갈 텐데 달리 말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국가재정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득 보는 것은 사업자에 불과한 건데, 일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사업자가 아니고 이것은…… 물론 공공이 사업 주체는 아니지만 저희가 특히 지방의 건설경기를 불러일으켜서……

○**김상욱 위원** 제가 시간이 조금 제한돼 있어서 먼저 말씀 올리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방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김상욱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수도권에서는 앵커브릿지론 필요 없이 브릿지론이 잘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방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된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된 현장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공 후 미분양 또는 준공 전에 사업자 부도 이런 부분들에서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 없이,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초기인데 지방에서 지금 준공 후 미분양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진 것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건데 여기다가 추가로 사업성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급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앵커브릿지론을 하는 건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미분양 주택만 보시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사실 이것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데 자금 조달 코스트가 높아서 전체적인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오는 사업들에 주로 쓸 겁니다.

○김상욱 위원 지금 앵커브릿지론 대상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제가 제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앵커브릿지론을 한다 하더라도 소수 부동산 시행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요. 정말 예를 들어 지역에 가면 AI데이터센터나 여러 가지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데 브릿지론을 일으키기 힘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공공을 위해서 앵커브릿지론이 기능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저희도 지금 선정 기준 마련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마련하고 AMC 모집할 텐데……

○김상욱 위원 선정 기준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지적사항 그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선정 기준을 정말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좀 엄격하게, 그래서 소수의 사업자들이 이득 보는 형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코스트 문제 때문에 론칭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박덕흠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김상욱 위원님께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잘못된 질문, 잘못된 답변에 국민들이 현혹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추가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아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아니, 제 이름을 명시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병도 그건 다음 질의에 충분히 추가질의…… 위원님은 아마 10분 정도 질의가……

○조정훈 위원 아니, 이건 신상발언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아니요, 그렇게 하면……

○조정훈 위원 제가 잘못된 질문을 했다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민주당 위원님께서.

○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또 어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계속 이게 논쟁이 되기 때문이에요.

○조정훈 위원 저는 다른 위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아니,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가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정훈 위원 모든 국민들이 지금 제가 잘못된 질문을 했다고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병도 그래서요 다음……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저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도 아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말씀을, 다음에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나와서 문제 제기하면……

○조정훈 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 한병도 다른 여당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신상발언을 또 요청을 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본인의 이름이 거명됐는데, 신상발언을 요청하는데 그걸 안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한병도 질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하시면 다른 또 야당 위원님께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여당 위원님들이 또 신상발언을 요청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님. 준비하셔서 김상욱 위원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내용을 준비하셔서 충분히……

○조정훈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내용을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위원장 한병도 다음 추가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그건 추가질의량은 다른 거 아닙니까? 제 질의가 잘못됐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추가질의할 내용입니까? 이건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도 아니, 계속 반박을 하다 보면 그러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조정훈 위원 지금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려고 그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야당 위원님이 또 문제 제기하면……

○조정훈 위원 김상욱 위원님이 또 발언을 하실 게 있으면 하시는 거지.

○위원장 한병도 다른 의견 있으면, 여당 위원님들이 또 반박하면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조정훈 위원 저는 제 발언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발언에 대해서 저의 진의가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도 자, 그것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반박의 내용은요……

○조정훈 위원 신상발언이 이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도 반박하실 내용은 충분히 다음 추가질의를 통해서 준비하셔서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추가질의는 질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보충질의가 있는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는 그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충질의는 본인의……

○위원장 한병도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면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걸 간단하게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1분만.

○위원장 한병도 또 똑같은 상황이 옵니다, 똑같은 상황.

위원님뿐만이 아니고요,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시면 여당 위원님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발언을 요청하면……

○조정훈 위원 저는 실명을 저한테 거론하면서……

○위원장 한병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조정훈 위원 그 영상만 보는 국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한병도 그래서 위원장은요……

(「위원님이 질의하는 영상하고 질문을 같이……」 하는 위원 있음)

○조정훈 위원 그럴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계실까요? 우연히 보시다가……

(「마이크 꺼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꺼 주십시오. 행정실 뭐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발언만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위원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개별 위원님들 간의 신상발언이 계속 반복되면, 한번 시작이 되면 여야와 관계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추가질의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나중에, 추후에 의사진행발언뿐만이 아니고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그건 아니지요, 위원장님. 이게 예산과 관련된 일인데……

○위원장 한병도 그것은 또 질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가질의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똑같이 여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발언 안 드리는 건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똑같이, 개별 위원에 대해서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여당 위원님들께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오늘 임기근 차관님 또 1차관 이형일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소비쿠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2차관님이 볼 때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박덕흠 위원** 그러면 지금 전 국민한테 돌아가는 건 15만 원씩…… 전 국민한테 지급되는 건 15만 원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22대 총선 때 또 대통령선거 때 보면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렇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 그리고 부문별 어려움 그리고 현장에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느끼고 계신 고통, 그게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제가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는 건 사실 선거 때 25만 원씩 전 국민 대상으로 주는데 지금 15만 원이라고 하니까 좀 실망들을 하는 게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별적보다도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해 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30만 원이면 30만 원씩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물론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15만 원이 기본이라는 얘기고요. 대다수 국민들은 25만 원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더 덧붙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25만 원 정도 되는 국민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따지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100만 명 국민 중에서 한 4400만 명이 그 기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거의 지급이 된다고 보는 것도 맞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게 꼭 그걸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만 25만 원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국민이 제일 많다 이렇게 확인 말씀 올립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했을 때 지자체 부담 문제에 대해서만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대한 지자체들의 추진 의지나 동의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자체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행안부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박덕흠 위원** 지자체에서는 이게 얼마나 많은 지자체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큰 틀에서는 환영을 하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재정도 지금 몹시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더 많았으면 하는 게 저희한테 주고 있는 의견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지자체들은 충분한 검토 또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도 시군 단위에서는 예산 삭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세수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추정 편성하고……

○**박덕흠 위원** 전에 비해서 군 단위에도 500억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어려운 여건이고요. 다만 이번에는 감액…… 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세를 삭감하지 않은 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PPT 2번 좀 틀어 주세요.

지역사랑상품권 배분액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게?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거?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기본적으로는 시도 지역별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정하게 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게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할인 혜택이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가 이렇게 결정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지금 수도권·비수도권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2차 추경인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결국 지자체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각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에 있는 지자체도 있고 또 인구소멸지역이 있는데 이런 쪽은 좀 배분액도 배분액이지만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편차를 좀 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은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것도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박덕흠 위원** 그거는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하고 재정자립도 열악한 지역은 좀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빗 탕감하는 문제 있잖아요. 지금 빗 탕감을, 연체하신 분들한테 탕감해 준다는 거 이게 7년 이상이 돼야만 혜택을 보는 겁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7년 이상 정도는 장기 연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추심의 고통을 심각하게 느끼는 분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파산 상태나 다름없어서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관계 당국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덕흠 위원** 이게 지금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4000억 원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그거를 16조, 22조, 123만 명이 혜택 본다, 113만 명이 혜택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채무 원금은 16조 4000억에 113만 명이고요. 그게 장기 연체다 보

니까 시장가격은 지금 거의 한 5% 정도로 거래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를 곱하고 그중에서 정부하고 금융권이 반반 정도 분담한다고 추정을 해서 계산해 보면 한 4000억 정도 재정 부담이 추산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 빚을 탕감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렵게 어렵게 빚을 탕감하신 국민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빚을 상환한 거 말씀하시는……

○박덕흠 위원 예, 상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래서 아까 기재부2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빚을 심사 없이 그냥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으로 해서 상환 능력을 정말 상실한 분들,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걸 심사해서 그런 분에 한정을 해서 저희들이 채무를 면제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 분들이 한 113만 명 된다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닙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 원 이상 부채를 가진 사람이 한 113만 명이 되는데 대상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상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얼마 정도 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 봐야 됩니다.

○박덕흠 위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봐야 된다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일단 일괄로 매입을 해서 심사할 생각입니다.

○박덕흠 위원 일괄로…… 그거 좀 주의 깊게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문체부장관님, 저희 지역에 영동이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9월 12일부터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박덕흠 위원 이게 23년도에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당초에 추진위에서 지자체는 올해 예산으로 31억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부안에서 이보다 적은 21억 원이 반영돼서 1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또 거기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기재부2차관님, 이것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 관련해서는 실제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 효과가 있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산소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박덕흠 위원 지금 기존 경부선 철도 노선을 활용해서 광역철도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 대전에서 옥천,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게 21년도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 증가가 많이 됐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덕흠 위원 대충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당초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

○박덕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KDI 타당성 재조사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덕흠 위원 언제쯤 끝나나요, 이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종료 예정 시간이 내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래 2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지금 늘어나서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게 대전시하고 또 인구 5만 군 단위 지역을 연결시키는 건데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만 인구소멸도 막고 지역경제도 활력이 되고 또 인구 유입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역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철도망 같은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도심과 도시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도시, 인구소멸지역 이런 데는 특별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님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기재부와 잘 협의하도록 부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대행업무는 기재부에서 담당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재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재 예, 그러니까 지자체가 자체 계약을 해 갖고 합니다. 집행계획 같은 것만 저희가 수립을 하고요.

○박덕흠 위원 그런데 250개 지자체 중에 조폐공사가 87개, 맞습니까? 코나아이가 49개, 진흥원에서 21개, NICE라고 있는데 거기가 9개,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재 그 현황 자료는 한번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수수료, 대행업무를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재 지금도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맺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아마 지급되게 될 것 같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차관님 몰라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1% 이내인데 다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덕흠 위원 1%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1% 미만……

○박덕흠 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나 하면 이게 특정 업체한테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지금 차관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런 우려가 그전에는 있기는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입찰을 통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선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선정을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박덕흠 위원 입찰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입찰도 하는데 그 입찰에 대한……

○박덕흠 위원 참가자?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선정하는 것을……

○박덕흠 위원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심의한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걸 선정하는 것을……

○박덕흠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덕흠 위원 정확하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깜짝 발표라는 형식만큼이나 내용 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치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시행한 부동산 규

제의 총합 같다는, 모습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것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신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것은 금융위가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했고 대통령실하고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율을 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대통령께 보고가 됐습니까, 실행 전에?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에서 어떻게 보고됐는지 부분은.

○**배준영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같이 공유한 거군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공유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핵심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핑계로 청년세대와 3040 맞벌이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공급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규제로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부동산 규제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역시 70%로 줄였고 주택기금 디딤돌과 버팀목전세대출 역시 전국 한도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생애최초·청년 디딤돌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신생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배준영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출한도 자체가 6억 원으로 축소되며 서울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127만 가구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결국 애꿎은 청년, 신혼부부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꿈꾸던 3040 맞벌이부부만 유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제 서울에 직장이 있어도 서울에 집을 갖는 것은 꿈꿀 수 없게 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대출과 관련해서 이번에 5월·6월에 대출 증가가 워낙 가파르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출 총량 부분에 조금 더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사실 다주택자나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분을 주로 타격을 했고요. 생초를 80에서 70으로 내린 부분은 사실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했던 부분을 정상화했다 이런 취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결국 규제 완화와 공급대책이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길 진보정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수요억제 정책을 했다. 그런데 시장이 이걸 이겨 내더라. 집값 문제는 지금부터의 민주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공급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밝혀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런 규제로 회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장관님, 지금 시점에서 여쭙보기 좀 먼구스러운 감이 있지만 국토부에서도 공급 관련 대책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참고로 지난해 8월 8일 날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국토부 주관으로. 그리고 한 열흘쯤 후에 금융위 주관으로 대출 규제를 한 적이 있습

니다.

그래서 같은 날 하루에 동시에 발표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시차를 두지만 항상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밸런스를 맞춰서 시장 정책을 해 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님, 요즘 들어 정부부처 명칭 변경, 특히 통일부와 관련해서 자꾸 군불을 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일부 명칭이 문제가 됐어요. 지난번에 정동영 통일부장관후보자께서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변경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다라며 평화를 적극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

차관님, 통일부 명칭 변경, 이재명 정부의 방침 맞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현재까지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통일정책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바뀌고 국내적인 인식, 국민들의 인식 같은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안 바꿀 수도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걸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바꿀 것 같아서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은 엄연히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수록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이고요.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거면 통일부가 뭐 하러 있습니까? 외교부랑 그냥 통합하십시오. 더욱이 이번 명칭 변경 움직임은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과 관련된 상징을 모두 없앤 것이 오버랩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여기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지난 주말 북한이 방사성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의혹은 2019년도에도 제기된 바 있는데 당시 북한에서는 노후 배관 누수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통일부에서는 수질 샘플을 채취해서 ‘특이사항 없음. 고방사능 물질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 게 누수 수준이 아닌 의도적인 방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침전지 내 녹조가 눈에 띄게 확산되었음은 물론 배수로까지 건설해 의도적으로 핵폐수를 방류하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장관님, 핵폐수가 바다에 흘러가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역에서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되나,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북한의 서해와 대한민국의 서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보내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데이터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일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7월 3일 날 가질 예정이라고 아까 휴식시간 때 보고를 좀 받았습시다. 그래서 조금 더 진전이 있으면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좋은 답변이신데요. 7월 3일 날 그러면 통일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주관으로 원안위……

○**배준영 위원** 통일부 주관으로 같이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원안위,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철저한 검증과 대비책을 통해서 안전을 검증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이란 게 급한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월 3일 날 모여서 의논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이라도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조사 예산이라든지 관련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시급하게 이번 추경 심사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IAEA는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 했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해안 도달하고 대한민국 바다에 오게 되는데, 그때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억될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 종사자들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사실 별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폐수 방류는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핵폐수를 방류하면 바로 우리 바다로 와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 못 하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런 해양 안전이라든지 오염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디 이번에는 어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검증해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신속하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관련된 부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행안부 오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배준영 위원**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는 2024년 6월 오물풍선 피해보상 방안을 담은 민방위기본법을 당론으로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를 통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해당 법안에는 북한의 대남방송에 대한 소음 피해가 없어서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5월 20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시행령을 공포를 했습니다. 다만 접경지역……

저도 국회의원이기도 한데 몇 가지 여쭙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시행령 부칙 2조에 따라서 시행 이전에

일어난 소음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3에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에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을 송출하는 행위는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 시행령 54조의6에 따르면 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신고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 제출하면 지자체장은 제출받은 피해신고서에 따라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다른 위해 행위와는 달리 피해신고서 제출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오물쓰레기 풍선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음방송인 경우에는 피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조사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관련 조항 미비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여튼 더 폭넓게 적용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피해를 본 기간이 1년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현재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제정을 마련 중에 있어서 아마 늦어도 9월까지는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행안부 한도 내에 72억 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추경이라는 게 시급하고 임박하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보상을 하고 그런 종류의 예산집행 활동인데 당연히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뒤에, 2년 뒤에 하면 그게 어떤 실효가 있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잘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저는 이번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공포됐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해 규모를 구분하고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이런 것을 좀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행안부장관고시를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 보상은 말이지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김포시·과주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경기도 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가평군, 강원도 춘천시·속초시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도 잘 만들고 또 추경에서 그런 관련된 보상 플랜을 잘 짜셔서 고통받는 또 고통받았던 우리 국민들에게 위안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성북을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추경예산 중에서 7년 이상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하는 4000억 예산 반영한 게 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김남근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물론 도덕적 해이 논란인 거지요.

제가 변호사를 하던 시절에 파산·회생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해 봤는데, 특히 파산·회생과 같은 채무 조정이 활발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보수적인 경제를 운용하는 미국에서 이걸 많이 하는데, 하는 철학적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 효용론이거든요. 이렇게 장기 연체에 묶여 있는 채무자를 계속 붙잡고 돈을 갚아라, 갚아라 그러게 되면 적극적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욕들을 잃고 경제활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수백만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빨리 경기 회복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채무로 계속 붙잡아 두는 것보다는 빨리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복귀시키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훨씬 효용이 크다 이런 경험 때문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산·회생 이런 사건만 해도 1년에 100만 건 이상들 처리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법원에 가면 적극적으로 파산·회생을 해 주니까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또 채무 조정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채무를 줄여 주기도 하고 소각해 주기도 하고 그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게 잘,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도덕적 해이론을 제기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장기 연체를 했는데도 실제로는 금융기관들이 회수도 못 하고 있어요. 추심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데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괴롭혀서 돈을 받아 내겠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적극적 경제활동의 의욕들을 잃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는 소비도 상당히 위축되고 내수경제도 상당히 위축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장기연체 채권들을 적극적으로 소각하는 정책 이런 것들은 필요한 정책 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장기연체 채권 소각 대상 인원들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지요,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면?

○금융위원장 김병환 113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남근 위원 그다음에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16조 4000억입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16조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4000억으로 잡았는데 채권 매입 비용을 5%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16조인 거고 그게 만일 5%가 아니라 2%, 1%로 매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소각할 수 있는, 매입해서 소각해야 되는

채권의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런데 일단 현재 발표된 기준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베리에이션(variation)이 있더라도 대상을 넓힐지 말지는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김남근 위원** 그게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확일적으로 5%로 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추심도 못 해서 7년 동안은 회수도 못 하고 있고 추심 비용만 들어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스스로 소각을 하거나 채무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인데 그걸 정부가 확일적으로 5%로 사 준다고 그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가 확일적인 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격을 정할 텐데 그러면 예산이 4000억 들어갔을 때는 5%를 가정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김남근 위원** 그거는 금융기관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채권액이 사실은 7년 정도 되면 거의 회수도 못 하고 추심 비용만 들고 있었던 건데 그게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도 매입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남은 예산을 불용할 건 아니고 더 많은 채권들을 매입해 가지고 소각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재원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근 위원** 특히 그런 채권들의 많은 것들을 캠프코가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김남근 위원** 아마 이번에도 이 예산으로 매입해야 될 많은 채권들이 캠프코가 갖고 있는 채권들을 매입하는 것도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대상을…… 그럴 수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 먼저 캠프코 스스로가 이렇게 7년씩이나 돼서, 5000만 원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대부분은 한 2000만 원, 3000만 원대의 밑에 있는 채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장기 연체되고 사실은 채권 회수도 안 되고 그런 돈들을 계속 붙잡고서는 값아라 값아라 하면서 채무자의 어떤 경제활동 의욕을 꺾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채무 조정을 해 가지고 채무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는 것들이 또 캠프코의 역할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캠프코가 스스로 잘 안 하고 있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일적으로 5%로 매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제가 보기엔 2%, 3%로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같이 따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가격 부분은 공정한 가격을 협의를 통해서 정할 생각입니다.

○**김남근 위원** 그다음에는 캠프코도 그렇지만 금융기관들도 채권 추심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있어요. 캠프코가 1년에 외부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서 들이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10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회수도 못

하는데 추심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렇게 7년 이상 돼 가지고 회수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캠프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서서 회수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멸시효에 가까워지면 소각하거나 이런 행정들을 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전제로 해 가지고 또 지금 경제가 어렵고 경제활동에 의욕을 잃어 가는 채무자들이 많으니까 그걸 정부가 일괄해 가지고 채권을 매입해 가지고 소각하는 이런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가지가 다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그 균형점이 될 수 있을지를 계속 좀 고민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캠프 스스로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 캠프 스스로가 먼저 여러 채무 조정이라든가 필요하면 채권 소각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하고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일괄적으로 매입해 소각하는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매입해야 되는 채권 중에는 대부업체 채권들도 있어요. 대부업체 채권이 7년 이상이고 5000만 원 이하인 게 대략 한 25만 6000건 정도 있다고 그래요. 한 2조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순서로 따지게 되면 오히려 이런 채권들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고리사채의 억압으로부터, 억눌림으로부터 채무자를 풀어줘 가지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서게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부업체의 채권들을 매입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지요, 어쨌든 대부업체의 특색이 이런 것들을 꼭 붙잡고서는 여러 가지 괴롭힘을 통해서 돈을 받아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데니까.

그래서 대부업체의 이런 장기 연체채권들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려는 이런 노력도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대부업체가 사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타깃을 해야 되는 데인데 7년 이상 장기 연체기 때문에 대부업체 입장에서든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한테 매각하거나 하는 조치들을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대부업체들이 이것을 빨리 포기를 하고 매각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채무자대리인 제도예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적 채무 조정이 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본인한테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없고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괴롭혀도 돈 받아 내는 게 어렵지요. 밤에 전화하고 직장에 찾아가서 괴롭히고 이럴 심산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아 낼 수 있다, 아니면 가족들한테 계속,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가족들을 괴롭혀 가지고 돈을 받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7년 된 것도 계속 서로 돌리고 돌려 가면서, 서로 채권 양도해서 돌려 가면서 대부업체들이 갖고서는 추심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무대리인이 선임되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지요, 채무대리인한테만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괴롭혀서 돈 받는다는 걸 그때는 포기하게 되니까 채무자대리인하고 사적 채무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에서 사적 채무 조정이 활

발하고 우리와 같은 그런 채권 추심과 관련된 인권침해 얘기들이 거의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것도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잘 활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좀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돼 있지요, 채무자대리인?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더 활성화하려면 캠코의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부가 매입해 가지고 채권을 정리하는 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근혜 정부 때 국민행복기금 이런 것들도 채권을 매입해 가지고 그걸 국민행복기금에 두고 채무를 조정해 나가는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한 적이 있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런데 채무 소각까지 간 것은 사실 좀 예외적이기는 합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데 국민행복기금도 국민행복기금에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계속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빨리 그런 채무자들의 채무를 정리해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효과가 미미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정리를 시켜서 빨리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자라는 것들이 이번 정책의 목표니까 그런 점들을 잘 염두에 두고 목표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또 채권을 다 매입해 놓고서는 또 붙잡고 심사한다고 몇 년씩 끌고 도덕적 해이 우려된다고 그래서 소멸시효 연장하면서 장기로 끌면 바로 100만 이상의 이런 경제활동 의욕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빨리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시키겠다고 하는 이 정책 목표 자체가 몰각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정책 목표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잘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F 보증과 관련해서 800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책정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PF 문제가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PF에 묶여 가지고 인허가 다 받고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이주 다 시켜 놓고 재개발 같은 사업들 안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강북, 성북, 서대문에 가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과다하게 PF들을 갖고 있으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자금 조달을 못 하니까 자꾸 정부가 PF 보증해 달라, 보증해 달라 그러면서 사업들을 미뤄 오고 PF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PF 보증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PF 구조조정이나 정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성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PF 보증을 하는 것이지요,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사업성 평가를 해 가지고 부실하다고 하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고 사업성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 보증을 통해 가지고……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대기업들이 요구한다고 다 PF 보증해 주고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남근 위원** 저희 의원실이 금감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220조 정도 되는 PF 익스포저 중에서 부실 정리를 한 게 2023년에 9.3조였는데 2024년에 새로운 사업성 분석들을 하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한 23조 9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부실로 한 게. 6월까지 한 12조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조정 정리를 한 12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PF 보증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성 있는 건 사업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 사업 중에 좀 재구조화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고 재구조화하는 게 이번 6월까지 23조 9000억 중에서 한 12조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하자는 거니까 아주 중요하고 저는 대형 건설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설사업에 나서야지만 우리 건설경기도 활성화되고 또 서울지역에 주택 공급이 지금 멈춰 있는데 그런 재개발 사업이나 주택 공급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하고……

그래서 국토부장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PF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PF 정리가 된 걸 가지고 건설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도록 해야 되고 그게 주택공급이나 이런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게 추산이 되어야 되는데 금감원에 물어보니까 그건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구조조정 한 것 중에 LH에 2건 사업을 넘겼고 정부의 PF 보증을 받아서 사업으로 진척시킨 게 한 3건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한 5건 정도를 하게 되면 주택공급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통계적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게 국토부하고 금감원, 금융위 사이에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가 되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했고요, 해 왔고. 지금 그래서 지난번 회기 국회에서 저희 국토위에서 가칭 PF 관리법, 약칭 해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이 될 터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PF에 대한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립될 예정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된 PF를 통한 새로운 주택 공급 효과……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종합적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법률이 통과돼서 그 체계가 갖춰질 겁니다.

○**김남근 위원** 그 23조 9000억이, 아무튼 제가 보기에 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23조 9000억이 부실 PF라고 그러는데 그걸 6월까지 절반인 12조를 정리했다 그러면 그 정리한 것들이 이제 사업으로 빨리 이어지도록 해 가지고 어떻게 주택 공급 사업이나 이런 것에 나서도록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주택 공급 사업들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멈춰 버리다 보니까, LH가 하는 그런 공공재개발 사업은 또

LH 구조조정 한다, 공공이 하지 말고 민간한테 넘겨라 이러다 보니까 LH도 사업을 못 했고 민간은 이렇게 PF 이런 데 묶여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PF 구조조정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게 얼마 정도, 그렇게 구조조정 된 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개 사업장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는 작업을 국토부하고 금감원이 협력해야 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런 지적사항에 근거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협력행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남근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재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형일 차관님.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김재원 위원 지난 26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문화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선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 임기 내에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달성, 문화수출액 50조 원 달성, 세계 문화강국 톱5 진입이라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신정부 국정기조 차원에서 문화를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김재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 문화예산이 최근 10년간 가장 낮다는 데 있습니다. 202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7조 672억 원으로 전체 국가예산 대비 단 1.05%에 불과했습니다. 25년 기준 OECD 평균 이하이며 글로벌 문화강국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저는 22대 국회 등원 시점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국문화의 국가경쟁력 그다음에 경제성도약을 위한 정부의 문화예산 대폭 확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K-콘텐츠가 문화외교 자산이자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언한 임기 내 문화예산 2%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편성 계획 면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양해해 주신다면 2차관이 답변드리도록, 예산을 담당하는 2차관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재원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정부는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문화 그 자체가 중요하고요 문화 사업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투자를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일부 분야별로 선형적으로 얼마의 투자가 바람직하다 이런 게 적정한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지만 문화 사업에 대한 새로 출범한 정부의 애정 이거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편성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추진을 하자는 것입니다. 승낙하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충분히 문화산업에 대해서 배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문화 수출 역량 강화입니다. 특히 AI,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콘텐츠산업과 어떻게 결합을 시킬 것인가 이것이 핵심 과제이며 단순히 콘텐츠를 생산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획,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문체부에는 문화기술 R&D를 총괄해야 할 전담 부서가 부재하고 부서별로 콘텐츠·저작권·스포츠·관광 R&D가 분산되어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기술개발과 전략적 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기술센터,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를 문화기술기획평가원으로 확대·개편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인력 증원과 예산편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이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시기를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혹시 그 인력을 내부적인 업무 조정을 해서 충당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효율성의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검토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글로벌 문화 위상을 가지고 그만큼의 글로벌 문화 선도국으로서 더 이상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반드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예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에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급히 편성한 모태펀드 계정 출자와 영화관람권 지원 사업 매우 잘 추진하셨습니다. 다만 이런 간접 지원 방식보다는 실제 창작자들이 영화 제작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작 착수된 영화 통계를 보면 코로나 이전 2019년 48편에서 2024년, 작년에 16편까지 추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없어져 버린 명감독 등용문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이나 중소 제작사 영화 착수를 위한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예산 증액이 시급합니다. 예산 증액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덧붙여서 신정부가 한국형 문화 ODA와 K-콘텐츠 기반 국제협력 모델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APEC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의장국으로서 주최하는 매우 중요한 외교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대단히 중요한 행사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의 위상 국제적으로도 알릴 기회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따로 회의를 열어 각별히 챙기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국회 APEC 지원특위 위원으로 활동해서 살펴보니 국민 인식도 낮고 국내외 여론 형성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이 지급된 총 홍보 예산이 10억여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도 관련 홍보물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선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정상급 국제행사가 아무도 모르는 행사가 되어야겠습니까? 이대로라면 회의의 외교적 성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수요 유발, 국가 브랜드 향상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차관님, 지금이라도 국내외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막대한 광고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홍보 패널에 APEC 경주 개최를 알리는 광고들이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LH아파트 분양 홍보비도 90억 원이 들어간 예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지금 10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APEC 예산 중 광고 예산 증액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저희는 APEC 행사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국가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홍보 또한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님이 주신 10억 원 이게 다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산 증액이 필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나머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안까지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방금 외교부 총괄지원단에 계신 홍보 담당 문체부 과장님하고 바로 통화를 하고 올라온 길입니다.

그 밖에도 APEC 개최 시에 세계 각국 정상들은 물론이고 많은 해외 관계자들의 응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지역 내 응급진료체계 마련이 시급한데요. 응급의료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PEC 행사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중요한 국가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하고요. 의료하고 관련되는 것도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병행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상들이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주지역 내 대학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장 지원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다녀왔고요. 이미 수차례 경주 APEC 현장을 실사했습니다. 필요성 절대 절감하고 있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회 주도 문화외교 외연 확대를 위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 각별한 지원과 예산편성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첫째로 Parliamentary Assembly of APEC 의회 행사 개최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의 의회대표단을 초청하여 국회 로텐더홀 및 야외 공간에서 회의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방안입니다. APEC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 차원의 공식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입법부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APEC 특위에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장님께 제안을 드리기로 한바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문화·경제인 회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고위급 대화와 연계하여 APEC 정상회담 기간에 주요 국내 문화기업과 함께 글로벌 문화·경제인 회담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회담은 온라인 저작권 문제, 계약불이행 완화 및 아티스트 비자 문제, 공연시장 개방 및 활성화 등 문화산업 관련 국제통상 협약 및 글로벌 협력 의제를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 행사입니다. 문화 고위급 행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글로벌 문화·경제인 회담을 공식 문화외교 행사로 인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역시 적극 검토 요청드립니다.

외교부차관님, 특히 앞서 설명드린 Parliamentary Assembly of APEC 의회 행사는 국회 APEC 특위 위원들의 공통의견으로 APEC 본부 차원에서 차기 회의부터는 정례화될 수 있도록 참여국들에 권유하고자 하는데 관련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형일 1차관님, 이번에 2회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부단히 노력하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기획 단계부터 기재부가 많은 애를 썼습니다.

○**김재원 위원** 편성을 위해서 예산 확보 과정 주로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자세한 것은 2차관님께서 많이 챙겼을 텐데요. 사업별 내역도 다 심사를 했고 관련된 재원 조달 방안도 같이 연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결국 현시점까지는 집행이 지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경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시는 게 맞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자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에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첫째로 용산어린이정원에 추진 중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토양오염 우려 등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명확한 해결 방안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지요. 올해 완공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집행된 의무지출 예산을

제외한 잔여액은 추가 감액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위원님이 질의 주신 사항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추경 안에 일부 반영이 돼 있고요. 추가로 조정이 가능한지는 예산소위 과정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추가 감액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연예술 창·제작 공간 조성 사업 예산 역시 전액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남산 자유총연맹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하는 그런 기획인데 사업 지원은 물론 특정 단체의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던 그런 사안입니다.

부처는 해당 예산에 대해 기재부에 배정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행 의지도 준비도 없는 사업예산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의한 그리고 거기에 이은 알박기 사업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차관님께서 부디 엄중히 검토해서 삭감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사업의 의미와 그리고 현재 추진되는 상황, 향후 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 예산소위 과정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국민의 혈세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꼭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달서갑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榮夏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국무위원님, 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갑의 유영하입니다.

오늘 사실 총리대행께서 오셨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재중이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기 계신 각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반부패 총괄기관이자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야 할 상징적인 기관입니다. 그 어느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기강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기관입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대한 비위행위입니다. 아마 다 동의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권익위 1급 고위공무원인 한삼석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적법하게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지난 6월 18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권익위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24일 돌연 징계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권익위는 외부적으로는 조직 통합이라는 명분을 댔지만 복수의 권익위 관계자들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기획위의 강한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징계는 권익위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정부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징계 절차를 무산시켰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공직기강을 훼손한 것이고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수립과 조직개편을 총괄하는 기구이지 독립기관의 인사와 징계에 개입할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징계 절차에 개입하고 무마했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징계 대상자인 한삼석 상임위원이 처음부터 무리한 징계였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성명을 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위법행위를 감싸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 징계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중립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무위 상임위에서 말씀도 드렸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근 위원님께서.

지금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정부 추경에 4000억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柳榮夏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공기관이 부실채권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연체채권 가진 게 8조 8000억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거의 50%인 4조 6215억이 캠코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예산소위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캠코가 지금 SPC, 소위 말해서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5%에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柳榮夏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봤습니다. 그냥 캠코 자체 소각을 하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레인지(range)를 좀 넓혀서 자체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실상은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십몇 %가 이 부실채권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캠코가 한 50%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캠코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부실채권, 7년 이상 된 부실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입니다. 그건 말만 채권이거니와 거의 휴지 조각이랑 같은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설립한 배드뱅크, 소위 말해서 SPC에 팔면 5%의 비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회계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 이중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손실 부분은 탕감시키고 이득도 얻는 거지요.

저는 과연 이게 정상적인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물론 캠코의 자산건전성에 문제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인지를 넓혀서 자체 소각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 주면 굳이 자기가 설립한 자체 SPC에 소각해서 행정비용을 받는 구조는 저는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이 4000억에 대한 예산편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원금을 탕감하는 이런 구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위 기회를 잃은 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정말로 성실하게 투자를 뛰면서까지 오늘까지 자기 빛을 갚아서 상환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과연 정부는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게 산 사람은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내 빛을 다 갚았는데…… 그런 점에서 캄코가 자회사에 자기가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자체 소각시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짚어 보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혹시 지금 국방부차관 나와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국방부차관입니다.

○**柳榮夏 위원** 제 지역구가 대구다 보니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오랫동안 군에 계셔서 군공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구의 현안 중에 가장 큰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취수원 확보 문제가 있고, 하나는 소위 말해 대구신공항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6월 25일입니다. 광주·전남 타운홀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TF 구성을 공식화하시면서 ‘이제부터 정부에서 주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대구공항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대구·경북 신공항을 위한 TF도 정부에서 만들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신공항 사업의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화면 좀 넘겨 주시지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국가사무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K-2 군공항은 차관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대의 군공항입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柳榮夏 위원** 지금 한미연합작전 시 핵심 전력이 집결하는 전략 거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따라서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공항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K-2 공항의 시설이 노후화돼서 군사작전에 제약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을 더 미룰 수도 없고 이전 기간 동안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가 들고 있습니다. 현재 11조 5000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 없이 처음에는 지자체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공항을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국토부장관 나와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柳榮夏 위원 장관님, 하여튼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기부대양여 방식은 장관님께서 더 잘 알다시피 민간투자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柳榮夏 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 신공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면 결국은 민간투자자가 이전 부지, 그러니까 기존의 공항 부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투자자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의 공항 부지 활용은 먼저 공항이 완성되고 부지가 이전된 다음에, 그다음에 공항 부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투자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 신공항을 만들기는 저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구조적인 한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극복하려면 대구 신공항뿐만 아니라 광주 군공항을 포함해서 전국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 TF를 저는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국정과제로 만들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전략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해야만 이 공항 이전은 저는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대구·경북은 물론 생산유발효과가 38조로 나와 있지만 전국 기준으로 보면 63조 정도 나와 있습니다. 꼭 대구만 부양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결국 전국의 내수를 진작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이 군공항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정부 도움을 받기 위해 공적자금관리기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정부 기금운용계획 안에 포함돼야, 군공항 이전을 문제 없이 추진하려면 이 정부 기금운용계획 안에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공항 같은 경우는 설계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장관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속히 마무리돼야만 기재부, 여기 차관님도 와 계시는데,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정말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만 저는 이 공항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이게 중앙부처하고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총력으로 해야만…… 이것은 비단 대구에 어떤 공항을 하나 만들어서 대구·경북 시민과 대구·경북 도민들의 그런 경제효과가 아닙니다. 이 대구의 공항은 아까도 제가 차관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아주 전력 핵심 자산이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이 중요성이, 정말로 중요한 공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이 TF를 구성해서 이 공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대통령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환경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차관님, 대구 취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취수원은, 대구는 지난번에 폐놀 사건에 의해서 시민들이 거의 포비아

가 있습니다, 식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구미 해평취수원은 구미시장과 협의 관계가 안 돼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니까 다시 해평취수원으로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해평취수원이 되려면 결국 구미시하고 협의가 전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런데 구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해평취수원이 아니라 그 위에 상류지로 취수원을 옮겨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상주시나 의성군 또 다른 지자체와 또 협의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서 조금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지금 협의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동댐 취수에 대해서?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리고 지금 대구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신공항에 대한 취수도 안동댐에서 끌어온 취수원이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동댐을 활용해서 대구·경북 지역에 물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각 지역 또 지자체, 지역 전문가,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지금 일부 환경단체나 구미시 쪽에서 얘기하는 구미 해평취수원을 고집한다면 아마 저는 설득이 안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미시가 상류로 옮겨 달라고 했을 때도 저는 인접 지자체 또 환경단체들과 협의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수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정권도 아니고 정부도 이념도 상관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았든지 간에 어떤 단체장이 되든 간에 이 물 문제는 정말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영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저는 물은 생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구 취수원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지자체에 맡겨서 ‘지자체랑 협의해라’, 더 이상 이렇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돼서 240만 대구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이성권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갑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희입니다.

오늘 저는 내란 정부가 망가뜨린 대한민국 경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실패의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현재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두말해야 잔소리겠지요.

12·3 불법계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장모의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태균의 선거 개입 의혹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로 대한민국 법질서와 사회적 신뢰가 파괴되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세, R&D까지 아무런 철학 없는 대책들의 남발로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는 위대한 국민들께서 거리와 투표장으로 나와 주셔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고 또 이제 출범한 특검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리의혹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경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단 3년 만에 총체적 난국에 들어섰습니다. 새 정부가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춰 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새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특단의 조치를 할 각오와 변화를 가지고 이 문제점을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책,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24년, 특히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추락을 했는데요 뚜렷한 외부 충격이 없다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소비와 내수가 위축되었고요 실질임금, 가게 구매력도 저하가 됐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말 그대로 민생이 파탄 나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기재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도 고집하던 재정건전성은 제대로 지켰는지, 세수 기반은 마련한다고 했는데 마련은 제대로 됐는지도 한번 짚어 봐야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재부차관님들께 질의가 좀 집중될 것 같은데요, 좀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3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지금 0%대로 와 있습니다. 처참하게 몰락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2023년에 1.4%, 2024년에 2.0%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는데요.

1차관님, 이런 정도면 어느 수준입니까? 국민들께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네 분기 연속 0% 성장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기부진이 꽤 장기화되고 그로 인해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합니다.

○**김성희 위원** 일단 저성장을 저희가 순서대로 한번 뽑아 봤는데요. 1등은 잘 아시는 것처럼 IMF 직후였지요, 1998년에 -4.9%, 이때는 외환위기였고요. 그다음에 1980년에 비상계엄과 석유파동 때 -1.5% 그리고 코로나19가 있던 2020년에 -0.7%, 그리고 나서 1956년에 한 번 있었더군요. 비상경제령, 흉년에 미국 원조가 감소해서 0.7% 그리고 이

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로 0.8%, 그다음 저성장 6등과 7등이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입니다, 1.4, 2.0. 숫자로 보면 그냥 숫자인 것 같지만 정말 굉장히 처참한 숫자라는 점을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 1분기의 한국 실질GDP 성장률은 -0.2%로 G20 국가 중에서 꼴찌라는 한국경제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 자체가 위기였다는 진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대통령이 경제를 엉망으로 망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민생이 파탄 났다는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실질임금이 연평균 -1.0% 깎여 나갔다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25년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말에 12.24%, 이것 12년 만에 최고치이고 소상공인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가 2023년도에 10만 건 그리고 24년도의 소상공인 폐업공제금 지급은 1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그리고 차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24년 종합건설 폐업 신고는 641건으로 19년 만에 최고치인데 이 정도 되면 자영업·건설업 뭐 하나 남아난 게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차관님, 이런 경제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문제는 재정도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었지요. 23년에 56조 4000억 원, 24년 30조 8000억 원.

2차관님, 이런 수치가 어떻게 가능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여러 가지 경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예측하는 과정에서 오버슈팅 된 것을 장기적인 추세로 잘못 인식한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는 경기가 좋을 겁니다’라고 2년 연속 속인 건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렇게 틀려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역대급으로 세수 부족이 발생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현상은 아니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차관님, 그런데 6월에 추계를 한 번 하고 9월이나 10월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경제성장률이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10월 통계는 반영하지 않고 6월 통계만 집어넣어서 이런 결과, 즉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그냥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시중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안을 내고도 한 번 더 재추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다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까지 가져다가 기금 돌려막기로 세수 부족이 아닌 것처럼 만들거나 지방교부세를 미집행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1차관님, 이것 지금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단순히 지출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달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기재부가 했던 이런 행태, 특히 외평기금, 공공관리기금 이런 것들 사용하고 국회가 멀쩡하게 정해 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재정건전성으로 가는 길이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래서 이번에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해서 추경에 같이 국회에 들고 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투명성을 강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이번에 그렇게 세입경정을 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 추계한 것을 바로잡아서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재정을 좀 더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김성희 위원** 문제는 기재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재정건전성, 낙수효과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입증하려고 노력했는데 입증이 전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결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국민들의 삶은 피해해졌습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서민들보다 부자들을 위한 기재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국회에 산정책처가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을 한 자료를 보니까요, 중저소득자가 국세 감면을 받은 비중이 2020년에 69.7%에서 2025년에 66.5%로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자는 같은 시기 30.3%에서 33.5%로 늘어났습니다.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의 혜택이 부자들에게 집중됐다는 걸 보여 주고요.

기업은 더 하지요. 상호출자제한기업, 즉 대기업을 말하지요. 2020년에 11%가 수혜를 받는데—국세 감면에 대해서—2025년에 17.8%로 폭증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기재부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했던 겁니까, 차관님? 즉 기업들이 활성화돼서 큰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해서 취한 정책이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주로 R&D나 설비 투자에 대해서 감면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걸 이해를 하시면 안 되지요. 기재부가 집행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결국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줬는데 그것이 경제성장률로 외화됐나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글로벌 경기랑 여러 가지 여건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아직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기재부는 원래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부자들 감세를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낙수가 떨어져서 서민들 입에도 물한 방울 들어가는 날이 오기는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기본적으로 성장과 세수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기반이 많이 취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 이런 것도 같이 정비하는 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여기에서 기재부의 소극적,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재정지출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가 0.4%, 지금 2014년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돈을 더 대야 된다’ 이거는 저희 같은 정치인들에게는 상식적인 일인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통화가 늘어나니까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재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기대응 기능하고 그리고 재정 본연의 역할 이것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것도 중요하다고,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현상을 반추해 보면 그 시절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게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 2024년 관리재정수지 얼마 적자였습니까? 4.1% 적자였습니다. 본인들이 기준으로 세워 놓은 3.0%에 맞추지도 못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성희 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와서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2025년도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보니까—기재부가 다 짠 거겠지요, 윤 대통령이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2.3% 감축하고 공공의료기관 공공지원금은 전액 삭감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22% 감축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예산은 무려 2조 5000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깎아 낸 이유가 뭡니까? 2차관님, 이제라도 한번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재 시점에서는 각 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 때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한 것부터 상당히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결국 재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번 정권에 맞게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경제 여건, 민생의 어려움을……

○김성희 위원 그때는 경제가 좋았고요?

차관님, 작년 제작년에는 서민들이 살 만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였습니까? 물론 차관님이 하신 일은 아니니까 억울한 점은 있으시겠지만 기재부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갔던 것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선 전에 1000조가 넘는 예산을 여기저기다 뿌릴 수 있다라고 떠들고 다녔던 얘기는 제가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R&D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정부 전체 R&D 예산이 2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가 감소가 돼서 91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로 33년 만에 첫 감액이었는데.

1차관님, 새 정부는 내수 진작을 넘어서서 투자 촉진, 경제성장을 위해서 기초연구 개

발 등에 재정을 적극 투입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2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국가재정이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기재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재정건전성이라는 것, 건전한 재정이라는 것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민생을 어떻게 파탄으로 몰고 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 경기가 침체되고 세수가 감소되고 재정이 축소되고 가계 소득이 감소되고 그것이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투자가 감소돼서 경기침체로 가는 악순환을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와 또 기재부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케인스가 그런 말을 했었지요. 고용, 이자 및 화폐 이론에서 불황기에는 민간 수요가 위축되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된다고 했던 주장, 저는 지금도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잘 쓰기 어렵지요.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점,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소비진작을 넘어서서 내년 예산안에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 또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분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과감한 집행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사하갑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반갑습니다.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소속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 설계 방식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소비진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되어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지방정부에게 강제적으로 20%의 매칭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또 그리고 자치권을 훼손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설계를 다시 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기재부차관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PPT 한번 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겠지요? 오랫동안 공직생활에 계셨기 때문에 보조금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이런 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안부장관 혹은 또 그 취지에 있어서 지자체와도 협의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맞습니다.

○이성권 위원 협의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셨습니까, 지자체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가 국무회의를 통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언제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좌우간 국무회의 전이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이성권 위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는 6월 19일 오후 3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협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재정정책자문회의, 각 시·도지사들, 시장들 대신해서 부단체장이나 기조실장이 참여합니다. 그 회의가 열렸는데 언젠가 하면 바로 하루 전입니다. 6월 18일 오후 4시 반에서 5시 반, 1시간 열렸습니다. 그 회의 열리기 전에 미리 지방정부에게 8 대 2의 매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공지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여기서는 그 사실을, 제가 미리 공지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20년하고 21년에도 지방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되는 사업이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했으니 그런 정도는 아마 공식적인 협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 인지는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게 기재부가 지방정부를 그야말로 하부 직원으로 여기는 것 같은 혹은 장기관의 졸로 여기는 것 같은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의 크기를 불문하고 지방정부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법령에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전날 회의를 열고, 제가 부산시의 경제부시장 출신이라서 사실은 어제 오늘 전화를 좀 돌려 봤습니다.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회의 당시에 처음으로 8 대 2 매칭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법령과 관련된 절차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노리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관님의 그런 답변 태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치권 훼손입니다. 인식의 정정을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정당성을 기울이는 데에도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면요, 지방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조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기재부가 가장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올해 2025년 들어와서 국세수입을 재추계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성권 위원 재추계한 결과 1차 추정 당시보다 10조 300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지방교부금, 지역으로 내려가는 돈이 국세수입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줄게 되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기재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추산을 해 보면 보통교부금이 1조 9273억 그리고 특별교부금 709억 원이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제 감액시킬 겁니까, 아니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산을 하지 않고 추후에 정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부금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만일에 20%의 매칭까지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보통교부세 역시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보면 내국세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2022년에 70.4%였다가 2025년에 60.4%로 갈수록 줄었거든요. 이 정도로 지방재정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얼마나 빚을 내서 살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차관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정부도 추경을 편성하고 오늘과 같은 예결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들도 상당히 많이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적어도 1차 추경까지는 다 한 것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성권 위원 그게 다 빚이지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일부는 지방채에 의존한 지자체도 있지만 일부는 또 원래 가지고 있던 재정안정화 자금이나 다른 자금들을 동원한 지자체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제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시를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1차 추경을 3월에 3612억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이 추경 결정을 국무회의 할 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던 6월 19일 날 시의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6월에 56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부산시의 이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 매칭을 하면 거의 1600억이 넘습니다. 다 합치면 이제 상반기 단계에 부산시는 1조 원이 넘는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중앙정부 예산만 신경 쓰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시는 어디서 돈을 조달해야 됩니까? 한번 그런 고민 해 보셨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저희도 뭐…… 위낙에 나라 경제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요. 현장에서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도, 중앙정부도 어렵습니다만 지방정부 사정도 녹록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질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바로 교부세를 정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여유를 확보하기도 했고요.

○이성권 위원 그 정도의 중앙정부의 성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리고 또 지방채 자금도 이번 추경에 1조 원 정도를 반영했다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성권 위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뭉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앙정부가 뿌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뿌리이고 그 국민의 조금 더 큰 뿌리가 지자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자체들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게 되면 대한

민국이 휘청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시를 보니까 상반기에 신속집행, 국가시책이잖아요. 워낙 소비진작이 안 되고 경기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돼 있다 보니까 신속집행을 하라고 해서 부산시의 경우는 6월 달까지 68.5%의 사업비를 이미 집행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재원 조달의 경우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 조달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짜 빛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야 되는데 물기가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부산시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사례를 들지만 다른 지자체는 오죽하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PPT 한번 봐 주시면, 지방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 한번 봐 주시길요.

올해 1분기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한 액수를 보면 2조 원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1년 전체 통틀어서 지방채가 8331억입니다. 올해 1분기가 작년 한 해에 맞먹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134%가 더 많은 형편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올해 보면 이것을 전부 다 지자체에다 부담하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만일 이번에 소비쿠폰까지 합치면 2조 9000억이 되잖아요. 다 합치면 거의 5조 가까운 돈이 됩니다. 지방정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방정부 지속가능성 저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가 과연 얼마만큼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도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PPT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요. 지방 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역단체의 경우는 48.6%,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30% 미만입니다. 밑에 시 단위는 31.6%, 군 단위는 17.7%, 자치구는 27.4%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말고 지자체가 또 부담해야 될 지방비 합이 3조 7000억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맞지요? 그렇지요? 제가 없는 것을 지어낸 게 아니고 기재부 자료를 기초로 했으니까. 그러면 소비쿠폰에다가 또 그 돈까지 조달을 해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길요.

지방의 경제 사정이 좋으면 괜찮습니다. 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왼쪽의 표 보면 올해 1분기 지역경제, GRDP의 추이를 보면 5개 권역, 수도권, 동남권 권역을 떠나 가지고 GRDP가 올해 1분기에 전국 1%대에서 0%대로 하락했습니다. 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여수·포항 이런 데. 상당 부분 제조업들이 폐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관님,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는 정부의 교부금은 줄어 들고—물론 방금 올해는 줄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돈 나올 데는 없고 또 20%의 지방비 매칭으로 써야 될 곳은 너무 많아집니다. 이게 각 단체장만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짜낼지 저는 참 예측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과 관련해서 설계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방

정부별로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한번 보면 광역단체별로 해서 세입 규모와 재정자주도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부산을 기준으로 보면 부산하고 비슷한 세입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재정자주도는 오히려 강원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강원도에 비해서 인구가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률적인 20%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부산시는 더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그다음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차등적인 지원을 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똑같이 한번 보시지요. 부산하고 강원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세입 규모, 오히려 강원도가 재정자주도가 높은데 차상위계층은 부산이 많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보편적 지원하는 금액 플러스 추가로 더 할 때 부산시는 또 부담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설계가 왜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봤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했지요? 6월 19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6월 18일 날 24시간도 안 된 상태에 자치단체들 불러 가지고 그냥 일방 통보를 한…… 지금부터라도, 처음에 설계안을 잘못 내놨다 하더라도 잘못됐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언제입니까, 7월 4일 되면 아니면 3일 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여당 위원님들도. 설계를 좀 변경해야 됩니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야 돼요. 지금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구군협의회 회장들이 입장 발표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제 질의시간 다 돼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이 존립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점을 명심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지방정부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지방정부별 상황에 맞는 설계를 다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파주갑 윤후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그래서 파주 애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님 계시지요?

지난 6월 13일 대통령께서 파주시 장단면 통일정원에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된 게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송출을 중단하면서, 북쪽에서도 중단을 하면서 그런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파주, 제 지역에 있는 파주에 오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지는 못했지만 헬기가 이렇게 뜨는 것, 그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세 대, 네 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저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라고 알았지요.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이렇게 실천으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정부도 지난번의 9·19 군사합의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여

러 가지 작은 조치들부터 시작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윤후덕 위원** 9·19 군사합의를 다시 복원하는 것, 그것만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전이라도 인도적 실천을 조금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주는 개성까지 마라톤 하는 것을 북한하고 합의를 해 놓은 게 옛날에 있었어요. 이것을 통일부에서 더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간단한 것 또 하나……

해수부장관 계시지요, 해수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대통령께서 부산으로 연내에 이전을 하고 새 청사를 건립하는 것, 그것도 그렇지만 ‘임시청사를 만들어서라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여기 있습니다, 윤 위원님.

○**윤후덕 위원** 예,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안녕하세요?

부산시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섬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조건·충분조건이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건물들을 지금 식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직원들하고 지금 신임 차관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후덕 위원** 하여튼 연내에는 임차를 하더라도 이전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국정기획위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상황을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후덕 위원** 반갑습니다.

주담대 6억 원으로 대출하는 것에 대한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금융위가 주관한 금융대책이고 기금 분야는 저희가 또 주관을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또 6개월 내에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금융에 대한 그런 정책이지만 국토부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짜 서울에서 양등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은 미분양이 많이 있고 또 수도권도 강남 3구를 비롯한 일부 특수 인기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가수요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 판단에 근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어느 분이 오셨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입니다.

○**윤후덕 위원**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잖아요. 이게 명수가 113만 명이에요. 맞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대상이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 전에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의 이 113만 명이 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닙니다. 포함돼 있지만 개인 채무를 가진 사람은 다 대상이 됩니다.

○**윤후덕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포함되니까, 예측할 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 절반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예?

○**금융위원장 김병환** 절반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경제는 타이밍이고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 그리고 신속한 추경 편성, 속도감 있는 집행을 하자 그리고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거는 동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 경제성장률이 너무 추락하고 있지요. 그런데 2차관님, 1차 추경 때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판단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1차 추경과 2차 추경의 지출 규모,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규모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연간 효과는 공히 한 0.2%p 이런 정도로 저희는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1차 추경이 0.1%p 정도 한국은행이나 KDI의 전망치를 반영해서 그나마라도 0.8% 성장률을 발표했지요. 우리 목표가 2.2%나 2.5% 성장률인데 0.8%밖에 이렇게 발표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을 안 했으면 0.7%로 발표했겠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

○**윤후덕 위원** 아니, 답변을 해 주세요.

1차관이 그러면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 성장률은 여러 가지가 감안돼 있는 거고요. 그 0.8%라는 건 한은이나 KDI에서 한 거고 정부는 아직 전망을 수정하지는 못한 상황입니

다.

○**윤후덕 위원** 물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 다시 종합적으로 해서 전망을 낼 계획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은 0.13~0.14%p 정도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예정처, 국회에서 그런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심사하고 빨리 집행을 하면 연말까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하고 KDI가 전망한 0.8%에서 0.9%로 올라갈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1차관도 그런 기대를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한국은행의 전망을 베이스로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 빨리 통과돼서, 남은 기간이 하반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속한 집행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역시 소비쿠폰이 규모가 있고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준비를 다 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 지급수단이나 사용기간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해서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더라고요.

행안부차관님, 이걸 7월에는 실행할 겁니까? 국회에서 7월 3일이나 7월 4일 날 의결을 하면 한 7월 15일, 7월 20일 정도에는 실행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들이 추경안 확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바로 집행계획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 범정부 TF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계획 잘 마련하겠습니다. 7월 중에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7월도 중순이 있고 하순이 있잖아요. 중순 정도에는 실행할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급수단이나 그리고 사용기간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지급수단은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핀테크 업체들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 선불카드·직불카드 그다음에 상품권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기간은 지난번이 4개월이었는데요 그것보다 좀 단축하려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4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아무래도 좀 빠른 시간 내에 경기진작 효과를 보려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이걸 또 물어보는 건 우리 동네에서도 소상공인 그리고 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날짜를 계산하면 식자재라도 반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날이라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미리 알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소비쿠폰이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 원을 마련한 거지요? 이걸 2차관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방정부는 얼마를 준비해야 돼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방정부는 13.1조를 맞춰야 되니까 한 2.9조 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얼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9조 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 정도를 준비하면 이게 매칭이잖아요, 지방정부하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래서 지방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2.9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2.9조 원 정도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성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방정부도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지만 차상위나 기초생보자 이런 분들을 더 보살피고 있는 지자체, 지방정부는 좀 더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서울은 70% 지원하고 그 이외 비서울은 80%를 국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차등으로 세심하게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위원님……

○윤후덕 위원 아예 고민도 안 하고 있어요, 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사실 중앙정부도 지속가능성을 지켜야 되고요. 지방정부도 지속가능성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반영했거든요. 교부세도 미정산하는 걸로 하고 지방채도 하고 그리고 지금 70, 80 이게 별 숫자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다른 보조사업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보조율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정부도 답답하고 지방정부도 답답하고 또 국민의 삶은 지금 더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포인트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조금이라도 지방정부에 대한 사정을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더 들여다보면 국비 지원율을 80%에서 85%라든지 90%라든지 이런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재원이 또 이번에 보니까 부채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부채를 더 발동시키고 이러는 거는 좀 어렵고 세출 구조조정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 그전에는 구조조정, 세출 구조조정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만들고 또 추경을 낼 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부담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이 지금 질의 주신 취지에 대해서 사실 기재부도 100% 공감하고요. 이번 추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적으로 시급한 지출인 거는 확실히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과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아니었다고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차원에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지출 구조조정 상당 부분 반영해 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후덕 위원** 심정으로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액한 예산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미 편성하고 있는 2026년 본예산에 또 다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심 구조조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듯이 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지금이라도 부처별로 들여다보고 재원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만큼 지방정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발굴해 왔고요. 그리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굴할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결소위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은 좀 불요불급하지 않나 그런 게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외통위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부처별로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추가로 무슨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8시 30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총 스물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양 간사님께서 합의한 결과 이병진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세 분께서 추가로 더 질의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울주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반갑습니다.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많이 뵈 분도 계시고 처음으로 뵈는 분들도 계시는데, 20조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수 감소까지 합치면 한 30조 되는 건데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지금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님석을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합니다.

우리 국무위원님 중에 제일 선임이 누구십니까? 과기부장관님이십니까, 지금? 과기부장관님 오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제가 선임은 아닙니다, 저는 1년이 채 안 돼 가지고……

○서범수 위원 아니아니, 여기서 직제순으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특히 또 장관님들은 보면 전임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이고 그래서 과기부장관,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겁니까, 지금? 없지요, 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니요. 저희 부처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직은 장관님 체제하에서……

국토부장관님, 아직도 장관님 체제하에서 움직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소임 다할 때까지는 부처를 지도해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말 들습니까, 직원들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당연히 들지요.

○서범수 위원 기재부차관님, 부총리 대행이시지요? 부총리 대행이신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1차관입니다.

○서범수 위원 예, 부총리 대행이시니까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지금 추경 심사도 해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되고 그런 사안들이지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서범수 위원 그래서 물론 총리도 계시고 부총리도 계시면 좋겠지만 우리 차관님께서 부총리 대행…… 총리 대행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그만큼 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민생경제가 어려워서 조속히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이제 공감을 하고 빨리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리더십 부재라든지 책임자들도 좀 공백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심의하는 기간도 좀 짧고 그래서 이 3부 추경에 대해서 결국 잘못하면 부실심사로 이어지고 부실심사는 결국은 또 필연적으로 부실집행을 낳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무위원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께 좀 당부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도 특히 장관님도 그렇고 새로 오신 차관님들도 그렇고 정말 더욱더 책임이 막중하다, 단 한 톨의 혈세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예산안을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행안부입니까? 차관님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서범수 위원 처음에 25만 원 하다가 지금 1차로는 15만 원, 그렇지요? 2차로는 거기에 맞춰서, 소득 수준에 맞춰서 주겠다. 15만 원에서 52만 원이지요, 그 갭이?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2차……

○서범수 위원 처음에 25만 원 주려고 하다가 지금 15만 원 1차로 획일화시킨 거잖아요, 1차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왜 하필 15만 원입니까? 왜 15만 원입니까, 25만 원 내지는 35만 원 드리면 되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왜 15만 원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한 번에 25만 원을 다 주려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상위 10%를 선별해 내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 미니멈이 15만 원이기 때문에 그 15……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15만 원이냐는 거지요, 저는. 그리고 상위 10%는 빼자,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선 하기 전에 25만 원을 강조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면 획일화, 보편적인 것하고 선택적인 것 좀 합치자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15만 원을 주고 2차로는 조금 선택적으로, 조금 더 두텁게, 취약층에 대해서는 두텁게 주자 이렇게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15만 원이냐는 거지요. 25만 원, 40만 원 주면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위원님, 설명을 드린다면 원래 25만 원이고 전체 국민 5111만 명 중에 한 4200만 명인 85%, 86~87%는 25만 원을 받는 거고요. 다만 거기서 더 사회적 취약계층인 차상위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거기를 좀 더 지원해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위 10%는 조금 덜 받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상위 10%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소득 수준, 그렇지요? 건강보험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할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건 여러 번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지난 20년도에도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 간의 균형도, 불균형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서범수 위원 그래서 아까 오후에 아마 조정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조 빚을 내면 일인당 45만 원 빚을 지고, 45만 원 일인당 빚을 지고 지금 15만 원에서 52만 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45만 원 주지요, 그냥. 왜 15만 원이냐?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행안위에서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소비쿠폰,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내지는 선불카드,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현금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갖출 필요도 없고……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렇게 될 경우 현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사용 기한을 정해 놓는데 현금인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빼

서 저축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갖고 있어도 그것을 입금하거나 이렇게 때문에 당초 정책이 목표한 소비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현금 주면 소비진작하지요. 그런데 그걸……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일본에서 현금을 줬는데 그것이 소비 승수효과가 굉장히 낮았던 것을 자료를……

○서범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승수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하시데, 0.1~0.2%p.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것은……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서범수 위원 예,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연구기관별로 이게 어떤 연구 결과는 좀 높고 또 중립적인 것도 있고 사실 약간 부정적인 것도 있어서 제가 딱 얼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 민생회복지원금의 가장 주목적이 뭐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경기진작……

○서범수 위원 소비진작?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경기진작, 소비·내수진작 이런 것하고……

○서범수 위원 소비진작 그다음에 중소상인 활성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어느 게 더 우선순위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다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일단 내수를 좀 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현금을 주면, 그것을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공돈 생겼다, 예를 들면 그래서 나 이것 먹을래, 활용할래 이렇게 하면 이 지급을 함에 따라서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시스템 구축비용은 안 들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런데 이것은 일단 지역, 사용 지역을 제한하려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금은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지방도 부담을 하는 상황에서 시군별로 사용 바운더리, 영역이 제한……

○서범수 위원 전국을 다 한다면서요? 똑같지요. 전국 다 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서범수 위원 예를 들면 지역사랑상품권, 물론 이게 지역사랑상품권하고 또 연계가 되는 건데요. 지역사랑상품권 처음에는 한 지역에서 했을 때의 경우에 효과가 나오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서울은 서울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서범수 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그것은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렇지 않으면 또 서울에서 아무래도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

○서범수 위원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이것. 또 이것도 지금 190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하지요, 지역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맞습니다, 위원님.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몇 개 정도가 안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안 한다는 거라기보다는요……

○서범수 위원 구축이 안 돼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특·광역시, 그러니까 서울 거기하고 그다음에 시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는 본인들이 지원이 없어도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159개 자치단체가 되고 지원 없이도 자발적으로 하는 데까지 포함하면 190개가 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치단체별로 조폐공사, 아까 나왔던 코나아이 이런 데랑 협약 체결을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해서 실제로 진짜 민생회복 지원금에 전체적으로 100%면 100%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이 전달체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오후에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광역하고 기초하고 또 지금 구분이 애매하잖아요.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7월 4일 날 통과를 한다고 합시다. 언제 이게 국민들께 전달이 됩니까? 15만 원은 언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 4일 날 되면 저희가 빠르면 7월 5일, 7월 6일에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소상히……

○서범수 위원 아니아니, 궁금해하는 게 그거지요. 그러면 언제, 이게 결정이 되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 시민들께 언제 체감이 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제가 늦어도 7월 안에는 지급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서범수 위원 7월 안에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구체적으로 언제 날짜는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왜 이렇게 서두를까, 물론 서둘러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하더라도 한 타임래그는 1개월 내지 2개월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책임 있는 분들이 여기 앉으셔서 서로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스피드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것 무시하고 지금 빠르게 빠르게 가거든요, 그것도 7월 4일 날.

아까 어느 분이 그러시데, 7월 4일이 삼십…… 한 달이라며요, 취임식? 취임한 지 딱 한 달이라며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제가 말씀드릴……

○서범수 위원 축포를 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조금 송구스럽습시다만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이게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신속하게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대행사 수수료 있지요,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만.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나요, 지금?

예를 들면 1분기의 코나아이 공시에 보면 지역화폐 결제수수료 121억, 플랫폼 운영 대행 매출액이 129억, 이게 한 분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간 한 1000억 정도 수수료를 뺍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이거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있으나 좀 이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 좋은 일 시켜 주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일단 저희가 카드사라든지, 9개 카드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서범수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건 지역사랑상품권 이야기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지역사랑상품권도 14개 업체 플러스, 더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류라든지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1개 이상은 선택해서 국민들이……

○서범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나아이가 주류지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사실 제일 많은 것은 맞는데 조폐공사라든지……

○서범수 위원 맞지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대행사 수수료가 너무 높다. 지금 1000억씩 갖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걸 좀 더 책임 있게 서로 교섭을 해서 낮추면 우리 국민께 들어가는 그게 더 많지 않겠느냐.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제가 그 부분은 좀 협의를 잘해서 그런 수수료라든지 이용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무위원님들 앉아 계시고 가실 국무위원님들도 앉아 계시고 또 새로 취임하신 차관님도 앉아 계시지만 가실 때 가시더라도 그리고 새롭게 오셨다 하더라도 빨리 업무를 숙지를 하시고 또 가실 때까지 오직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의 혈세가 한 푼도 버려지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시를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싶은 국무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북아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령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캠퍼스가 있는 S 반도체, 우리 평화와 안보의 심장 공군작전사령부, 해군2함대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등등과 함께 병진하는 이병진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관님, 기획재정부차관님 두 분 중에 관계되시는 분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보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차관님, 쉬운 거니까 정보보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여러 가지 해킹 이런 걸로부터 좀 차단하는……

○이병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보보안은 AI시대의 중요한 안보적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만이 몇 개 있어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만, 국가 관리 항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이병진 위원 맨날 각 부처에서 예산 받으면서 항만에 관련된 예산 들어올 때 혹시 기억했던 것 없습니까?

31개가 있다고 합니다. 평택항은 86년도에 개항이 돼서 지금은 5위에 포지셔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 근처에 바로 오른쪽에는 붙어서 2함대사령부가 있어요. 왼쪽은 평택호를 맞대고 세계 최고의 미군부대, 여의도 4배 크기의 미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평택항에 군사기지가 왼쪽, 오른쪽, 저기에 보세요. 저렇게 보면 평택항이 있지요. 저렇게 위치 지어져 있습니다. 중국의 핵공격도 대비할 수 있는 세계에서 최고 좋은 미군부대, 이건 군사기밀이 아니고 국방부차관님도 아시겠지만 지하로 대단한 벙커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CCTV 있지 않습니까? CCTV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잘 만드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

○이병진 위원 제가 객관식으로 쉽게 낼게요.

미국, 두 번째 한국, 세 번째 중국.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언론상에 보면 중국이라고 많이 들어 본……

○이병진 위원 중국입니다. 하이크 비전(Hikvision)이라고 영문으로는 얘기하고 중국 말로는 하이강웨이스(海康威視)라는 세계 최고의 CCTV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만의 188대가 다 미인증 중국산이다, 아니냐?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

○이병진 위원 중국산입니다. 평택항에는 40%에 해당하는 75대가 중국산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생각나는 것 없어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보안 부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병진 위원 좀 더가 아니고 중국이 디지털 패권을 미국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중 사이는 디지털 패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국이 개발하는—산업화와 정보화는 뒤졌지만—빅데이터, 양자컴퓨팅, 우주항공산업, 미국도 모를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CCTV 다를 중국 중앙정부에서 말이지요 관리할 수 있어요. 그 기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백 도어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해 가지고, 5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1차 때 통과됐는데 또 해결이 안 돼요. 이유가 뭘니까? 저를 설득해 주세요.

700조의 예산이 다 되는 나라에서 5억 6000만 원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임기근 차관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보안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국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병진 위원 아니, 짧게. 5억 6000만 원 있어요, 없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제가 5억 9000만 원……

○이병진 위원 6000만 원.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문제는 금액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CCTV가 국가나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지 그 차이로……

○이병진 위원 아니,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도……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차이로 지금까지 예산 반영 여부가 판단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남인, 북인, 노론 이런 거 따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역사 속에서?

안보는 말이지요 아워(our)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재정법 89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국가재정법 89조가 뭘지 잘…… 위원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병진 위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되묻는 그 태도는 도대체 뭘니까?

정보보안은 사회 재난과 등가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시급히 이것을 처리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차관님, 6월은 무슨 달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병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PMZ, 중국이 서해에 말이지요 잠정조치수역에 뭘 설치했다고 요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언론에 심해 양식 시설이 설치됐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병진 위원 저게 심해 양식 시설인가요?

2018년도에 선란 1호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한때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시들고 한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선란 2호를 또 설치합니다. 그리고 저 정도의 구조물까지, 헬기장까지 이착륙이 가능한 것들을 지금 설치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중국이 설치하고 있다, 공해에. 국제해양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이게 양식장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제가 지금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담당 업무도 아니긴 합니다만……

○이병진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한 경계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외교부차관님, 저것 양식장이예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양식장이 있고 그 옆에 다른 시설물이 있는데 이 시설물 자체의 성격이 조금 불분명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진 위원 중국이 말이지요, 남사군도라고 들어 봤을 거예요. 땅에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하고도 섬 갖고 싸웠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중국이 틀렸다고 해도 억셉트(accept)를 하지 않아요. 그냥 밀고 갑니다. 베트남하고도 마찬가지로요. 남사군도에는 지금 비행장까지 설치해 뒀어요. 야금야금 시작하면서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수로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그런 전술로 해서 남지나해, 그들이 표현하는 남지나해의 90%를 내해화시켜 가고 있어요.

서해의 10%를 내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경 123도, 124도, 124도 30분, 30분만 되면 한 70km 우리 쪽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여기 평택까지가, 우리 집에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79km거든요. 여기 평택, 어림잡으면 한 70km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까지 자기들이 점차적으로 우리 쪽으로 이 부유물을 옮기면서 잠식해 오고 있어요. 이것 무슨 의도가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아까 외교부차관께서는 협의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중국 측에 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중국 측과 협의는 가졌고요. 저희 내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저는 비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는 현재를 놓고 현재는 미래를 잉태하고 있는데 중국이 행한 일련의 양태를 놓고 봤을 때 결코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저 지역에는 서로 협약을 했어요, 저런 것 설치하지 않기로. 30만 마리, 50만 마리 양

어장을 키운다고 처음 얘기했는데, 누가? 민간에서 양어장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에 민간이 있어요, 없어요?

상식에서 외교부차관님, 중국에 민간인이 있어요, 없어요? 정부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중국의 민간인들은? 특히 중국 영해 바깥으로 나가는 민간인들이 마음대로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중국은, 더 잘 아시겠지만 1921년 공산당부터 시작한 나라예요. 공산당이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9970만, 인도 국민당 1억 50만 다음으로 세계에서 당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민간은 그들이 대외 교섭을 할 때 필요할 때 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500m 정도를 반경으로 접근금지 지역으로 설정하고 거기 지나가려면 우리한테 통과의뢰를……. 유훈을 받고 지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축차적으로 저런 구조물들을 계속 세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당시의 야당 위원, 여당 위원들과 함께 1차 추경 때 용역비 5억 원 그리고 구조물 하나 만드는 데 600억 들어간답니다. 605억 원을 통과시켰는데 기재부의 벽을 또 못 넘었어요. 기재부가 난 그렇게 무서운지 예전에 미쳐 몰랐어요. 전체적 국가 예산을 다뤄야 되는 막중한 책임성을 느끼겠지만 왜 거기 가면 모든 게 스톱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최소한 용역비라도, 10억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임기근 차관님, 제가 이거 말씀 올렸는데 이의 있으면 두 마디만 해 주세요, 한마디 하지 마시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비상한 경계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유의미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진 위원** 비상한 경계심이 아니고 비례 대응해야 된다.

여기 국방부차관 나와 계신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국방부차관입니다.

○**이병진 위원** 저거 군사시설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서해는 가장 깊어야 한 100m밖에 안 되거든요. 저기 이제 미국 잠수함도 못 들어옵니다, 저렇게 될 경우에.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고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한중일의 협력을 미국은 상당히 염려하고 있고 또 중국은 한국이 한미일로 묶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피벗 스테이트(pivot-state)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용해서 이번에 대등하게 비례 대응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임기근 차관님,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단을 내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예산들은 계속 관심 갖고 이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와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수리시설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081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지금 30년이 다 넘었어요,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보충질의 1분만, 이것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1분 주십시오.

○이병진 위원 9758개, 66.9%가 3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얘기하지요. 30년이 넘으면 한 세대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벼농사를 뭐라고 합니까? 수도작이라고 하지요, 수도작. 물이 필요합니다. 용수·배수하는 겁니다. 이 관개 시설이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해야 될 이런 시기가 도래했는데 투입을 안 해요.

대통령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장마철 대책 마련 지시하시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재해하고 안전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별도로 대통령 말씀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관점에서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과정에서 잇따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김민석 국무총리후보가 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특별한 소득 없이 약 8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가시켰고 수억 원의 추정금 납부하면서도 교회 헌금과 자녀 유학비 등 고액 지출을 감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처가 비용을 댔다거나 경조사 수입으로 현금을 받았고 배추농사 투자수익 배당금으로 매달 450만 원가량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해명을 내렸지만 국회에 그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청화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이 정당한 의혹 제기를 비아냥과 조롱으로 응수하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청문회장에서 후보자 해명 요구에는 침묵한 채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 청문위원을 향한 반격과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를 국민을 위한 검증의 장이 아니라 정쟁과 방어의 수단으로 전략시킨 것이고 의회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태도입니다.

게다가 김민석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50%에 가까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20~30% 수준이라고 답했고 올해 국가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 권위 시에 대통령 대행하는 자리이고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가 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중요한 책임자입니다. 국가채무비율, 국가예산 규모조차 모르는 후보자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관후보자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는 방역 책임자로 재직하던 시기에 남편이 방역 관련 기업 주식을 거래해서 시세차익을 얻은 정황이 드러나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고 또 조현 외교부장관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의혹과 자녀 집 반전세 계약 의혹이 제기됐고, 배경훈 과기부장관후보자 미성년 자녀의 고액 주

식 보유 등과 관련해서 공정성·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고위공직자 검증에 책임져야 될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부동산 그리고 차명대출 의혹으로 임명된 지 5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말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의혹 해소보다 임명 강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눈높이와 국회의 검증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의 실패를 인정하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장관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재검토를 통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지금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대선 공약이십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분을 보니까 북극항로 거점 개발, 해양산업이 집적된 해양수도의 건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데요.

그러면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논리라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있는 농도인 전북으로 그리고 과기정보통신부는 KAIST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이 있는 대전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주장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세종시의 행정수도 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세종시 기능이 약화되는데요. 왜 국회세종의 사당 건립하고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검토합니까?

또 지금 분명히 세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종시의 기능이 무엇인가, 어떤 통합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 공무원도 약 8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업무 비효율성 그리고 타 부처와 협업이 어렵다. 그리고 또 사실 세종시로 공무원들이 와서 10년 됐는데요, 아주 어렵게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수부 업무보고 하다가 중단된 적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 이유가 뭐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자료 유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료 유출이나 대통령 공약 검토 부족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은 갑질, 길들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해수부 업무보고 중단하고 부처 이전 결정 사이에 어떤 연계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대통령실이나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무슨 외압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런 건 없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해수부장관후보자로 전재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전문정보다는 지역 안배 그리고 혹시 내년 선거를 위한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 인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장관직이 해수부 이전의 정치적 상징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장관님, 이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나 내부 의견수렴, 국회 보고, 공청회 이런 절차 거친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런 것은, 지금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거친 적은 없습니다만……

○조배숙 위원 전혀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배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공약으로 막 먼저 던져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은 좀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부 책임 문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피해는 나중에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하고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AI, 반도체, 로봇, 첨단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조를 투자한다고 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제일 기초적인, 필요한 것이 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전력……

○조배숙 위원 전력이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12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어요. 그런데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단 1원도 편성이 안됐습니다.

자료 좀 다시 띄워 주세요.

젠슨 황인데요. AI 산업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에너지다, 그래서 대만에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에 반드시 투자해야 되며 원전에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데이터센터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리고 2029년도에는 수도권 비중이 82%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금 AI 쪽으로 가다 보면 기존 인터넷 검색하고 비교하면 생성형 AI 서비스 챗GPT 전력 소모량은 10배 이상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는 서비스 전력 소모량은 텍스트 기반 서비스보다 40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발표한 제11차 전력기반수급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은 올해 1.4GW에서 2036년에 6.1GW로 약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것은 원전 5기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규모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지금 AI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데이터 확장이 국가 목표라면 이에 상응

하는 에너지 수급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고 지지난주에 울산에서 LNG를 활용한 AI 데이터센터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에 원전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앞으로 원전의 활용도도 상당히 주목을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방향이 전환됐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지금 원전 발전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프랑스는 14기를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반원전 국가였던 독일, 덴마크도 지금 다시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지금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다양한 에너지원인데 그래도 원전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번에는 또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로 한다고 할 때 에너지가 스테디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력이 간헐적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물론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ESS에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50년도에 태양광 발전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의 50%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때 ESS의 설치 비용을 추산을 했어요. 이게 국가 원자력 정책 제안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제가 그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400조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가지고 보안을 만드는데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 다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튼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이 과연 지속이 가능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저는 원전하고…… 원전은 계속해서 SMR 또 SFR 이런 걸로 좀 더 고도화하고 재생에너지도 점점 기술들이 좀 더 발달하니까 일정량은 더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나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만 아직까지 비용이나 어떤 효율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원전이 가장 가성비 높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 그리고 원자력 정책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차관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AI가 화두인데요. 그렇지요?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AI 인재 양성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첨단 인재 양성 체계에서 보면 AI 인재의 양성 체계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첨단·고급 인재 그다음에 중견 인재, 실무 인재까지를 포함하는 첨단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급 인재 양성 체계는 과기부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해요, 상황이. 왜냐하면 중국 보세요. 중국은 벌써 딥시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1000조 배 빠른 105큐비트 초전도 양자컴퓨터를 개발했어요. 그것은 저는 중국에서 AI 인재 시스템을 아주 잘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제가 1차 추경 심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추경 심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참 민생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참여를 하고 이번 예결위에서도 참여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대략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계시는데 이번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세출하고 세입 경정을 포함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입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거기에는 얼마 정도 씹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10조 3000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다 합치면 한 13조 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규모입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전 국민에 일인당 15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 거겠네요, 우선적으

로는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민생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어렵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일인당 15만 원씩 이렇게 주면,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주면 민생경제가 많이 나아집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재 지금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렵고 그중에서도 소비가 특히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이 어렵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선별적으로 주는 게 경기진작에 더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소비진작 효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부 정책이라는 게 직접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15만 원을 대통령도 받고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도 받고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님들도 15만 원씩 다 받게 되겠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차관님은 15만 원 받아서 어디 쓰실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는 곳, 특히 저희 집 근처에 특히나 또 손님이 적은 그런 곳을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지연 위원 저는 전 국민 15만 원 지급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13조 원 규모면 얼마나 많은 사업들 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장관님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부장관입니다.

○조지연 위원 우리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GTX-A 노선, 그러니까 동탄에서 수서까지 19분에 주파하는 GTX-A 노선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갑자기 물으시니까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수조 원……

○조지연 위원 총사업비가 한 5조 6000억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3조 원 정도 규모가 만약에 투입된다 그러면 GTX 노선 2개 정도는 신설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 정도 됩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수소버스, 전기버스 대당 얼마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억 정도 할 걸로……

○조지연 위원 중국산은 1억 중반대 하고 국산은 아마 3억 중반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조 원으로, 만약에 이 돈으로 수소버스 사고 전기버스 사면 몇만 대 정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렵짐작으로 한 3만 7140대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시내버스 칠팔만 대가 다니는데 절반 이상을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로 전환해서 친환경적으로도 할 수 있고 저상버스니까 당연히 교통약자들에게 매우 용이하겠지요?

그러면 장관님, 수도권에 노후화된 전동차 교체해 달라고 요구 많지요? 물론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까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지금 교통시설의 갱신 주기가, 특히 KTX가 조만간 갱신 주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지하철 전동차 보면 한 칸에 얼마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금액 말씀하시나요?

○조지연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한 10억 정도에서 13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8칸을 한 편으로 편성하면 도입하는 데 한 1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13조 원이면 얼마나 몇 편을 도입할 수 있느냐, 수도권 전동차 거의 1000편 이상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13조 원이.

복지부장관님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조지연 위원 의료취약지역에 병상 300개, 500개 들어가는 병원 설립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게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고……

○조지연 위원 예, 지역마다 다른데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 보니, 제가 내포신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랑 다 모든 걸 조사해 보니 한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사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병상 수에 따라……

○조지연 위원 예,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300병상에서 500병상 한다고 했을 때 3000억에서 5000억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13조 원이면 몇 개 정도 지을 수 있습니까? 전국에 30곳에서 40곳 정도의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하는 그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 이백몇억 증액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제 15만 원을 반납해서라도 이런 분들 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정부지출은 그런 말씀하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도 필요하고 또 이번의 민생지원금처럼 내수진작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지연 위원 보건부장관님, 올해 4월 기준 참전유공자가 몇 분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6·25 참전용사님은 3만 5000명 되고요. 월참용사님들은……

○조지연 위원 총 참전유공자가 한 19만 육천팔백팔십 분 정도……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아니요, 14만 명입니다. 월참하고 6·25 참전……

○조지연 위원 아니요, 4월 기준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4월, 예.

○조지연 위원 그런데 이분들 중에 1만 이천육백오십 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사천삼백서른네 분은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분들 본인에게 월 45만 원 저희가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이분들 돌아가시면 이게 유가족들에게 지원되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연 위원 자, 이 돈을 돌아가시면 정말 거의 사실상 0원에 가까운 지원인데 그런데 이 참전유공자에게 19만 육천팔백팔십한 분에게 13조 원을 준다 그러면 일인당 약 6600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독립유공자도, 독립유공자의 후손도 판잣집에서 살고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이런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 국민 15만 원 나눠 갖는 게 땀땀합니까?

제가 장관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 돈으로 나라를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웠던 또 독립을 목이 터져라 외쳤던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고용부차관님 오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예, 위원님.

○조지연 위원 취업애로청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6개월 이상 채용을 하고 있으면 최대 1년간 최대 720만 원인가요, 740만 원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740만 원입니다.

○조지연 위원 그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용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일인당 1200만 원씩 준다고 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청년 100만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지원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아까 계속 나왔던 얘기처럼 내수를 진작시키고 여러 가지 다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측면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지연 위원 산업부장관님, 반도체산업 매우 중요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조지연 위원 우리 미래 먹거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전기하고 용수하고 도로하고 구축하는 데 1조 7000억 원 정도 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조지연 위원 그런데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개발하고 정말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핵심 소재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국산화할 수 있게 지원하고 10개 거점대학에 반도체학과 정원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산학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반도체 산업의 전 주기에 걸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잡아 봐도 한 13조, 턱없이 부족하겠습지만 이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앞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연 위원 과기부장관님,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여는 누리호, 우리 정부가 개발하는데 돈 얼마 투입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1조 9600억 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13조 원이면 누리호 자체개발은

물론이고 독자 위성발사체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우주산업을 하는 우주개발기업 중의 89%가 중소기업입니다. 독자 위성발사체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금액이면.

국방부차관님 계시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국방부차관입니다.

○조지연 위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개발비 관련해서 제가 지금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조지연 위원 2019년 기준으로 전체 프로젝트는 8조 8000억 원 했는데 이후 조정돼서 7조 6000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전투기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국산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TK신공항, 물론 조금 부족합니다만 할 수 있는 금액이고, 포항-영덕고속도로 총사업비가 3조 1713억 정도 되는데 영일만대교 건설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희 지역 핵심 공약도 있습니다. 물론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3조 원 넘는 국책사업 그리고 자인부대 이전이라든지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전 국민이 15만 원 나눠 갖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사업에 투자해서 고용 창출과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두 차례 추경으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38살인데 제가 앞으로 살면서 저희 같은 청년세대가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사실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갚아야 되는 청년세대에게 물어보시기는 한 겁니까? 우리 공청회도 생략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과연 15만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 주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민주당이 아마 일방 강행으로 처리할 거지만 저는 이 질문은,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한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 모두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만 오전에 10분간 주질의를 하셨던 위원님 중 희망하시는 위원님은 보충질의시간을 5분 더하여서 총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원 원주율의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위원 제가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제2차관님, 민생지원금 13조를 하는 취지를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물론 그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 민생지원금을 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고 다른 것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짧고 요약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재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 이것에 기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총량적으로 4분기 연속 0% 내외의 성장을 하고 있고요. 부문별로도 보면 가장 심각한 부분이 민간 소비 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생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출 회복이 시급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함으로 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선순환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가 제일 기본적으로는 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빨리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1·2차로 나눠 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송기현 위원 제가 오전 주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총선 때 선거운동 하러 다닐 때 보면 8시 반 이후에 식당을 가면 손님이 없어요.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할 때 가면 그때보다도 더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자영업자, 식당 같은 또 시골에서 옷가게 하시는 분들 이분을 위해서 도대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정책 한다고 그래서 이분들 나아집니까?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그분들,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좀 살게 해 달라고, 급박한 불 좀 끄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3년 동안 꿈쩍 안 했잖아요. 좀 나아졌습니까, 그 정책 목적은? 더 나빠졌잖아요.

원주는 가장 중심지라는 데도 저녁 10시 반이 되면 사람들이 안 다녀요. 빈 택시만 늘어서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예상될 수도 있지만 민생지원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 SOC, 취약계층, 의료취약지, 산업, 중소기업 모든 부분에 지원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지금은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추경을 하는 과정입니다.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구성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모든 SOC나 정부 역할이 필요한 곳 그런 부분은 구석구석 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아직도 차관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여기에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이해시키기에는 간략하지 않고 복잡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답변을 잘 정리하시고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무자 지원 제도 관련해서는 금융위원장이 담당하시잖아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송기현 위원 지금 현재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자가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2020년 이후, 코로나 때 이후에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폐업하거나 그러한 경우에 새출발기금을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지원 요건을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빈 자리가 있긴 하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18년하고 20년 사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게 약간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 그 공백기의 채무에 대해서도 새출발기금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4월 이후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 이전에 진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대상이 되고요.

다만 그 기간, 2020년 4월 이전에 폐업을 한 경우는 새출발기금을 만들면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그런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데서 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원에 아예 공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기현 위원 지원의 공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번 추정 하는 데서는 그 부분에 공백이 생긴 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3 유형의 지원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사이에, 그러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그 기간 중에 채무를 일으키고 폐업을 한 경우가 지금 되는데……

○송기현 위원 문제가 되겠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 경우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새출발기금하고도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으로 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에서는 이게 실제로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다른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기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가.

상환 능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대상자의 경우에는 좀 제외해서 적용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지금도 재산이 만약에 순재산이 있는 경우는, 부채를 빼고도 재산이 있는 경우는 채무 조정 대상이 안 되도록 하는……

○송기현 위원 그거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지만 왜 과도하게……

○금융위원장 김병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전혀 재산이 없는 이런 분들과고 어느 정도는 상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좀 노력이 필요한 분들하고는 조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차등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셔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보면 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별로 하면.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보면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서울지역이나 수도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자영업자 비율이 한 19%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29%가 넘고요 또 원주도 28%가 넘고 청주 26%, 김해도 25%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결국 보면 이런 도시의 경우에,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 여기 말하는 새출발기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수도권이나 서울보다 더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적용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추가로 되어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쭙보는 거거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새출발기금은 기본적으로 신청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요건이 되겠다, 지원이 필요하겠다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는 채무조정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지역별로 그런 부분의 홍보나 어떤 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없는지 하는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각 지역별로 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수도권이나 서울지역은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잘 이용되는데 오히려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이게 덜 이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실제로 지금 관련된 실적을 보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25년도 매입 계획이 11.6조 정도 됐었는데,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데 5월까지 실제 매입한 양은 2조 6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정부가 25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정도를 지금 매입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효력이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발생할지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울러서 이런 소상공인이 많은, 자영업자가 많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이런 게 좀 더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런 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현재 지역별 상황을 한번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리고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낮은 이유가 있다면 원래 과도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과도하지는 않은 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기술이 부족한 문제가 생긴 건지 이런 것 좀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시갑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예결위원장님과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또 국무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ODA 예산 자꾸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구조가 이명박 정권 때 자원외교 한다면서 해외로 예산을 많이 쏟아부었다가 회수도 못 하고 속칭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 알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자들이 수십조의 불법적 이득을 취한 그런 사례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외교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승원 위원** 지금 우리나라 2025년도의 ODA 예산이 2022년도에 비해서는 2조 6000억, 2023년도에 비해서는 2조 1000억이 증가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조 원이 갑자기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건 확인하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파악하기로는 1.5조 원인 걸로 아는데요, 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승원 위원** 2022년도 대비 2조 6000억 증액이 됐고요. 2023년도 대비 2조 1000억 증액된 그런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승원 위원**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증액 규모가 갑자기 너무 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동시에 이때 R&D 예산을 5조, 6조를 삭감하고 ODA 예산을 갑자기 2조를 늘려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해인데.

두 번째로 ODA 예산을 증액해 놓고도 사전 사업성 검토 같은 게 전혀 없었다, 그때 기재부에서도 굉장히 몰아쳤던 기억이 납니다. 2조 6000억 증액된 것을 어떻게든 소화해보려고 여기도 저기도 사업성 검토 없이 ‘일단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ODA 예산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해당 지원받는 국가에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나중에 이게 확인이 되느냐 그랬더니 확인이 거의 어렵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요, PPT에서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사후 검토 같은 게 안 된다 이게 세 번째 문제이고.

네 번째는 주로 지원받는 국가에다가 차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민간한테 많이 가더라. 그래서 민간 혹은 국제기구협력체, 특히나 민간한테 많이 가서 이 민간이 해외, 지원받는 대상 국가에 있는 민간이지요 애네들이 어떤 장난을 치는지 우리가 여기서 관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네들이 낸 자료를

우리가 어떤 공적 루트를 통해서 확인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외교부에서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손 놓고 있는 실정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민관협력 전대차관 이게 1987년도 이후 30년 만에 등장을 했는데 1987년에도 약 30억 원 정도밖에 안 됐던 민관협력 전대차관이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억 이상의 예산이 잡혔다. 그런데 이 민관협력 전대차관은 사업 목적이 없어도, 구체적인 사업이 없어도 그냥 그쪽 나라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막 빼먹어도 된다는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전대차관과 또 EDCF 이렇게 해서 차관 자체가 특정 기관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외교부보다는 다른 재정 부처에서 데이터 가지고……

○**김승원 위원** 그거는 아무튼 정부 내에서 누구 관할이냐 그거 따지실 문제고.

아무튼 민관협력 전대차관이 캄보디아에 648억 정도, 인도네시아에도 648억 그다음에 국가를 미정한 돈 또 250억 원을 예산으로 잡아 놔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그래서 1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전에 1987년도에 한 번 했던 그 30억짜리 그때 예산보다 지금 50배 정도 되는 민관협력 전대차관이 지금 2025년도에 설정이 되었고 그나마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어떻게 검토를 할 건지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다섯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

특히나 캄보디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이게 통일교 로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지금 지출 조정할 때 빨리 이거를 갖다가 지출 조정을 해서 국민의 혈세가 외부기관으로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거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국가 미정으로 잡혀 있는 민관협력 전대차관 250억도 빨리 이거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얼마가 지원됐는지 혹시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우크라이나 4억 불 정도……

○**김승원 위원** 우크라이나도 지금 KOICA에서 1억 불이 무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1400억이 이미 나갔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1억 불이 전체 나간 건 아니고 1억 불 규모의 예산에서 일부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김승원 위원** 지출이 되고 있고.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작년인가요? 2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건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일종의 플레지(pledge)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김승원 위원** 2030년까지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지금 국제

협력기구인가요?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약속을 그렇게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기재부가 담당하는 EDCF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승원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거는 구체적인 사업 프로포절이 들어와야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우크라이나에는 KOICA를 통한 무상원조도 있고 수출금융 지원도 있고 인도적 지원도 있고 유상차관도 있고 또 2030년까지 분할해서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또 아프리카에 10억 달러 지원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거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10억 달러 한다고 그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100억 달러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 봐도 10억 달러 정도로 나와 있고 이것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ODA 예산이 지금 2조 원 이상 증액이 되면서 이런저런 국가로 가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사전 검토도 안 되고.

지금 ODA 예산이 나가려면 저희 법을 보니까 사업 발굴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사업 심사하고 사업 승인하고 정부 간 협정 체결하고 차관계약 교섭 및 체결하고 컨설턴트 고용하고 구매하고 사업 실시 및 자금집행, 사후관리 이런 절차를 쭉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2024년도 예산편성할 때 막 집어넣으라고 해서 그때 난리 난 거 아니겠습니까? 2025년도도 또 똑같은 게 예산이 지금 반영된 거고요. 이것부터 빨리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존경하는 위원님, 사실 ODA 예산 전체가, 지적 사항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라는 외교부가 전체 관할하는 게 아니고 외교부는…… 생각보다 분절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저희 또 각 부처,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까지 분절화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전반적인 정책을 짜서 저희에게 방안을 주고 있고, 무상원조와 관련 부분은 저희가 주도로 하긴 하는데 국제경쟁입찰을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액이 많이 늘었고……

○김승원 위원 예, 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외교부에 한정된 일뿐만 아니라 기재부에서도 당연히 ODA 예산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고 사전이라든가 사후검토, 타당성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재부1차관님 담당인가요, 혹시요? 2차관님입니까, 1차관님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EDCF는 1차관 담당입니다.

○김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점 같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저희가 오전 질의에 점검 다 했고요. 그 전대차관은 아직 집행이 아예 안 된 걸로 현재 확인하고 있는데……

○김승원 위원 캄보디아 건은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건은요? 인도네시아 건도 649억 원이 있고 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것도 250억 원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차관도 사실은 삼부토건 추가조작 관련해서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에서 이종호 씨라든가 김건희 그다음에 BP(블랙펠) 패밀리에 대한, 계좌에 대한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것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90일 이내에 얼추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망신당하기 전에 저는 사전적인, 국가에서 사전검토하고 그런 의혹이 있는 것들에 대한 투명성 있는 사후검증이 필요하다, 사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말씀하신 대로 지원 필요성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것 좀 빨리 점검을 해서 저희 의원실로 이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관계상 못 한 얘기 한말씀드리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 장관, 결국 사전이든 사후든 벼 재배면적 감축해서 쌀 생산량 줄이고 수입쌀 지키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재배면적 감축 강행, 이재명 정부에서 사전적 재배면적 감축, 포장지만 바뀐 것인데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생산량은 감소, 수입쌀은 그대로. 원래 주던 직불금, 인센티브로 신선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쌀 자급률 저하로 식량 자급률 감소, 농민들은 경작권 침해, 식량안보는 위협, 쌀값 보장은 불투명, 내란농정의 연장일 뿐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양곡법에 연동시켜 식량 자급률을 위협하고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농민 기만입니다. 송미령 장관은 사퇴가 답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예, 위원님.

○전종덕 위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화재로 인해서 45일째 멈춰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예,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노동자와 협력업체까지 관련된 사람만 2만 명이 넘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 제조업의 약 3%, 지역수출의 약 4.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체이고 한 해에 65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타이어업체 세계 14위 글로벌기업입니다.

광주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연간 4500억 이상의 생산 감소, 1551억의 부가가치 감소, 연간 2218명의 취업자 감소로 인해서 고용과 경제에 악영향이 크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기업이나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 대한민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광산구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가 있는데 저희가 살펴보고 만약에 다른 여러 가지 유용한 수단을 통해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 펼치시면, 검토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예.

○**전종덕 위원** 산자부장관님, 금호타이어는 함평 빛그린 산단으로 이전해서,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을 통해서 정상화를 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중국의 더블스타로 매각되지 않았습니까? 매각됐을 때도 정부가 주도했고 해외 매각 당시에 산자부에서, 산업은행이지요. 산업은행에서 설비 투자 명목으로 2000억 대출을 약속한 선례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전종덕 위원** 그래서 공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이전하는 데 약 1조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검토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BTS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문화 얘기하시는가요?

○**전종덕 위원** 예, 문화 얘기하려고요.

그러면 두 분 중 누가 답변하실지……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K-컬처 문화강국입니다. 문화강국의 새싹을 키우는 예술교육 강사들이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생계 위협을 받고 해고의 위협에 놓여 있고 학교 예술교육은 축소 위기에 있습니다.

예술강사 지원비 운영예산을 23년에는 문체부에서 547억을 잡았는데 그것이 24년에 258억으로 줄고 25년에 80억으로 줄었습니다. 23년 대비하면 무려 86%가 삭감됐어요. 예술강사 노동자들의 연봉이 23년에 1100만 원이다가 24년 예산이 삭감되면서 933만 원이고 올해는 310만 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거 310만 원 연봉으로 계산하니까 월 25만 8000원이에요. 가정도 있고 또 생활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임금이지요.

또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도 미가입돼 있어요. 이렇게 열악한 처지에서 BTS 지민과 같은 우리 미래세대들의 문화 일꾼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몰라라 해서 이렇게 열악한 처우에서 살도록 계속 해서야 되겠습니까?

학교 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운영비는 문체부가 그리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

고 있어요. 문체부가 예산을 삭감해 버리다 보니 교육청에서 50%를 불용 처리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26년 예산에도 예산이 안 잡히는 거지요. 그러면 4500여 문화예술 강사들은 결국은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예술교육도 이제 더 이상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서 세우지 않으면 정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4년도에 문체부에서 128억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깎았습니다. 학교 예술강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128억 예산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술인 강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나 사회적인 의미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술인 강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단지 이것을 국비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을 해야 맞는 건지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원래 충당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판단의 여지가 있는 사업이어서.....

사업 규모가 최근 이렇게 몇 년간 줄어 온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또 현장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니 예산소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역할 분담이 걱정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학교 예술교육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여기에서 계속 강사로 둘 게 아니라 직접고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깎아 버리면 당장 예술강사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 임금으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문체부에서 24년도에 세웠던 128억이라도 이번 추경에 꼭 세울 수 있도록 하고 26년에는 예산이 제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재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마포갑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아까 오후에 했던 질의, 첫 질의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에 있어서 교육예산에 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여러 질의 중에 근로장학금 1000억 삭감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게 학생들의 돈을 뺏는 게 아니라 불용돼서 어차피 못 쓰는 돈을 다른 데다 쓰는 거다라고 기재부차관님 말씀하셨지요.

차관님, 예산을 보니까 2024년 작년에는 약 15만 명 정도의 근로장학생 예산이었고 올해는 한 20만 명 정도 일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학기 끝나고 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옮긴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틀린 것 아니지요? 이 정도로 알고

계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정훈 위원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집행이 어렵다라고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차관님, 혹시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뭐냐 하면 학교에 근로장학을 신청하기 위해서 적격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나 지원하는 것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한 학생의 숫자가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의 학생이 지금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서 근로장학금에 일하고 싶다고 신청했습니다.

20만 명 예산을 잡아 왔는데 60만 명이 신청했는데 정부는 수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용될 가능성이 크니까 다른 데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수요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뭔가 잘못된 걸까요, 행정이 뭔가 잘못된 걸까요? 6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맞지요, 교육부차관님? 60만 명이 지원한 것 맞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원자 수는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지원자 수가 60만 명인데 20만 명 예산에서 지금 못 쓴다고 3만 9000명에 해당하는 1000억을 빼겠다 이 주장을 하시면서 수요가 없다, 이것은 제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지금 교육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차감을 당했습니다, 2조 6000억 원. 기계적으로 해당하는 2조 빼더라도 6000억 원을 삭감하셨어요.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지금 1000억 빼 가지고 다른 데 여러 가지 쓰고 소비쿠폰에도 쓰시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이 약 2000억 원 있어요. 이게 경기진작 목적 밑에 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이라고 2000억 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노후 냉난방기 보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대학생 근로장학금 줄 예산 빼서 노후 냉난방기 보수하는 것 대략 비슷한 금액이…… 이게 2배 가까이 됩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재명 정부가 소비쿠폰 굳이 주겠다고 하면 이런 거라도 세수 조정해서 저는 근로장학금을 남겨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교내의 근로장학금은 1만 30원, 교외는 조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다고 신청했는데 소비쿠폰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냉난방기 고치느라고 돈 못 주겠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면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지금 의문이 드는 게 60만 명이 신청했는데 실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게 한 14만에서 15만이다라는 건 저희가 교육부랑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확인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60만 명과 14만 명과의 간극 사이에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혹시 교육부에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아마 이 이후에…… 차관님, 시간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저도 들은 바로는 학교, 대학들에서 몇몇 근로장학생이 돈만 받고 이래서, 돈만 받아 간다라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관리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명의 이 학생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장학금을 신청하는데?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런데……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 이 예산을 지금 당장 빼서 아예 추가적인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없애는 것 대신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위원장 한병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근로장학이라는, 저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아 가는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후배 세대들한테, 대학생 세대들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60만 명과 15만 명의 간극 사이에 필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하면 제가……

○**조정훈 위원** 제가 다른 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1300억 또 그들의 보육료 5% 인상 1100억 이것 지난번 본예산 통과할 때 그렇게 기재부가 반대해서 통과 못 하고 또 민주당은 지금 목적예비비에 담아 두었다고 하는데 이것 이번에 집행하실 생각 있습니까? 아직도 반대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그 부분하고 관련된 전체적인 체계나 지금 당장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건 목적예비비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회의 의결 없이는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이니까요. 추경에는 비록 담지 않지만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저희가 약속한 거거든요.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육부차관입니다.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러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60만 명 정도의 수요가 있어서 그 수요를 고려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국회에서 반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때 논의가 됐을 때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당한 수준의 교내외 근로장학지를 찾아 가지고 그걸 발굴을 해 가지고 매칭을 시켜 줘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학하고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발굴을 했는데 1학기 때 저희가……

대학의 실제 연간 집행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행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1년 내내 집행할 수 있는 규모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0억이 불용되는

수준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본예산 편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취지를 반영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과의 협력관계와 실행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건 대학과……

금년에는 제도를 조금 더 많이 마련해 가지고 근로장학지를 조금 더 많이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하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금년에 집행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그 1000억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더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만 9000개의 일자리가 수백 개 대학에서 없다? 동의하기 어렵고요. 한번 나중에 개별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 의창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국무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임기근 차관께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과 또 예산 관련은 2차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조배숙 위원께서도 짚은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가 이번 추경에 보인다면 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1118억 원인데 원전은 0원, 제로라고 지적한 것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1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김종양 위원** 차관님, 원전 관련 산업 증액 제로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는 아니지요?

어차피 추경 관련 예산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장관 대행께서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신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런데 현재 23년도에 에너지 믹스상으로 봤을 때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4년도에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간극을 비교해 보면 원전이 가지고 있는 간극보다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간극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하여튼 정부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막대한 전력은 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원자력은 우리 국가 에너지안보와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과 국내 산업 기반을 고려해 보더라도 균형 잡힌 에너지정책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앞으로 정부가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원전산업도 육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으니 26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입니다.

○김종양 위원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2차 추경 예산안에서는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 과방위의 심의 과정에서 25년 예산 증액 의견 7억 원을 75억 원으로 일단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도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공 여부도 저는 원전·방산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우리 원전·방산의 메카가 어디인지는 잘 아시지요? 원전·방산산업의 메카, 창원입니다. 제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 창원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에 진행 중인, K-방산·원전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차질 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R&D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한테 미뤄 두다 보니까 어느 분도 답변하실 생각을……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방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전산업하고 관련해서도 기대효과 그리고 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현재 계획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 재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한병도 예.

○김종양 위원 오석환 교육부차관에게 질문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번 정부에서는 추경으로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챙기겠다고 했는데 일부 소외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에다 경제 여건도 어려워서 지금 매우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물론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께서도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위 소속은 아닙니다만 지역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간절한 호소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의 보육료 동결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채무 탕감까지 해 주는 그런 정부가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시대에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1656억과 무상교육 2681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논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김종양 위원** 그래서 특히 재정 당국에서 이번 추경 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도 원활히 논의가 돼 가지고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정훈 위원께서 교육위 예산이 최대 삭감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삭감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증액을 하면 교육부 예산 삭감 그런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 당국에서 이번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예산소위 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재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달서갑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榮夏 위원** 국무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기근 차관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진작을 위해서 저는 재정이 투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지난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화면을 좀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정부가 추경에 낸 거 보면 1차 지원금으로 8조 5000억입니다. 일인당 15만 원이고 차상위계층 30만 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차관님께서 어렵다고 했던……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어렵다 그랬는데 그때 처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인당 가구 수에 따라 다르지만 4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해서 지금 책정된 15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겠는데 일인당 15만 원을 지원금으로 책정하게 된 기준이 뭐니까? 어떤 기준으로 15만 원을 산출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1차·2차 재난지원금 때 이렇게 지급했던 그 수준들을 일단 참고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출 확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재정……

○柳榮夏 위원 중간에 말 끊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같이 고려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柳榮夏 위원 소비진작을 위해서 재정이 투입되면 경제유발 효과에 대해서 시물레이션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 추경을 하고 정부가 국회로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께 보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 소비진작 효과는 얼마나 되냐’ 이렇게 질문이 혹시 있는 적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제가 이렇게 직접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대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柳榮夏 위원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효과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했던 연구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나왔고요. KDI에서 한 거는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의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현재 지금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물레이션 한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 시물레이션을 해 본 적은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를 갖고 저한테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1차·2차 재난지원금……

○柳榮夏 위원 잠깐만 차관님, 제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1차 지원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지금 가급적이면 국회에서 의결된 뒤에 빨리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柳榮夏 위원 가급적이면 국회가 통과되고 나면 언제 1차 지원 시기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국회 통과일 이후부터 2주나 20일 이내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1차가 지급되고 난 다음에 2차는 얼마 뒤에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차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건보 자료를 활용해서 분류하는 작업 그리고 소득에 대한 판단 작업이 끝난 뒤가 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국민들한테도 일률적으로 15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주장하는 일반 국민들, 지금 차관님이나 저를 비롯해서 이 15만 원이 없어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은 혹시 예산을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재 지금 정부안에 계상된 액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柳榮夏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표를 보면 2차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1차가 지원되고 난 다음에 1년 4개월 뒤에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왜 2차 지급 시기를 여쭙봤냐면요 만약에 1차 지원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이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난 다음에 경제유발효과를 아마 검토할 것입니다.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건보 자료를 검토해서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건데요. 그게 만약에 6개월이 넘어서면 저는 지금 긴급하게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마무리……

○**柳榮夏 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재정을 소비진작을 위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꼭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서 그 경제효과만 있는 게 아닌 것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경은 아시다시피 긴급하고 불요할 때 쓰는 겁니다. 예산은 한정되기 때문에, 저보다 예산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는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람, 저는 15만 원 안 받아도 살 수 있어요. 이재용 삼성 회장도 15만 원 없어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꼭 줘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급 시기가 만약에 6개월 넘어서면 지금 추경에 올리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당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시물레이션 해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다시 예산을 좀 쓰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평택시를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외교부차관님, 우리 외교부 책임하에 APEC 정상회의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제가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또 의원외교 팀장을 나름대로 맡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K-문화의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될 것입니다. 또 변화하는 세계적 상황 속에서 세계평화를 다시 이끌어 내는 역사적인 무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세계 정상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문화행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동의합니다.

○**이병진 위원** 외교부에서 위촉한 양정웅 예술감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알지 못해서……

○이병진 위원 알지 못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양정웅 예술감독……

○이병진 위원 외교부가 APEC 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고 총괄 부처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게 현재 외교부의 모습이라고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그리고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 만찬 공연 등 예술감독으로 활약하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외국의 음악을 틀어요. 우리 K-문화, 케이팝으로 대변되는 우리 음악이 있는데 런던올림픽 폐막식 ‘이매진(Imagine)’을 또 갖다 틀었습니다.

그리고 PPT 두 번째 같까요.

홍물스러운 스프링 모양의 조형물에 대한 논란 등 아쉬운 의견도 적잖게 있습니다.

양정웅 감독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촉됐는지 전혀 몰라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이병진 위원 그러면 추경 끝나기 전까지 정확하게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가 지적받는 겁니다.

우리 의원실에 말이지요 예술감독 위촉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PPT 보겠습니다.

1월 3일 예술감독후보자 4명 중 1명만 심사에 참여를 했는데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같까요, PPT 네 번째.

4월 11일 5명의 후보자 중 양정웅 감독님이 최종 2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위촉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관한 공문이라든지 회의록이 없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추천위원 명단과 평가 기준까지 자료 요구를 해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까 모두에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차관님 동의하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문화행사의 총괄과 업체 선정까지 외교부가 주관을 했어요. 그런데 감독후보자 지명은 문체부가 유독 주도를 했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의 책임 부처가 외교부인데 문체부가 주도한 게 감독 선정 건입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감독 선정 관련 모든 공문 및 회의록, 추천위원의 명단 및 의견서, 감독후보자 평가 기준 및 심사 결과 등 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일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 끝날 때까지 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체부장관님, 양정웅 감독 위촉 관여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지요, 장관님이 직접 위촉했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문체부에서는 여러 사람 추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요. 차제에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PPT 다섯 번째 볼까요.

장관님과 셰익스피어 연극 ‘페리클레스’, 불멸의 희곡 ‘파우스트’ 등 십수 년을 넘게 호흡을 같이해 오셨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아주 깊은 친분을 갖고 계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14년 뉴욕에서 한 달 가까이 함께 지내면서 영혼의 동지 같은 예술적 파트너라고 이렇게 과시를 했습니다, 스스로.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양정웅 감독님께서 APEC 예술 감독으로 위촉된 과정에 장관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국민 앞에 자신하고 당당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저 역시 양정웅 감독님의 콘텐츠를 높이 평가합니다.

APEC 정상회의, 21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대행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투명성과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입니다.

장관님, 국민 앞에 자신했으니 연관된 것이 없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울주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유인촌 장관님, 조금 전에 하신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다른 뭐 답변하실 것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APEC은, 문화부의 입장은 옆에서 조언하는 입장 정도고요.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서범수 위원 산업부장관님, 이번 추경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사업비 3261억이 책정돼 있지요. 그래서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30만 원 이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2016년하고 2020년에도 했는데 평가가 어땠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제품이 1등급 고효율로 나오고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제 1석 3조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국내 가전업체들 수요진작을 좀 할 수 있고, 특히 이런 고효율 기기로 바꾸게 되면 전력 소비 감축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인증제품 중에 73%가 외국산이다. 물론 국내 브랜드를 달고 있지만 외국에서 거의 73%가 들어온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마 중국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범수 위원 중국 안에…… 결국 대부분의 경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나왔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돕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내 기업들 그다음에 지방 그리고 중소·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서범수 위원** 그 설계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일지는 몰라도 만드는 데는 중국이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만드는 곳은 중국인데……

○**서범수 위원** 예,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게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만드는 공장들이지요.

○**서범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체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10%를 한단 말이에요? 300만 원을 쓰면 예를 들면 30만 원 환급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것 300만 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보통 우리 취약계층에서 보면 좀 크다. 오히려 30만 원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낮은 가격의 어떤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 10만 원 정도 내지는 20만 원 정도를 낮추면 오히려 이것에 훨씬 수혜를 받는 우리 취약계층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취약계층에서는 다른 그런 식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태의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들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취약계층……

○**서범수 위원**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해도 30만 원보다는 오히려 조금 낮춰서 하는 게 수혜를 받는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을 것 아니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알겠습니다. 그게 효과가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확인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지금 시스템, 3000억짜리 사업에 시스템 구축비만 161억이 든단 말입니다.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 그런데 시스템 언제 구축이 됩니까? 언제까지, 예를 들면?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서 몇 차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업은 빨리 연내로……

○**서범수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든다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이게 과연 빨리 될 수 있겠느냐, 이것 적어도 2~3개월 정도는 더 걸릴 것 아니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대한 그 시간을 좀 당기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추경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추경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이 어려우니 우리 국민들께 뭔가 조금씩

라도 드려서 민생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게 지금 예산 만드는 데 걸리고 이것을 또 만들어서 시스템 구축하는 데 얼마 걸리고 이게 자꾸 기일이 연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추경으로서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 사업은 저희가 앞서서 해 본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효과도 높고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 사업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새롭게 또 합니까? 어떻습니까, 시스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2016년하고 20년에 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했는데 이게 계속 상시화되게 되면 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반복이……

○서범수 위원 그런 부분 좀, 그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이것을 배달하는데, 전달을 하는데 체계에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조금 감소를…… 아까 민생회복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지거든요. 그렇고.

소방청장님, 나오셨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서범수 위원 이번에 국립소방병원 66억 원인가를 증액한 것 같아서……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6월 21일 날……

○서범수 위원 그런데 소방병원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소방병원을 만드는 이유는 소방에……

○서범수 위원 1분만 더요.

○위원장 한병도 예, 마무리……

○소방청장 허석곤 일단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서범수 위원 결국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게 1번이고 두 번째 공공의료서비스잖아요.

○소방청장 허석곤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1번의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에 만들고 있다는 말이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어려울 건데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걸 다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어떡하면 소방공무원이 그 병원

을 이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국립소방병원이라 해 놓고는 주민들만 쓸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 실질적으로 국립소방병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소방청장 허석곤**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해서 대책을 잘 수립을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문체부장관님, 아까 양정웅 감독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도 감독을 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이분이 또 그때는 문재인 정부 사람하고 가까웠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썽요, 그런 것하고는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나름대로 자기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조배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제가 일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을 딱 그 사진만 틀어 놓으면 평생 저하고 일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수십 명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한 사람이.

○**조배숙 위원** 제가 볼 때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감독도 했고 한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떤 한 정치세력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수주를 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교육부차관님, 아까 하던 얘기를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제가 하다가 끊겼는데요.

중국에서는 AI 인재 양성에 우선 정부뿐만 아니라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대형 테크기업 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해 가지고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학연 이렇게 하면 좀 관료적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교습법에 매몰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은 아주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걸 자꾸 시도를 하니까 기업과 좀 협력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2000만 명 대상으로 시험을 친답니다. 그레 가지고 상위 0.5% 영재, 보니까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10만 명을 직접 선발해 가지고 70개 영재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고교 진학 때 소년반제도를 통해서 이공계 천재들을 고등학교 때 아주 좋은 선

생님을 붙여서 대학교 수준 교육으로 끌어올립니다. 그 결과 지금 실리콘밸리의 AI 연구실 절반 이상이 중국 출신 인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배숙 위원** 인도는 또 어떻습니까? 국립교육기관인 인도공과대학 졸업생들이 구글, 애플,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도 되고요 또 실리콘밸리에 자리잡은 사람들도 많고.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에 비하면 아직 한참 먼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에 무슨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과학고, 이런 일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전국 단위의 고도화된 선발 육성 체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마저도 수월성 교육에 대한 논란에 간혀서 무늬만 영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교육의 평준화를 통해서 국민들 교육의 보편성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평등만 외치는 교육은 결국 국가경쟁력과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이것을 반성하고 새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난 5월 30일 날 민주당의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하자고 제안한 것 아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배숙 위원** 수월성 교육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은 단지 교육의 기회를 가로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근본에서 흔드는 행위입니다. 저는 지금 AI 인재 양성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조차도 국가 차원에서 수학·정보영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차관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배숙 위원**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기본적으로 전체 체계에서 수월성과 그다음에 보편성과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발전해 온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첨단 인재……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특히 AI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느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범위 내에서 고급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새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관계부처하고 이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관한, 인재 양성 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교육체계 내에서 이 특별한 고급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관한 그러한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한 분야별 인재 양성하는 과정을 지난번에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해서 디지털 인재 양성에 관한 그런 체계를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첨단 인재로서의 AI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는 지금의 수요에 맞춰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1분만……

○위원장 한병도 예, 1분 마무리.

○조배숙 위원 저는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중국은 앞서가고 있거든요. 지금 기술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생회복 지원쿠폰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행안부장관님이신가?

그런데 왜 자꾸 쿠폰만을 고집합니까? 체크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꼭 쿠폰만을 고집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아니, 위원님, 사용 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불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신용카드 다 가능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꼭 저는 상품권 그런 것만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저희가 홍보를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또 이게 지방비 매칭하게 돼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8 대 2입니다. 서울……

○조배숙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것 하기 전에 17개 시·도지사하고 회의를 하면서 또 의견을 들어 보셨나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 위원 언제 들으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아까 기재부차관님 말씀 주셨었는데요. 6월 19일 국무회의 하기 전전에 시도 부지사, 부시장들 의견 듣고요 기초실장 의견 듣고 그렇게 세 차례 정도는 사전에 들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어떤 의견이던가요? 지방의 재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물론 지방의 어려운 여건 같은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국가와 지방이 함께 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해 나가자는 식으로 설득을 하고 양해 구하고 같이 잘하자는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잘하자고만 해서 됩니까?

지방에다가 돈이 필요하면 다른 형태로라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 하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이제 여건……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곽상언·김기웅·김성희·김승원·김용만·김한규·박민규·안도걸·유영하·이강일·허성무·김상

육·임종득·배준영·조정훈·김종양·김위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하·김종양·김위상·조정훈·조배숙·조지연·조계원·임미애·김윤·이재관·이병진·송기현·김승원·윤후덕·김성희·김한규·김상욱·이소영·박형수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 직원 여러분, 경위분들과 속기사분들 그리고 국회방송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하는 위원 있음)

김대식 위원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양치질 좀 하고 왔는데……

○**위원장 한병도** 두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정책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2분 산회)

○출석 위원(43인)

고민정	곽상언	김기웅	김남근	김대식	김상욱	김성희	김승원	김용만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한규	노종면	박덕흠	박민규	박형수	서범수	서왕진	송기현
안도걸	유영하	이강일	이병진	이성권	이소영	이수진	이재관	임미애	임종득
장동혁	전종덕	정점식	정진욱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정훈	조지연	최기상
한기호	한병도	허성무							

○출장 위원(2인)

박희승 천하람

○청가 위원(1인)

조은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형진

입법심의관 이동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제2차관 임기근

차관보 윤인대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예산실장 유병서

교육부

차관 오석환

예산담당관 김아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제1차관 이창윤

제2차관 강도현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조정기획관 문인석

통일부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이두희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차관 이희완

기획조정실장 김주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정책기획관 안창용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재정관리국장 임호근

환경부

장관 김완섭

차관 금한승

정책기획관 박소영

고용노동부

장관직무대행 권창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현옥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기획조정실장 이시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차관 김성섭

소방청

청장 허석곤

차장 이영팔

기획조정관 오승훈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기획조정관 김기한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고민정(교) 곽상언(산) 김남근(정) 김상욱(행) 김성희(행) 김승원(정) 김용만(정) 김 윤(보) 김한규(산) 노종면(과) 박민규(과) 박희승(법) 송기현(국토) 안도걸(기) 윤후덕(외) 이강일(정) 이병진(농) 이소영(국토) 이수진(보) 이재관(산) 임미애(농) 정진욱(산) 조계원(문) 조승래(기) 차지호(외) 최기상(기) 한병도(행) 허성무(산)	더불어민주당	2025. 6. 27.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기웅(외) 김대식(교) 김위상(환) 김종양(국토) 박덕흠(행) 박형수(산) 배준영(국토) 서범수(행) 유영하(정) 이성권(행) 임종득(국) 장동혁(법) 정점식(국토) 조배숙(법) 조은희(문) 조정훈(교) 조지연(환) 한기호(국)	국민의힘	2025. 6. 27.
김재원(문) 서왕진(산) 전종덕(농) 천하람(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25. 6. 27.

○의안 회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7)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8)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9)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0)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1)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2)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3)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4)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5)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6)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7)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8)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9)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0)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1)

2025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2)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3)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4)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5)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6)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7)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8)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9)

이상 23건 6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됨

○예비심사보고서 송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7)

6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토교통)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송부됨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4)

6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외교통일)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됨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9)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0)

이상 2건 6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송부됨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9)

6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국토교통)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됨

○예비심사기간 통지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이상 2건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정보 제외)의 예비심사기간을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이상 2건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정보)의 예비심사기간을 심사의결 전까지로 지정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7)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의 예비심사기간을 6월 30일 09시 30분까지로 지정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음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8)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9)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0)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1)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2)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3)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4)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5)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6)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7)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8)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9)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0)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1)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2)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3)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4)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5)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6)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7)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8)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9)

이상 22건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외교통일·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의 예비심사기간을 6월 30일 09시 30분까지로 지정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음

○통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7)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8)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9)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0)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1)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2)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3)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5)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6)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7)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8)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1)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2)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3)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4)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5)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6)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7)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8)

이상 19건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소관 상임위원회(정무·기획재정·교육·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는 예비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송부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